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운동사랑방



의정부 시민상회
가장 직서인

의정부 시민상회
가장 직서인

의정부 시민상회
가장 직서인

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
(제538호 - 제555호)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붙쳐벌>

80년 광주 5월은 영원하다.
부정과 억압으로부터
인간해방투쟁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영희-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인권·사회·종교단체는 11월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사건 진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대표로 선임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선거 시기마다 터져나오는 공안조작 사건의 재판"이라며 "민주세력의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함운경씨의 처 김미정씨는 "안기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도 안 재우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충렬씨등의 담당 변호인 윤기원변호사는 "위낙 가당치 않은 사건이라 안기부 수사팀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만 하지 않는다면 안기부의 의도가 좌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민련 20명을 구속시킨 것도 앞의 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다시 판을 짜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참가단체를 확대시키고, 진상규명, 법률지원, 지속적인 안기부 항의방문,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강경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30일 오후2시 과천 종합청사앞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추구와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주최로 단위노조대표와 노조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집회장소를 종합청사 운동장에서 도로로 옮기려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아선 전경들의 몸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 배석범 건설노련위원장은 "김영삼정권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된 제3차개입금지조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권위원장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허영구부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12월1일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강도 높은 투쟁방침을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제3차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 전면 개정 △권위원장 등 노조지도자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5·18 학살자 전원과 뇌물을 제공한 재벌 기업인의 구속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권위원장이 이감된 서울구치소로 항의방문을 갔다.

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을 정부의 허락없이 밀입북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방북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그동안 통일운동 열망을 가지고 활동해 온 점과 민주화의 기여한 점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장로의 석방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 동료 등 30여 명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중이던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허혈성 심장질환등의 치료를 위해 일시 구속정지 처분을 받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했다.

<바로 잡습니다>

11월30일자 '5.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진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헌법소원은 소멸됩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0회)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강사: 이창호교수(경상대, 법학)

- 일시: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광주는 전두환·노태우를 학살자로 기억한다
5.18특별법 명동성당 농성 136일째

스스로 하도
12월 15일
(전화) 715-9185

<인권하루소식> 95년 11월분 총목차(516-537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516	11/1	1	민가협,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 내무부장관·경찰청장 고소/여성단체,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민자당사 항의집회/한국교회협의회 5.18특별법제정 촉구 특별기도/주요공판안내
		2	교육단체등 교육개혁법 공청회 열어,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요구/전국연합, 서대문경찰서장등 불법감금 혐의 고소/주간인권호름
517	11/2	1	5.18비대위,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특별법 노태우씨 구속촉구/전국연합, 철야농성 돌입 매주 대규모 집회 계획/민주노총 비상결의대회 근로자파견법 반대 노태우씨 구속촉구/노운협 의장등 긴급구속, 홍계동 대공분실 조사
		2·3	<지상중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노씨 전 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518	11/3	1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민자당, 파견법 유보발표 민노총 전면철회 요구/인천연합, 부평경찰서 집회불허로 고소 예정/참여연대, '전직대통령여우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청원
		2·3	<지상중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행사와 동정
519	11/4	1	이부영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행 선고 상고포기/5.18비대위 오늘은 국민행동의 날, 전국에서 학살자 처벌 시위
		2	<5.18문제와 관련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들>-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해야/엠네스티 긴급행동, 한국정부에 19명 사형 항의/노운협, 3일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성명/경남도경, 창원대 총학생회장 국보법 위반혐의 연행/인권간행물
520	11/7	1	경찰 전 전대협 간부등 3명 긴급구속, "부여 간첩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아/전태일 25주기 추모식, 이번주 영화시사회/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주요공판안내
		2	<특별기고>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오완호/주간인권호름
521	11/8	1	민주노총(준)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 명동성당 농성돌입/청년단체들 철야농성, 불고지피 구속 정치공작
		2	<특별기고1>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박종석/원주지역 단체들, 홍중희씨 이감 서명운동 전개/영화 전태일 시사회 연기
522	11/9	1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완료/철거민연합, 노동탄압 연대성명 제안
		2	<특별기고2>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박종석/5.18비대위 11일 전국2차 국민행동 돌입, 비자금·5.18문제 결합/허인회씨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
523	11/10	1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 인지 강력부인/민가협 목요집회, 간첩말만 믿고 구속 가족증언/불고지피란
		2	아시아위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비난/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성명/행사와 동정
524	11/11	1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국경하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제2차 국민행동의 날, 중요공원 집회
		2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씨 석방, 허인회씨 구속영장/김귀정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으로 확정/대우조선 정월화씨, 회사 업무파다로 자살/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개선 촉구 성명/민언협, 문화일보 직장폐쇄 철회 촉구/인권간행물
525	11/14	1	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9명 사형집행, 한국민간단체들 강력항의/대법원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주요공판안내
		2	<현장 스케치>청년 전태일 영화로 부활하다/주간인권호름
526	11/15	1	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 전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를 것"/5.18비대위, 21일부터 매일 특별법 제정 요구 국회집회/청년단체, 불고지피 구속자 석방촉구 규탄집회/불교인권위, 12월10일 장기수 송환논의 제안
		2	해고자지원대책위 LG그룹 해고자 복직의면, 복직 촉구서 전달/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자료>-민주노총 창립선언문/계훈씨씨 병원입원, 불교인권위 치료비 모금

<인권하루소식> 95년 11월분 총목차(516-537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527	11/16	1	부여간첩 검출 혐의 구속 박종열·김태년씨, 혐의사실 강력부인/학교급식 연대회의,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받아 내무부장관/일본양심수후원단체들, APEC기간동안 양심수 석방 단식농성
		2	<해설>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제삼제도-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주인 스스로 의정감시를,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
528	11/17	1	허인회씨 현장 부재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등 제시/민변 안기부 변호인 접견권 방해 규탄성명/전주교 사제 단식 돌입, 시국미사 정부 도덕성 질타
		2	<자료>김동식씨 진술과 허인회씨 알리바이 비교-누가 진실을 말하는가?/행사와 동정
529	11/18	1	안기부 생사탐집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목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2	허인회씨 구속적부심 기각/경기도경, 예국동맹사건 7명구속 1명수배/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늦봄 통일상 후보추천 받아/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인권간행물
530	11/21	1	안기부 '국민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종열·김태년씨 일주일째 잠 못자고 서서 조사받아/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 노태우씨 차별대우철폐 5.18특별법 제정촉구/주요공판안내
		2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여연·불교인권위, 북한수재동포 성금 전달/외무부, 나이지리아 사형집행 유감표명/경찰, 동두천 주민 폭행 미군 의례적인 조사만/주간인권호름
531	11/22	1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종열씨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돼 활동/엠네스티, 국보법 폐지 박종열씨등 석방요구/수배 장진성씨 구속, 진보련 13명 긴급구속
		2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열려/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5.18학살과 비자금은 한 뿌리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국회 매일집회 시작/대선자금 공개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
532	11/23	1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민변, 5.18헌법소원 재판 부 기피신청, 정경석씨 신군부 협조/유가협 서울구치소 시위,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5.6공의문사 진상규명 요구
		2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지적,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세계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여성단체 다양한 행사마련/전국연합등 안기부 시위, 고문조작 중단 촉구/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533	11/24	1	권영길 민주노총 의장 불잡려, 민노총 방배경찰서 앞 석방요구 농성/종교 4단체, 5.18 특별법제정 대선자금 공개촉구/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5.18특별법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2·3	<해방·분단 50주년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민가협 목요 집회, 로스 다니엘씨등 3명 0.75명 감옥체험/행사와 동정
534	11/25	1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각계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2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엠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요구/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불, 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안기부 박종열씨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 민가협등 항의시위/전남도경 영장재발부, 진보련 6명구속/일본 한국정치법단체들, 양심수 석방 호소
535	11/28	1	특별제 도입없는 5.18특별법 무의미, 전국연합 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검찰사과 강력촉구/박영생씨 재판 증인진술, 공무방해 성립어려워/가락본동 철거민 쌍용본사 항의방문
		2	안기부 김태년씨 무전기 발견모체, 12일째 물증없이 자백만 강요/불교인권위, 계훈씨씨 병원비 1천1백여만원 전달/주간인권호름
536	11/29	1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 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촉구/민변 현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어려워/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전두환씨 반성하라/여성장애인들 모임, 스스로 빛장 열기다짐
		2·3	<자료>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공유
537	11/30	1	이덕인씨 맞출 목인 제 변사체로 발견, 경찰 강제부검 후 '사인-의사'로 밝혀/안기부·경찰,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29명 긴급구속
		2	5.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현재 5.18선고 무산/<5.18특별법 제정 공청회>-누적된 과거역사 청산위해 특별제 도입의견 일치
		3	<자료>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범민련연행자 명단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지난 7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등, 연대회의) 이기범교수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96년 1월에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다뤄질 핵심사안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연대회의에서는 이기범(숙대 교육학과), 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해 민간단체 보고서에 대한 발언 기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유엔회의 참가결과 보고와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갖는다.

민간보고서, 「신뢰할만한 정보 담았다」 평가받아
지난 22일 오전10시45분 시작된 실무분과 회의는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Hora Eufemio(필리핀) 부의장을 비롯해 아동권리위원

회 소속위원들은 "한국 NGO보고서가 신뢰할 만한 정보와 구체적 통계를 담았고 실천가능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모임에는 Hora 부의장 외에도 Hoda Badran(이집트), Thomas Hammarberg(스웨덴), Judith Karp (이스라엘) Yuri M. Kolosor(러시아) Marta Santos Pais(포르투갈, 한국담당위원)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관(UNHCR) 관계자 1인, 유엔인권센터 담당관 2인, 연대회의의 3인, 유니세프 유럽담당관 1인이 참석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측은 보고서만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 유니세프 유럽담당관이 대신 발제했다.

아동을 주제로 인식 못해 회의진행은 의장의 개회선언, 진행절차 설명, 유엔인권센터와 유니세프의 보고, 연대회의 이기범교수의 발제와 한국보고서 관련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한국담당위원 Marta Santos Pais씨는 한국정부가 제9조 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제도), 제40

조 2항(상소권)등 세 가지를 유보조항으로 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을 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무부 내에 인권과는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NGO와의 협조 부족 △중앙조정기구의 부재 등을 들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이 어느 정도 정채과 법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아동을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업부담으로 인한 자살률, 아동과 교사의 자유제한, 최근의 교육개혁 내용,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유교적 문화적 가치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악영향 △학교체벌 △아동학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입양특별법과 성폭력특별방지법의 제정을 변화로 들었고, 아동학대에 있어 전문가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민간보고서가 최신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관련 지표 전무하다
이에 대해 노혜련교수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했다. 민간보고서에 이용된 자료도 산발적으로 보고된 것을 모은 것이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아동관련한 공식 사회지표가 없다"고 답했다. 노교수는 "가족내 아동은 소중한 존재이나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해 생기는 결혼아동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이런 아동들의 권리와 이들에 대한 사랑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계자는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보고서 역시 난민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보고서에서 혼혈인의 경우 무국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 점은 솔직했다고 평가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0회)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강사: 이창호교수(경상대, 법학)
· 일시: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5.18특별법 명동성당 농성 137일째
5.18특별 특별검사제 도입 및
공안탄압 규탄결의대회
오늘 오후2시 30분 종묘공원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 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 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명예와 정의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폐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진정된 민주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이같은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민 4백57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보법의 폐지에 22.5%가 찬성하였고, 개정에는 33.5%, 존속에는 43.8%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8.5%가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 인권침해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다음호에 이 조사결과를 자세히 실을 예정이다.

안기부 박총렬씨 변호인 접견 불허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등으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박총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의 변호인 접견이 이들에게 계속 불허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월 30일과 1일 이틀동안 변호인 접견은 안기부측이 "현장검증을 갔기 때문에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되었다.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등 비난성명

5.18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취하자 곧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구성, 수사에 착수한 것은 특별법 도입을 막기 위한 졸렬한 태도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은 1일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 "검찰은 재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 취하에 즉각 동의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음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도 "검찰은 이미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를 운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민 절대 다수의 여망을 초도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환 서울지검장이 지난 80년 국가보위임법위원회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들어 "쿠데타 세력에 기생하여 일신의 영욕을 추구한 장본인이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덕인씨 사인규명 촉구 노운협·KSCF 성명

11월30일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KSCF, 총무 박종렬)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회장 김영곤)는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29, 양하지마비, 서울대중

퇴)씨 사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노운협과 KSCF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노점상과 철거민들의 투쟁을 폭행과 구속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구타 살인 은폐공작과 민중운동 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이덕인씨는 지난 11월 28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서 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11월29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장애우연구소)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11월 제작·방송한 캠페인 "일반사회와 장애인을 분리, 편견을 강화시켰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장애우연구소는 28일 손보협에 보낸 공문에서 이 방송에서 사용한 '병어리'라는 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비인권적

인 용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측은 일 반을 상대로 하는 방송에서 특정 소수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광고제작을 담당한 손보협 홍보실은 "병어리란 말은 압박이를 켜지 않는 차를 추상적인 표현이지 고 의로 장애인을 비하시키지 위한 것은"이라며 "이 캠페인 광고가 11월로 끝나 사과방송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우연구소 조문순간사는 "공익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할 방송에서 병어리, 병신, 소경등 장애인을 비하시켜 지칭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소수를 배려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방송내용>
남:저는 가끔씩 병어리차들을 보죠. 아무 신호없이 차를 막 몰러다구요. 왜 압박이를 안켜실까요?. 압박이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대화인데 말이죠.

행사와 동정

- '95 한국정치연구회 심포지엄-해방50년, 한국정치의 구조와 동향
· 2일(토) 오전10시30분/· 중앙대학교 본관3층 대세미나실
· 주제발표:한국의 산업화전략:성장과 배제의 정치경제(김해진)/북한식 발전모델: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한계(김연철)/김정일 후계체제와 북한의 지배인맥(김용현)/지배당론을 통해 본 해방50년의 한국정치(박상훈) 등.
· 주최:한국정치연구회(☎333-3219)
- 사회과학 학술세미나-아시아지역 노동자와 여성의 인권보장
· 2일(토) 오후1시30분/· 서강대 이나시오관 소강당
· 주제발표:아시아지역 인권보장의 특성 및 실천방안(이상면)/아시아지역의 외국인노동자 대우문제(신운환)/아시아지역의 남녀불평등의 개선문제(김선옥) 등.
· 주최: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705-8232)
- 박종만 열사 11주기 추도식
· 3일(일) 오전12시/· 일산 기독교공원 묘지
· 출발지:3일 오전10시 신촌기차역 광장
· 주최:윤수노보, 박종만추모사업회(☎784-3886)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 참가보고 및 기자회견
· 5일(화)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
· 주최: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715-9185)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당국은 헌법과 국제법이 부과하는 정부의 책무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된다.
*법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전향”을 거부한 수인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행사했다고 조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행정조항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절차로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의 필요성

*모든 수인들을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인들은 변호사 접견권과 묵비권을 포함하여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

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의자에 대한 책임당국과 혐의자 심문을 관할하는 당국은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수인들은 공개된 구금장소에만 수감될 수 있으며, 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친지와 변호사,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든 범법행관들이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범법혐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결과로 얻은 수인들의 진술이 실제로 묵인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인권침해 희생자들이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정부는 수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신뢰와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구조가 밀 받침되지 않는 법률조항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들은 공평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조사되

야 하고 이전에 제기된 주장이든 아니든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를 책임지는 기구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책임

자로 입증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고 희생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보고가 있으면, 수년동안 유죄로 복역한 수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외부와 단절된 상황의 고문과 강요된 자백에 근거한 유죄의 사례는 독립적인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

◇ 인권간행물 ◇

- 자료집-청소년 노동자의 실태와 보호방안-진보민청(☎ 822-5817)
· 주요내용: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개념정의/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교육실태와 개선방향/청소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복지/독일 청소년노동자 보호법 등. 63쪽.
- 자료집-5.18특별검사제 어떻게 할 것인가?-5.18 비대위(☎ 747-4364)
· 주요내용: 5.18특별법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안병욱)/특별검사제도의 의의와 사례(김민배)/특별검사제도의 쟁점과 방안(차병직)
- 「빈민진영 통합소식지, 창간준비1호-도시빈민협의회(☎ 3673-3031)
· 주요내용: 올바른 빈민진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왜 우리는 세계주거회의에 참여를 준비하여야 하는가?<자료>-분당주거지 개선에 관한 법률(안) 요약 등. 45쪽.
- 자료집-북경여성대회 참가 보고대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주요내용: 세계여성회의의 비정부 포럼 참가기/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장애인 기관/유엔의 여성장애인 보고서/여성장애인의 권리 등. 75쪽.
- 자료집-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참여연대, 전국민보련(☎ 796-8364)
· 주요내용: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김종해)/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한숙희)/보육사업현황과 정책방향(배병준) 등. 21쪽.
- 국제엠네스티 한국보고서-국제적 기준, 법 그리고 실제: 인권개혁의 필요성
· 주요내용: 국보법에 관한 유엔기구들의 주장/국제엠네스티의 주장/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의 필요성/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조치의 부족/국제엠네스티의 권고사항 등. 62쪽.
-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음, 오름출판사 발간.
· 주요내용: 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적 문서/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 등. 182쪽. 값 6천원.

<p><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엠네스티-</p>	<h1>인권하루소식</h1>	<p>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p>
---	-----------------	---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씨도 접견 거부당해

지난달 15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지 5일 만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던 지난 11월30일, 12월12일에 걸쳐 박씨는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중구청 옆 대공상당소 등지로 끌려다니며 고문을 받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고 허위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4일 박씨를 접견한 윤기원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에 의해 밝혀졌다.
윤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11월30일 이후 3일까지 이른바 부여간 철 김동식이 주려한 무전기와는 관계없이 노동당 입당 사실을 불라고 추궁받았다 한다. 안기부 수사내용이 다시 한번 바뀐 것이다. 즉, 회합동신회의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고, 검찰 송치 기간이 6일로 다가오자 안기부는 이제까지의 수사방향을 바꿔 박씨의 반국가단

재 가입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능내리에서는 한밤중에 옷을 벗기우고, 16명의 수사관들에게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고, 중구청 옆 안기부 대공상당소에서는 6-7시간 동안 정신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윤변호사에게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수배 중인 김철환씨와 관악산에서 노동당 입당을 결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안기부에 구속된 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도 4일부터 안기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어 관계자들이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결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소속 회원 3백여명은 2일 안기부를 항의방문, 박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고문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에도 안기부를 항의방문한다.

법민련 강희남씨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
지난 11월29일 경찰에 의해 구속, 장안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남 법민련 상임의장 강희남(75)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천재(65) 법민련 부의장도 11월30일부터 ‘고령의 통일인사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항의, 단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안기부는 지난달 29일 법민련 관계자 29명을 구속하여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4일 오전 9시30분경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

부장 고에순(2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법민련 광주전남지부의 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이후 수배를 당해왔다. 고씨는 현재 입신 8개월째다.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신석, 5.18공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정치적인 당리당락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괴 몇사람만 처벌한다거나 서면조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5.18비대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국민단일안을 발표한다. 이 법안은 그간 국회에 입법청원된 제안안과 야당안을 검토, 새로 작성된 최종안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 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상복 등, 공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전 10시30분 내곡동 안기부 항의방문에서 박충렬·김태년씨 석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머느리등 피해자 가족들은 집견을 요구하며 안기부 청사안으로 들어가려했으나 서초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주연(전대협동우회 정책기획부장)씨는 "박충렬, 김태년씨에 대해 아무런 혐의를 잡지못하자 간첩접선내용을 밝히라고 고문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간첩조작의 중단"을 요구했다.

5일 현재 구속 21일째를 맞고 있는 박충렬(36)씨의 부인 남향숙(32)씨는 안기부 지난 30일(목요일) 이후 변호사와 가족들의 집견도 거부하고 토요일 집견 약속도 안기부는 어겼다며 "남편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입당식까지 가겠다는 자술서를 쓴 것은 분명한 강압 고문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변호사 접견결과 박씨의 어깨와 가슴 등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고 박씨 자신 또한 안기부원들이 관악산과 모란공원 등에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래 스텝(불교인권위)은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구시대적 좌경용공 간첩조작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는 이후 공동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며 지속적인 안기부 항의방문을 계획 중이다. 또한 조작간첩진상을 밝히는 홍보지 50만장과 천주교 인권위가 제작한 조작간첩 비디오 테이프를 각 민주단체와 인사들에게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안기부, 박충렬씨 의사 검진 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려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중구 박사와 함께 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변호사는 "박씨가 4일의 집견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실제 얼굴과 겨드랑이 등에 피멍과 찰과상이 있어 이를 의사에 보여 고문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부인 남향숙씨는 "의사가 검진하면 안기부의 고문이 드러날 것 같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렬씨와 김태년(32)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된다.

이인영씨 구속정지 허인희씨 8일째 단식

지난달 6일 이른바 부여 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이인영(32) 「전대협동우회」 회장이 5일 오후9시 구속정지로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로써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운경(33), 허인희씨 등 2명만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허인희(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는 "김동식을 만났다는 시간에 국회의원회와 당 당직자들을 만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까지 제출했는데도 김동식의 말만 믿고 불고지 혐의로 계속 구속하고 있다"며 지난 11월28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허씨는 김동식씨와의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이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단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 일본 대사관에 편지 전달 수녀1천6백여명 평화행진

전국 68개 가톨릭 수도회 수녀 모임인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회장 김에라 수녀)소속 회원 1천6백여명은 4일 오후 2시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무라야마 총리에게 편지와 1만7천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파괴된 여성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민간 위로금이 아닌 정부의 합당한 배상 △일본 교과서에 중군 위안부에 대하여 사실대로 수록할 것을 요구했다.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마친 수녀들은 시위 마침기도회를 통해 김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과 한국 여성 수도자들의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여성 수도자들의 다짐문에는 △여성들과 함께 문제 의식의 장을 마련하며 문제해결 방안 모색 △여성 신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지, 협력 △복한 자매, 형제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물리적 아픔의 나눔 △정신대 할머니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것을 다짐했다.

이소피아 수녀(성베네딕트 수녀회 회장)는 "한국은 UN비상임이사국으로서 정신대 문제와 같은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수도회들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인씨 사인규명 촉구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양재덕, 비대위)와 이씨의 가족들은 5일 오전 10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공권력의 사인조작으로 생존권을 지키려다 죽은 이씨의 사건이 묻히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이덕인씨 사망사건 일지>
7월3일 장애인들 아암도노점 시작/9월6일 인천시의회 아암도 노점상 철거예산금 2억2천만원 확정/10월7일 아암도 노점상 29명 철거 투쟁 시작/10월24일 오전 7시 경찰 1천4백여명, 용역반원 4백여명, 구정직원3백여명 아암도 철거시작/10월25일 철거농성자 중 11인(남2, 여9명) 탈진으로 병원으로 이송 후 연행/10월27일 농성자 중 4명 병원 이송 후 연행/10월28일 오전 8시 철거근처 해변에서 시체로 떠오른 이덕인씨 발견. 철거농성 해제(13명 모두 연행)/10월29일 새벽4시 경찰 시신탈취. 이씨의 형이 덕창씨 강제구인. 영안실에 있던 학생과 노점상 9명 연행. 오전11시 시신 부검후 길병원 도착(경찰, 사인 의사로 주장).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임법회의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헌신적으로 수호코자 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5.18민중항쟁'이라 함은 80년 5월18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과 그 후 이를 동조 계승해서 발생하였던 전국 각지의 민주화항쟁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국권찬탈'이라 함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12일 국가보위비상임법회의의 해체시까지 행해졌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희생자'라 함은 5.18민중항쟁과 국권찬탈과정 중의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구속자, 불법연행 및 구금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과 원상회복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장 제4조(국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국민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5인,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 광주민중항쟁연합이 추천하는 5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위원회 조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의 폐기에 대한 건의.
4.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제3장 특별검사
제13조(특별검사) 5.18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전담할 특별검사를 둔다.

제14조(특별검사의 임명) 1. 국민위원회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15조(특별검사의 자격)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18조(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제26조(국경일제정)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리기위해 매년 5월18일을 국경일로 지정한다.

제6장 공소시효
제32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93년 2월25일로 한다.

부칙
제4조(특수부의 해체) 이 법에 따른 최초의 특별검사가 임명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12.12와 5.18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해체함과 아울러 그간의 진행된 수사기록 일체를 특별검사에 넘겨주도록 해야 한다.

기사제보는 전화 715-9186으로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등, 연대회의)는 5일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무분과회의 참가보고를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교수는 "유엔 아동권위원회가 한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 1월 정부 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12월2일자 참조.
유엔아동권위원회 실무분과회의에서 연대회의가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들은 모두 27개 항목으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교육, 복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정비할 것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혼사 아동의 양육의무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사회 복지기관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정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가출 어린이 센터, 그들의 가정복귀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할 것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 5% 확보,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를 이룰 것 □어린이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과 교육에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할 것 □청소년이 불필요한 일반형 사법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제한할 것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되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프로그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법네스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었다"며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국가경비법 등으로 정역을 살았던 장기수들은 만기출소 이후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구보안감호소에 수용,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손

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제법의 위협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중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소했거나던 비전향 장기수들로 다시 청구보안감호소에 수용, 2년씩 새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백렬씨 등은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0-16년간 보안처분을 받아야 했다. 사회안전법은 이미 제판을 받고

만기형을 산 이들에 대한 행정관청의 판단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지적되어 왔고,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곧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상임위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24일 박형규목사를 비롯한 사회각계인사 4백98명의 서명파

이철의원등 국회의원 15명의 소개로 신청된 것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체에서 89년1월1일-91년12월31일 사이 병역특례의 무부무기간중 노동조합 활동 관련으로 해고된 자로서 특례의무부무기간 3년이상 복무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3년미만 복무자는 방위산업체에서 잔여기간 복무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청원심사소위의 결정이 나자 그동안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대해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던 병무청과 국방부는 그간의 입장을 바꾸었고, 관계 그들들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기피를 이유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이라는 기간동안 수배를 받은 해고노동자는 모두 11만명이다. 이 중에는 회사와 복직에 합의가 되었으나 병무청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그동안 민자당사 앞 침묵시위를 비롯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방부·병무청 앞 집회, 엽서·편지보내기운동, 공청회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인권하루소식> 11월8, 9일자 참조).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1회)
여성관련 국제조약
-국내법과의 관계/그 이용방법
강사: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일시: 12월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편집자 주> 지난 3일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조세 라모스(동티모르 독립 저항평의회, 공동의장)씨가 한 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인권운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이 75년 식민통치를 포기, 독립정부가 구되었으나, 곧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된 비운의 작은 나라다. 그후 동티모르인들은 국내에서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고, 해외에서는 망명정부를 구성, 독립운동을 해오고 있다.

조세 라모스씨를 만나 최근 동티모르의 독립운동 상황과 한 국민단체와의 연대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 방문 소감은
= 한국을 처음 방문해 잘 모르겠으나 수 년동안 한국 상황에 대해 관찰해 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인상 깊다. 한국과 동티모르의 역사적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낀다.

-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한국과 동티모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식민지 경험을 했고 5.18학살(그는 광주민중항쟁을 이렇게 표현했다) 산타크루즈대학살등 불처벌에 관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이 한국에서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한 캠페인 사업에 유리하다고 본다.

-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 향후 2-3년이 동티모르의 미래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저항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둘째,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동티모르의 독립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제임 2년을 남겨둔 수하르토 정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여론에 힘입어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에 가까운 성과는 있을 것이다.

- 지난 93, 94년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들이 방한했는데, 조세 라모스씨는 한 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 물론 당연히 방문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인권·사회단체의 관심과 요구가 먼저 있어야 하리라 본다. 내년엔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의 동티모르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으면 한다. 특히, 한국은 불처벌의 상징적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일제식민지 경험, 5.18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씨 구속 등은 수하르토와 같은 독재자에게 커다란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아태지역의 독재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독재자들에게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 한국정부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 군대가 철수하고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의 경우 일제식민지 동안 일본군의 주둔과 해방후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것이다. 유엔에서 한국정부가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과 자결권을 지지하는 결정을 취해 주었으면 한다.

- 벨로주교의 95년 노벨 평화상이 좌절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 우리는 95년 노벨평화상을 벨로주교가 받을 것으로 거의 확신했다. 수상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동티모르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96년에도 벨로주교를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 최근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을 어떻게 보는가
= 전·노씨의 구속 문제는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인권과 관련하여 커다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나이 지리아 정부가 환경운동을 처벌하자 이를 항의하며 경제조치를 취했다. 인권침해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한 것은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둘째,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 정권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자인 장군의 구속결정을 내렸다. 셋째, 한국정부가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과거 학살자들에게 대한 불처벌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행유에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지난 92년 반국가단체로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산하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발표하고 서울대, 고려대 졸업생등 관련자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과거 운동권 학생들로 구속당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권성기(28)씨등 10명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 회원 60여명은 6일 낮1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신한국당(구 민자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5·18비대위는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라고 당명을 바꾼다고 5·6공의 청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김경권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상 5·18특별법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회복 등 광주 5·18 문제 해결 5원칙이 수용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5·18비대위가 마련한 5·18특별법 국민 단일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예국동맹 산하 5.1위원회 등을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32), 국송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엠네스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재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검찰송치 박총렬씨 변호사 접견 거부 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당 입당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총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의사검진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박씨는 4일 안기부에서 5일만에 재계된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이에 따라 5일, 윤기원 변호사가 의사를 대동하고 접견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6일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6일과 7일 계속 담당 검사인 이기범 검사에게 접견신청과 함께 의사검진을 요청했으나, 이검사는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원재, 임종인 변호사등 5명이 다시 접견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것마저도 거부되었다.

이들 변호사들은 박씨에 대한 고문의 상처가 사라지기 전에 이를 확보, 고문의

증거로 삼고자 박씨의 상해 부위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3일까지 관악산,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 등지를 끌려다니며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12월5일자 참조).

또한,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중 신창균(88, 범민련 상임고문), 김광렬(72, 범민련 감사)씨는 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았던 강희남(75, 범민련 의장)목사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다. 범민련은 지난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항의농성을 사무실에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오전10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부여간첩 사건에 대한 종합발표를 할 예정이 다.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일 오후3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 10월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지하철 난동 사건 등 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일본 오키나와 국교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주둔군 지위협정'이 일본의 요구대로 개정된점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협상이 11월30일

부터 진행중인것을 감안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국민의 비난 여론을 확산하고 마일협정이나 NATO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여 민간단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배경 설명을 했다.

이장희교수는 "67년2월9일에 발효된 개정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외무부 공식명칭)을 91년2월에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개정을 하지 않고 양해사항만을 약간 개정했다. 비자금과 5-18 문제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정에 이를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시설·구역 조항, 노무 조항, 통관과 관세 등 특혜 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발표가 있었으며 박연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냉전이 해체된 지금 자국의 이해에 따라 주둔하는 군에 대해 불평등한 관계의 협정은 문제 가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국민이 더 이상 이 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 운동본부가 발표한 주요개정안 게재)

인권활동기를 위한 2기 공개강좌(11회) 여성관련 국제조약 -국내법과의 관계/그 이용방법 강사: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 일시: 12월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12월10일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서비스 개시
11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을 통신 서비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독자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여러가지 발견되어 약 한달 가량 서비스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47주년을 기해 통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게 되는 <인권하루소식>에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내일자에 자세한 이용방법을 설명합니다.

국제인권소식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국제적인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SOS Torture(SOS)는 지난 4일 「인권운동사랑방」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관련한 긴급행동요청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의사이자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매나위 헬라포타(Dr. Manawar Helepot)가 지난 11월28일 파키스탄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지난 11월5일 런던을 떠나 파키스탄 카라치에 도착, 고향인 탄달라와로 출발한 직후 곧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서 5일간 구금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1월30일 이

후 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체포는 그의 고향인 신디주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정책과 인권유린을 공공연히 비판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OS는 헬라포타씨의 행방을 밝히고,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SO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10일 동티모르 인권운동가 조세 벨호(32, Jose Velho)씨등 9명을 체포하여 철봉으로 때리기, 전기고문, 구타고문 등을 하

였고, 이들을 외딴 곳에 격리했다며, 고문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회의할 곳>
· 파키스탄 수상:Prime Minister Benazir Buthutto, Islamabad, Pakistan. 팩스: 92-51-811-390
· 인도네시아 경찰청장: CHIEF of NATIONAL POLICE Maj. Gen.(Pol.) Banurusman Atmosumitro, Kapolri, Markas Besar Kepolisian RI, Jl. Trunojoyo 13,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Indonesia.

행사와 동정

- 「통일맞이 칠천만 거래모임」, 통일의 밤
 - 일시:8일(금) 오후7시
 - 장소:연세대 학생회관2층 로비 맛나생식당
 - 문의:313-8201
- 나눔의 집 입주식
 - 일시:9일(토) 오후1시
 - 장소: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
 - 출발장소:9일(토) 오전 10시 조계사 앞
 - 주최: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 732-0851)
- 박성희 후원을 위한 하루주점
 - 일시:9일(토) 낮 12시
 - 장소:경희대 앞 하이트광장
 - 주최:경희대총학생회(☎ 961-0694)
- 부천사랑청년회 제1회 청년문화예술제
 - 일시:9일(토) 오후6시
 - 장소:부천 가톨릭대학교 소강당
 - 문의:032-613-3230
- 7회 앙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일시:10일(일) 오후5시
 - 장소:한양대학교 올림피체육관
 - 출연자:정태춘, 박은옥, 백창우, 현영대 김중서, 노래마을 등.
 - 주최: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763-2606)
- 95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9회 인권상 시상식
 - 일시:14일(목) 오후6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주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64-0203)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9주년 기념식
 - 일시:15일(금) 오후6시30분
 - 장소:명동 YWCA 1층 대강당
 - 문의:521-5364
- 「여성단체연합」 송년회
 - 일시:15일(금) 오후5시
 - 장소:장충동 경동교회 분당 집회실(☎274-0161)
 - 문의:279-6891
- 제15기 언론학교
 - 일시:19일(화)-96년1월12일(토) 매주 화,목 오후7시
 - 장소:민주언론운동협의회 교육관
 - 주요내용:한국언론의 역사 및 언론관(이효성)/뉴미디어시대 신문제작론(차성진)/멀티미디어의 실체와 미래(정근원)/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과제(최민희) 등.
 - 수강비:6만원(말차 정기구독자 5만원)
 - 주최:민주언론운동협의회(☎326-1252)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조항	현행	개정안
제22조 제1항(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이하 현행대로)
제22조 제5항(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고해야 한다.
제22조 제5항(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한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대한민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당국이 그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삭제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아시아 인권상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Victor P.Karunan 박사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점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보라는 개념은 사회내의 현존하는 권력의 기본구조내에서 나온다. 이 개념 속에는 사회가 항상 그 사회유지에 해가 되는 대내외적 위협을 받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보안법을 만들어 낸 것도 소위 비상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협적 상황 속에서였다.

□ 국가안보 정책

국가안보 정책은 2차대전 후 미국에서 생성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활발한 시험과정을 거쳐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러한 국가안보 정책은 내란을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결국 국민의 생존과 삶의 모든 면에 대한 궁극적인 지침이 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경제발전이란 국가가 잠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효과적 무기를 더 많이 획득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때때로 아시아 지역 정부는 그들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민족주의에 두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 규정에는 어떠한 명확한 한계도 없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를 국가이데올로기로 채택, 이용해 왔다.

□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

아시아에서 적용된 국가안보는 남미와 다른 몇가지 특징이 있다. 아시아의 국가안보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때 국가안보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을 탄압했다. 독립이후 제국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받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법을 그대로 공산주의의 위협과 지배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막는데 이용했다. 60, 70년대에는 국가이데올로기와 군대에 반대하는 급진적 학생, 국민운동 등 내부적 반발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교묘히 위장하는데 이용했다. 공산주의의 위협이 줄어들어 80년대에 넘어와서는 권력통치에 반대하는 소수민족, 종교, 원주민, 야당 등에 그 힘을 행사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아시아 지역 정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법으로는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사상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경제문제를 정치나 민주적 규범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국가안보법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 국가안보법은 정부의 정치적으로 최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었다.

□ 개념의 모호
국가가 국가안보법을 시행하고 공개적 조사와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아닌 보안법이 띠고 있는 고의적인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경제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국가의 출현으로 국가안보는 국가 내의 최우선적이고 중심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안보의 범위에 포섭되어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위치인 군대는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구실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다. 이러한 국가안보 시나리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군의 지배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중적 반발은 체제전복이란 악명이 붙어 질식되고 만다. 적은 국민의 내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단순히 부패한 사회구조에 대한 민주화, 개혁을 주장하거나 권력자들과 일치

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적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 국가안보의 특징과 유형

아시아 지역의 국가안보법들은 어떤 이름이나 명목을 가지더라도 몇가지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사법적 절차를 벗어난 체포와 고문, 재판절차없는 구속, 통행금지, 애매모호한 위법규정 등이 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안보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황을 3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또는 권력체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의 탄압이다. 여기서 가장 흔한 반정부 집단은 공산당이나 극우집단이다. 둘째, 군부통치국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셋째, 종교, 인종, 민족, 민주화투쟁 등에 사용되었다.

인권운동가들의 과제

인권운동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존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치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원주민, 소수민족, 아동, 노인 등에 대한 관심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도 정부, 시민사회, 다국적 기업 등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에 초점으로 두고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가 있어야 한다.

적은 국민 내부에 있고, 국민 자체가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인식

세계인권선언 47주년

내일(12월10일)

하루만이라도

인권침해 없는 날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8일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자 재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는 8일 성명을 발표, "마치 민주화운동세력과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지도자들을 친북인사로 몰고 회대의 악법 불고 지죄로 구속한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되지 않은 기정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안기부는 박충렬씨들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불법수사와 변호인 접견 금지 등 불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한달동안 범민련 간부 등 61명을 구속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일으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안기부는 먼저 고

정간첩의 실체를 밝히고, 김동식씨가 재야인사들을 포섭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재야인사들을 접촉했는지, 허인회씨의 경우 알리바이가 뚜렷함에도 김동식의 말만 믿고 허씨의 알리바이는 무시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특히 "박충렬·김태년씨의 경우 아무런 물증도 없이 고문과 인권유린행위를 당해야 했다"고 지적, 안기부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던졌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의문점들이 안기부에 의해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김동식 사건이 일정한 의도에 의해 재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관련 내용 2면).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는 8일 이른바 부여간첩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발표를 했다. 안기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24일 부여 정각사에서 고정간첩을 만나려다 생포된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씨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9월 3일 사망한 박광남과 함께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해 허인회(33,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구속중), 이인영(31, 전대협동무회장, 석방), 함운경(32, 전 민족회의 조직부장, 구속중), 이상호(33, 전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석방), 황광우(37, 전 민중당 당원), 정동년(52, 5.18광주민주항쟁연립 의장), 고은(62, 시인)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구속)씨와 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 구속)씨를 만나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지난 90년 처음 남파되었을 때 재야인사 등 30여명을 포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기부는 이날 수사발표를 하면서 "김동식씨를 계속 수사중"이라며 "김씨가 접촉하려 한 인물들과 90년 당시 김씨가 포섭한 30여명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간첩사건을 계속 확대할 뜻을 밝혔다. 한편

황광우, 정동년, 고은씨는 김씨가 접근 시도하자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8일 성명을 발표, "범민련 사건 관계자 등 동일인사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안기부와 경찰이 임신 8개월째의 고예순(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를 구속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수사기관의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5.18비대위 오늘 전국집회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삼근등)는 오늘 오후2시 종로공원에서 특별집사제 수용,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제9차 국민대회를 갖는다. '12.12군사반란, 5.18학살자 전원처벌'을 위해 갖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집회는 수원, 안양, 부산, 대구, 울산등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1회)

여성관련 국제조약

-국내법과의 관계/그 이용방법

강사: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 일시: 12월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프린터 고장 발송 늦어져 죄송

컴퓨터 프린터의 고장으로 어제(12월8일)와 오늘(12월9일) 인권하루소식 발송을 제 시간에 헤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과 인권을 무시, 억압하는 국가가 타국을 침해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부터이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체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 권은 본질적으로 통치자의 국내 관할사항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 및 부상전투원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요구하는 운동에 의해 19세기에 와서 서서히 후퇴했다. 그리고 2

차대전의 연합국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장차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결의가 선언되었고 UN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 설립하게 되었다. 이 인권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정한 선언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언은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

<세계인권 선언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크게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선언들은 세계의 보편적 인권인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선언이다. 선언 전문에는 "인류가 존엄과 양여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촉진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하며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0개의 조항에는 법률 앞에서의 평등, 임의적인 체포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의 권리, 휴식과 레저에 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도 열거되어 있다.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남향숙(구속중인 박종렬씨 부인)

남편은 11월15일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추운 겨울 런닝셔츠 바람으로 끌려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안속에 남편을 보낸 저는 면회가 거부되어 남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듣는 말은 잠을 안재우고 때리고 벌세우는 것도 모자라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이나 있었던 고문 폭력수사가 웬말이라고 정정당당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결백은 밝혀질 것이고 위법적 행동인 인권침해만은 하지 못하게 하자고 인권단체나 사회원로, 차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도 하나같이 아직도 고문이 자행된다고 놀라워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30일부터는 변호사 접견조차 안기부는 거부했습니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무엇을 할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기부에서 밤을 새워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도저히 집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좋으니 까 올때까지 기다렸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생사확인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겠다고 하자 안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좋고 밤을 여기서 지새워도 좋으니 보고 가야겠다고 하자 안기부 경비병들이 저를 들어서 밖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12월4일 변호사 접견결과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 능내리 공동묘지, 관악산, 대공분 실등을 끌고다니면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은몸 군데군데 피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살갗이 벗겨져 찰과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의사 진료를 신청했는데 안기부에서는 수진을 거부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감추려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혼돈이 될 정도였고 아직도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힘든데 제가 도울수 없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고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변호사접견이 거부되고 가족면회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는 검사조차도 황야의 무법자처럼 행동하는데 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복도에서 검사실로 오는 남편은 가슴부분에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남편을 검사실로 보내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잡기식 조작행위를 절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고한 민주인사를 구속해서 고문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무죄확인을 위해 많은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호주노조들 권영길위원장 구속 항의집회 각 노조들 김영삼 대통령등에 계속 항의편지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1일 호주 시드니 마틴 프레이스(Martin Place)에 위치한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호주 건설노조, 제조노조, 공공운수노조, 해운노조, 호주 연방교회 및 재호한국청년 연합회등 40여명이 참석해 △권영길위원장·단병호·문성현씨등 민주노총관계자의 석방 △제3차개입조항 철폐 △민주노총 인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스티브 로스만씨(International Committee for Trade Union Rights 아시아 지역담당)는 연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화를 외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약법의 철폐를 권의한 바 있는 제3차개입조항으로 권영길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노동조합수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예"라며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낮 12시부터 시작한 시위는 영사관 점심시간이 마치는 1시 이후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지도자들의 구속에 대한 항의 뜻을 직접 전하려 했으나 점심시간 30분이 지난 후에도 영사들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아 항의 뜻을 직접 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호주 각 노조들을 김영삼 대통령과 권병현 한국대사에게 권영길위원장을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

데 이미 「호주노동조합평의회」(ACTU)에서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에 이어 「뉴사우스 웨일스주 노동조합평의회」에서는 지난 주 각 소속 노조들이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과 현 민주노총 임원 구속 문제를 계속 주시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김영삼 정권의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구속에 호주 노동조합들의 항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세계인권선언일 47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의 고문과 간첩조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의 인권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최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박종렬, 김태년, 허인희씨의 구속한 것"이라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국제연대네스티 한국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침해의 요인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수가 넘쳐나고 어린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의 인권현실을 아직도 암울하지만 하다"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인 관행이 하루속히 척결할 것"을 주장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가 진정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오늘의 인권상황을 견뎌야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하씨 증언 촉구 전국연합, 검찰 최선 다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1일 성명을 발표,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반관세력이 자행한 협박과 수모, 강제퇴위로 이미 짓밟혀버린 '전직 대통령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요구 앞에서만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최 전대통령을 증인대에 앉을수만 하라"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인 관행이 하루속히 척결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법률상담 시작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11일 참여연대 사무실에 법률상담실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법률구조활동에는 강대성, 김경천 변호사등 변호사 25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매주 2명씩 교대로 상담에 응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매주 월요일 오후5시에서 7시 사이에 직접 참여연대 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 법률상담은 무료. 전화 796-8364

주요 공판 안내

- 12일(화)
 - 문국진, 고문후유증손배소송, 10시, 서울고법, 406호
- 13일(수)
 - 신원철(선고),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1부, 311호
 - 김영관, 국보법, 11시, 서울형사21부, 311호
 - 김준수의 3명, 국보법, 2시, 서울형사22부, 425호
- 14일(목)
 - 조세화, 국보법, 3시, 서울형사21부, 311호
 - 유진영(선고), 집시법, 10시, 서울형사23부, 319호
 - 유덕상, 업무방해, 3시, 서울형사2부, 422호
 - 김중근, 업무방해, 4시, 서울형사2부, 422호
 - 김형대, 업무방해, 10시, 서울형사2부, 선고, 423호
- 15일(금)
 - 이철주의 3명(선고, 5.1동맹),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3부, 311호

노점상 이덕인씨 타살? 비상대책위, 의문 제기

「장애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양재덕, 비상대책위)는 11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아암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노점상 이덕인(29)씨의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사들의 검안 결과 △ 팔과 어깨, 목, 얼굴 등에 나타난 피멍 △ 손목에 집중적으로 감겨있던 줄 △ 의사시에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없던 점 등을 들어 이씨는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11월 25일 이덕인씨가 농성하던 망루에서 내려온 것이 함께 농

성하던 이석근씨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후 3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1천여명이 시신을 탈취, 강제부검한 것은 사인을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 40여명 노점상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철거용역장패, 구청직원 등 약 1천5백명을 동원, "아주머니들의 음부를 쇠파이프로 찌르며 구타하였고, 장애인들에게도 집단구타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망루에 물과 음식물 전달하지 못하게 막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추위와 허기에 떨게 한 것은 "살인적인 야만행위였다"고 규탄했다. 비상대책위는 인천시의회에 아암도 철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양심수 없는 세상 함께 만들자 다짐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열려온 공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지난 10일 오후 5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양대 올림피아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창립 10돌을 맞는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 기념의 의미도 더불어 담고 있는 이날 공연에는 시인 고은, 도종환씨가 '민가협'이라는 제목의 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 NEXT, 김종서, 윤도현씨등 대중가수들이 나와 자신의 노래를 불러 공연분위기를 돋우었다. 93년부터 이 공연에 참가해온 김종서씨는 "처음 공연에 참가하고 나서 억울하게 갇힌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며 자신의 노래가 어두운 분위기의 공연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면 좋겠다는 참가소감을 밝혔다. 7년째 단골출연하고 있는 정태춘, 박은옥, 노래마을 등의 노래운동 일꾼들도 대거 참여, 감옥안의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소개했다. 이 공연의 특이한 점은 공연 출연자들은 물론 관객들도 "다시는 이런 공연이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다. 이날 공연은 출연진 모두가 나와 작곡가 윤민석씨가 지은 '우리는 지금 어디있나요'를 합창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던 김선명씨를 가택연금했다. 이번 가택연금은 지난 10월 '김선명선생 석방환영대회' 이후 두번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참가자들은 "45년동안 감옥에서 갇혀있다 석방된 김선명씨를 가택연금시키는 이 사회가 바로 커다란 감옥"이라며 경찰의 조치를 비난했다.

주/간/인/권/호/름

(95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4일>

안기부 구속 박총렬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법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앞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씨, 서울지법에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준항고장 제출

<5일>

부산 5.18동지회, 보안사 불법구금, 고문사례 등 폭로/5.18비대위, 5.18범국민단일안 발표/국회 문체위, 방송법안 이번 회기 처리 않기로/프랑스 노조들, 쥐페 총리의 협상 제의 거부, 정부 개혁안 철회 때까지 파업 계속키로

<6일>

광주전남연합, 범민련 고예순씨 임신 8개월 불구 구속 비난/국회도서관 직원 김영모씨 80년 당시 광주 군법회의 판결 받은 81명의 공소장 공개/서울지법 민사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구속적부심서 석방/미하원윤리위원회, 뉴트 김그리치 하원의장 정치자금 관련 의혹조사 목적 특별검사 임명 승인

<8일>

대법원 형사1부,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원심으로 확정/신한국당 정호용의원등 10명, 5.18특별법안에 끝내 서명 거부/안기부, 이른바 부어 생포간첩 김동식씨 공개 기자회견, 간첩접촉 30여명 수사 방침 밝혀/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노태우씨 재산 2천8백여억원 보전 결정

<9일>

<전남일보> 소준열 전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광주학살에 전투원씨 개입 증언 보도/5.18비대위, 서울동 전국 9개 도시에서 제9차 국민대회 열고 특검제 도입과 5.18학살 책임자 전원 구속 촉구/일본군 위안부 '나눔의 집' 새로 지어 경기도 광주에서 개원/미연방지법, 스위스은행 미르코그 재산 인권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판결

<10일>

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제7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에서 개최/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육청이 교사·학부모 4천여명의 교육환경 개선 건의서를 집단민원이라며 거부했다 밝혀/노벨평화상 수상자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블라트(87) 수상소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해 과학자 윤리지침 제정' 주장

<해설>

현재 진행되는 5.18정국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5.18특별법이 각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되려 하고 있다. 또 전두환씨의 단식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항이 목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안기부는 난데없이 부여간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과거의 인권유린을 단죄하면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문등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또다른 한편으로 현정권은 다시금 청산되어야 할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인권하루소식> 통신 서비스 시작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 자료목록까지

-통신 접속 방법과 메뉴-

지난 93년 9월 7일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여 팩스신문으로 창간, 사회구석구석의 인권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고자 노력해온 <인권하루소식>이 세계인권선언 47주년인 12월 10일 드디어 통신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구조활동을 해나가는 사람들,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권운동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컴퓨터 통신망 개시는 그 꿈의 첫걸음입니다.

주제·날짜로 전체자료 검색 가능
 매일매일 <인권하루소식>을 기사를 텍스트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준비1호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사를 주제와 날짜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이용하는데 한층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총 30개 주제로 나눠 제목, 본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인권하루소식>의 총목차가 실리며, 인권침해/기사제보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사나 소식, 동정은 그때 그때 성심성의껏 <인권하루소식>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온라인 인권법률상담도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은 '온라인 인권법률상담'을 추진중입니다. 컴퓨터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인권법률상담은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변호사, 교수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 상담자료들은 절대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자료로 활용,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백50개 주제 인권자료 목록 서비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1백50개 주제로 분류 관리한 인권관련 자료 목록을 보실 수 있

습니다. 정보자료실은 메인처럼 모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서비스할 것이고, d-Base를 구축하는대로 본문검색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접속방법>

하이텔 01410 초기화면에서 약부호 hnews를 입력하면 인권하루소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96년 1월1일부터 실행. 95년 12월까지는 하이텔 01410 초기화면에서 oland를 쓰고 go hnews를 입력해야 함).

지금까지 지면상의 부족으로 행사안내나 동정, 기타 소식들을 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식은 성심성의껏 통신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5-9185로)

□ 주 메 뉴

0. 사용안내(info)

1. 공지사항(infono)
2. 운영자에게 바란다(infosys)
3. 묻고 답하고(infoqa)
4. 게시판/사용자영역(infouse)
5. 사용설명(infoexp)
6. 인권운동사랑방 소개(infobroch)

7. 인권하루소식

8. 자료실

9. 안내/구독신청

1. 안내
2. 구독신청

□ <인권하루소식> 메뉴

1. 인권하루소식(hnews)

- 1.오늘의 인권하루소식
- 2.이달의 인권하루소식
- 3.인권하루소식 총목차
- 4.분야별 검색

- 1.자유권 일반/판례/행형 2.국가보안법/양심수/장기수 3.인권교육/교육/아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UN 9.법제 10.주간인권호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공판안내 13.기타

5. 전체검색

6. 인권침해/기사제보(CHARGE)

7.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서명교수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아래 관련기사)
전국의 서명교수들 대표인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대표 교수들은 이날 오후 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는 5.18특별법 제정이 각 정당의 정략적인 태도로 미봉과 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서명교수모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7월말부터 시작된 대학 교수들의 5.18특별법 제정 서명을 통해 전국민적인 특별법 청원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하려고 해 특별법 제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동인(강원대 사회학)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밝힌 '역사 바로 세우기'는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일 뿐으로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5.18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단죄뿐만 아니라 5.6공에서 희생된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청산작업이 5.18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8일 검찰이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월31일 고려대 교수 1백31명이 검찰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로 전국에서 1백개 대학 6천6백여명이 이에 동참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들이 참가한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 9월30일 '전국서명교수모임'을 결성, 그동안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5.18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불법수사관행 쟁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이상철)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

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5백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했고, 무혐의로 석방된 노씨를 이틀 후인 1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 영장의 정본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청 공보담당자가 혐의사실의 진실성의 확인없이 기자들에게 원고가 '부과의 사주'를 받은 간첩'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 △원고의 해외여행시 김포공항 보안구역 안에서 적법한 압수, 수색한 것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노씨는 지난 93년 7월 두 차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노씨의 변호인들은 경찰이 영장 사본 겹표지만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 수강료: 강좌당 5천원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⑤전두환·노태우씨 등의 재산을 몰수 피해자 배상금으로 사용할 것
⑥정신계승재단을 설립, 묘역의 성역화, 기념관 건립, 기념일 제정 등의 기념사업을 전개할 것
⑦특별법 전문에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단죄의 천명과 함께 민주개혁의 의지를 담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국민선언문'을 포함할 것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 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과 국민회의 이우정 의원등 8명이 발의한 '남녀평등기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여연은 두 법안이 기존의 일부 보호여성만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한 점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민간여성단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명칭과 목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여성부 신설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이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자가 공동 참여와 책임 분담"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성단체를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방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계획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했다.
여연 대표 이미경씨는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내용이

너무 영성하고 사회적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졸속으로 작성된 총선용"이라고 주장했다. 여연은 이 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5.18진상규명·5.6공 잔재청산·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12.12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12.12군사쿠데타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군용권력찬탈의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들에 대한 사판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독재시대의 결서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영삼정부는 민주세력의 편에서 역사청산작업에 단호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특별법을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의 기반이 된 반민주악법과 반민주적 제도를 철저히 청산, 민중의 민주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월혁명연구소」(소장 황건)도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 "반민족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5.18학살자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를 도입한 주범인 5.16 쿠데타 세

고이덕인씨 사인조사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아암도에서 노점상을 하다 지난 11월28일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노점상 고이덕인(29)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12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단은 유가족, 노점상등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청취했다.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수구세력의 척결에 큰 성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한청협」, 「포럼2001」, 「전대협동우회」, 등 11개 청년단체 회원 40여명은 12일 오전10시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 앞에서 12.12 16주기를 맞아 5·6공 잔재청산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단식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등 정국의 어수선했을 이용, 민주운동인사의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수 복송회담 제안 불교인권위 내년 1월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12일 비전향장기수 김영태, 김인서, 함세환씨의 복송과 관련하여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판문점에서 가질 예정인 예비회담 제안서를 통일원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지난 11월14일에 이어 4차례 제출된 것이었다. 통일원은 불교인권위의 신청에 대해 "북측이 피납된 남한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의면하고 있어 김씨등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북접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통일원의 이러한 조치는 민간의교를 차단하고 종교적 차원의 대화를 막는 것"이라며 "계속 대화를 불허할 경우 불교지도급 승려들의 서명운동 등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학생운동 중에 학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구속, 제적되었던 학생이 못내 괴로워하다가 분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27, 전기공학과)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구 일신여상 앞 육교 아래서 온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분신장면을 목격한 행인들이 급히 불을 끄고, 곧 119구급대로 연락, 중앙병원을 거쳐 강남구 대치동 화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장씨는 전신 80%에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처음에는 장기와 호흡기에는 화기가 침투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사고발생 열흘이 지난 13일 현재 합병증이 생겨 호흡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한다. 의사들은 "장씨와 같이 분신한 경우 생존율이 50%를 밑돈다"며 장씨가 다음주 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승이 제자를 고발
이번 사건의 발단은 9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여름 경원대 직원노조가 결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노조 간부들을 학교측이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장씨 등 학생회 간부들은 직원노조의

인정을 요구하며 쓰레기를 모아 학교 총장실에 버리기 운동을 펼쳤으며, 재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학 본관 앞에서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시사저널>을 불태웠다.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장씨와 황기룡, 문영복씨 등 3명을 폭력, 방화,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과학실험장까지 33명의 학생을 무더기로 무기정학등 중징계했다. 이에 앞서 학교측이 신축 건물을 공학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학교기관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자 이에 반발, 장씨가 주도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 불법금·가혹행위
장씨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다 성남시내에서 성남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없이 연행되어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에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여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연행이후 48시간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 불법금금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장씨는 그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 93년 초 경원대 입시부정

사건이 터지자 장씨는 혼자서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총장실을 찾아갔다가 그를 고발했던 당시 학생처장 문용식교수등에 의해 집단구타 당하기도 했다. 한편, 장씨는 감옥에서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기도 했다.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돼 스스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구명대책위 구성 서둘러
그와 학교 동기인 양정우(27)씨는 "그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학교자주화 투쟁에서 많은 학우들이 징계를 당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을 괴로와 했고, 또 스스로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 왔다"고 전했다.

92년 장씨가 구속되었을 때 성남경찰서 조사2계로 그를 면회했던 김혜성(35, 성남 산자교회)목사는 "경찰의 불법 수사에 항의, 고

소한 적이 있다"며 "그가 분신까지 결행하게 된 배경에는 제자를 고발한 학교측과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성남지역의 재야인사들과 경원대 졸업생 등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장현구씨 구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비 모금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2-21-0657-508 양정우

임신 8개월 고애순씨 구속적부심 기각

법민련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사실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고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건강이 계속 좋지 않다"고 전하며 뱃속의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2면에 계속-----)

인권활동기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수강료: 강좌당 5천원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자료> 노태훈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썩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에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실는다.

소의 신석순(경찰청 보안4과 형사)등이 93년 7월13일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이나(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압수품 소지죄로 구속한 사실에 스스로 위 신석순등과 동행했다고 주장하나 동행 경찰관들인 위 허유범, 김송원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의 임종길등이 같은 달 15일 구속 영장 정본의 제시없이 급속하게 원고를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형사소송법 제209조, 제282조에 의하면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혹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더라도 필요한 수만큼 구속영장 정본을 부여받아 그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구속영장 사본의 소지로써 곧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소정의 '구속영장 정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의사실 요지의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연행으로써 모두 위법이다.

또 경찰청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써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이러한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원고를 간첩죄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7월13일부터 15일 석방시까지 이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나 결국 간첩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석방한 뒤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타에 전과 가능성이 큰 기자들에게 원고가 복귀의 수괴인 김정일 로부터 사주를 받는 간첩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적인 명예훼손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당국에서 법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수하물을 임의로 개봉, 수색한 것은 비록 그것이 관세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모든 수사상의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원고의 천리안 컴퓨터통신을 탐지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제일, 외환, 한일은행의 예금계좌 입출금상황을 조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 의 협조 요청에 관계기관이 응한 것으로 데이콤, 은행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경찰

관들의 사용자로서 공무원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5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최규하씨 5.18등 증언 촉구 5.18광주공대위

'5.18학살자 재편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광주공대위)는 13일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 등에 관해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주공대위는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씨

도 12.12와 5.18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최씨가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내란과 학살의 공범으로 인식, 전두환 등과 같은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씨의 증언거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1면에서 계속)
한편, 전국연합은 13일 이날 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출산을 앞둔 임신부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진 검찰 결정 불복, 항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법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력이나 기능면에서 큰 공정에 투입되는 등 그 능률과 성과가 여성노동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초임차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영창악기 지난 92년 임금인상 후 남성노동자의 초임인 9천7백원에서 1만9천7백원으로 13.4% 인상한 반면, 여성은 9천원에서 1만원으로 11.15% 인상했다. 또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다수의 남녀노동자가 조립, 목기과, 전자악기 액손 등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노동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직무수당에 차별을 두고 있다. 실제

로 전자악기 액손과에서 일하는 송아무개(남)씨와 이아무개(여)씨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송씨만 직무수당을 받고 이씨는 받지 못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여연은 "작업강도에 따른 직무수당은 이해가 되나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임을 차별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한 임금책정에서 여성을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연은 지난 6월 영창악기가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각 정당에 제출

전두환, 노태우씨 등 5.18학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대리인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두환씨 등이 불법적으로 유지한 비상계엄조치가 해체된 81년 1월25일 이전으로 기산일을 앞당겨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헌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 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개정신체도의 확대적용은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특별검사제도 입법안은 개별적, 일반적인 법률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특별검사제가 각당의 입장차이로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5.18특별법안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향후 정치적 중립이 요망되는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는 전례로 삼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주선회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 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주검사는 "서울 고검의 항고기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91년 고 김기철씨가 분신사망한 이후 강기훈(32)씨는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3

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김형영씨의 문서감정 뿐이었고, 김씨는 다른 사건에서 엉터리로 문서감정을 하여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기훈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공동 문서 위조와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이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재항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씨 본인의 고소와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 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 이덕인대책위 제안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씨 비상대책위원회」(이덕인대책위)는 14일 민주단체와 인권단체측에게 (가칭) 「민중운동 탄압 분석과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덕인대책위는 지난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되는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대응은 피해 당사자들 중심으로 각 사안에 대처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5.18특별법이 국민적

인 요구로 제정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민중탄압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중생존권 탄압에 대해 연대투쟁을 벌일 국민적인 대책기구 마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덕인대책위에는 노점상연합회, 철거민연합회, 장애인가족협회, 노연협, 유가협, 민가협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는 전화: 02)766-4803이나 625-50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등 불교계 12단체는 14일 성명을 발표, △이덕인씨의 사인 규명, △이덕인씨의 장애인들의 생활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분신 경원대생 사망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일신여상 앞에서 분신, 투병중이던 경원대 재학생 장원구(27)씨가 14일 오후3시 서울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운명했다. <인권하루소식> 14일자 기사 참조. 그의 학교 동기인 양정우씨는 "14일 오전까지도 상태가 매우 좋아서 안도하고 있었는데 점심 때를 넘기면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장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경원대 재학생, 동문들과 성남지역의 인사들은 긴급히 장씨의 장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그의 시신은 송파경찰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국 제 인 권 소 식

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 자행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중지 촉구

국제적인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SOS Torture」(SOS)는 지난 12일 인권운동사랑방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관련한 긴급행동 요청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안왈씨등 MQM(파키스탄 반정부 비밀결사조직)에 연루된 여러명이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불법연행되었다. 사례를 보면 모하메드 안왈(22)씨는 지난 11월11일 파키스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다음날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고, 레마트 알리(23)씨는 11월13일 경찰에 의하여 연행, 사망했다. 모하메드 켈시드씨는 11월21일 집 근처 가게에 나갔다가 군보안부대 소속차량 두 대가 납치하려는 것에 저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비밀경찰과 군보안부대는 11월15일 새벽2시부터 7시까지 Orangi Town Sector 1-D지역 수색을 벌여 MQM 활동가들과 지원자들 13명을 연행하였다. 그중에는 MQM Unit 131의 책임자인 아우브씨와 동료인 아크렘씨와 아이자즈씨가 포함되었다. 또, 이들은 11월16일 MQM의 행방을 알기 위해 코랑기 2 (Korangi No. 2)의 주민들을 위협, 같은 날 페이잘 와히드씨를 불법연행하였고, 17일 아침8시에는 발디아 타운과 카라치의 외곽을 봉쇄, 모하메드 아리프(25) 모하메드 쉐이드(22) 아비드 알리(26) 파리젤(21) 과심(19)씨 등 MQM 활동가들과 지원자들을 연행했다고 한다. 현재 연행자들은 군보안부대 본부에 갇혀 있다.

비밀경찰과 군보안부대는 이들 외에도 MQM 후원자와 그 가족, 특히 여성들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

SOS는 고문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키스탄 정부측에 학대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민노총 설명회 가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4일 「참여연대」,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노동이론연구소」 등 3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설명회」를 가졌다.

김영대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민주노동의 현황보고,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방안 등 앞으로 활동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민주노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체 노조는 8백61개로 조합원 41만8천1백54명이다. 이외 농협, 섬유, 화학 등에서도 업종노조가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권영길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법적 투쟁과 함께 국내외 단체들이 압력을 가하는 대중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송년회
 - 일시:15일(금) 오후5시
 - 장소:장충동 경동교회(☎274-0161)
 - 문의:279-6891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9주년 기념행사
 - 일시:15일(금) 오후6시30분
 - 장소:YWCA 1층 대강당
 - 문의:521-5364
- 유가협 송년회
 - 일시:16일(토) 오후5시
 - 장소:유가협 한울살
 - 문의:764-7684
- 국제연대포럼-95 APEC 민간회의 결과에 대한 간담회
 - 일시:18일(월) 오후7시
 -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 내용:95 APEC 회의 및 민간회의 개괄 및 평가(이대훈)/노동권에 대한 민간단체회의 개괄(박석운)
 - 주최:참여연대(☎796-8364)
- 토론회-과거청산과 민족사 재정립의 과제
 - 일시:19일(화) 오후2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
 - 내용:냉전 50년, 해방50년 민족사 바로세우기(안병욱)/민주헌정질서 파괴와 정통성 논쟁(강정구) 등.
 - 주최:참여연대
-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열어가자는 합동송년회-96 우리의 꿈을 한 배에 싣고
 - 일시:21일(목) 오후6시30분
 - 장소:명륜동 성균관대 정문열 유럽회관 지하 명륜부패(☎742-8900)
 - 문의:822-5817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일시:21일(목) 오후7시
 - 장소:진미식당(☎713-2161)
 - 문의:715-9185
- 봉천동 나눔의 집·청소년쉼터 송년회
 - 일시:23일(토) 오후5시
 - 장소:봉천동 나눔의 집
 - 내용:활동현황보고/나눔의 집 1년 등.
 - 연락:871-1596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카드판매를 한다. 이 카드는 한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화가들이 기증한 작품을 만든 것으로 25가지 종류가 있다. 가격은 5백원~7백원이다. 신청 문의는 053-426-2533.

10대 뉴스 선정에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해를 마무리하고 뒤돌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하게 됩니다. 16일(토)자 별지로 나가는 설문 항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를 선정,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모아서 27일자 송년호에 게재합니다.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 기재장소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받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인도하였다가 다시 수사를 위하여 신병의 인도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구속영장상의 구금장소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안기부의 유치장소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75조가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

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 박찬운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며 “이 결정으로 안기부 밀실수사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고 말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창일씨는 지난 11월29일 범민련 관계자 28명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으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서초경찰서가 아닌 안기부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오다가 ‘영장기재 유치장소의 변경은 불법’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12월6일자 참조).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29)씨가 15일 오전 8시30분경 전혜투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민주당 서울시지부 당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 6층 비상계단에 목매 죽은 것을 청소원 김화춘(3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지난 91년 6월18일 대우정밀에서 병역특례 노동자로 근무중 노조활동과 관계되어 병역특례 기간 5년중 6개월이 모자라는 4년6개월간 근무하다 해고,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수배를 받아왔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지난 6월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회사, 당사자, 본인 3자가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안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 12일 조씨는 다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2명과 함께 대우그룹, 풍산그룹, 병무청 관계자와 함께 자리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병무청측은 “군대를 가는 길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함께 농성했던 동료들은 “4년6개월 수배생활 끝에 국회의 권고가 있어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병무청 관계자의 만남에서 다시 절망적인 답만 들어 장래 문제를 고민해 자살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노동자들의 단체인 전혜투와 민주노총, 전혜투 지원대책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조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옮기고 장례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권 10대 뉴스 선정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술한 사건들을 뒤로 하고 95년도 저물어 갑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올해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매년 10대 뉴스 선정에는 독자 여러분과 인권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했고, 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해 왔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인권 10대 뉴스는 그해의 인권지표로 활용됩니다.

올 한해의 인권지표를 스스로 뽑는 작업에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인권10대 뉴스 선정은 설문서(별지)를 참고하십시오.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터”(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신청서를 낸 중국교포는 이보금 씨등 산재피해자 1백12명, 이기만 씨등 임금체불자 1백65명이다. 귀향모임 등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귀향모임은 이날 법무부에 중국교포에 대한 한국인의 사기·횡령 수사 청원서와, 중국교포 김명산 씨등 실종된 외국인노동자 5명 소제확인 청원서를 냈다. 직접 조사를 한 귀향모임 간사 김재규씨는 “중국교포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언어 등 문화적 충격이 적어 중소기업등이 선호하고 있다. 실지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중국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중국교포들 가운데는 한국말을 알아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사례도 53명에

달한다. 사기를 친 한국인 브로커들은 대부분 임금을 주선해 주겠다고 3백~5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시간을 끌다 잠적해 버린다. 중국교포들에게 3백만원만은 집과 땅을 모두 팔고 친척들에게 빚을 얻어야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지만 한국에 취업이 되면 6개월안에 벌 수 있는 액수라는 이유로 과감하게 투자한다. 모든 것을 투자해 마련한 수수료를 사기당한 중국교포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재규씨는 “산재를 당한 교포 중에서도 선원으로 일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선상 폭력을 지적했다. 몇년 전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선상폭력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문제로 제기된 일이 있다. 이번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조산업, 동원산업, 대림수산, 삼호물산 등 국내 유명 참치회사 선박에서 일을 한 이들은 배에서 “노예취급을 당했다”며 치를 떨고 있다. 계속되는 구타에 항의하면 한국인들은 “우리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김씨는 “중국교포 사회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정이 극

에 달해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가협,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최규하씨 집앞서

“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등 유가족 관련 3개 단체는 15일 오전 국회앞에서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의 열정을 들고,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광주, 대구 등지에서 모인 유가족 20여명은 “전

두환, 노태우 등의 학살자들이 부정축재와 인권유린으로 정권을 유지할 동안 피눈물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전·노씨 등 5.18학살자 전원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5.6공에서 분신, 투신, 고문 등으로 죽은 이들이 1백41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30명의 의문사가 발생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의문사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앞 시위를 마친 유가족들은 신한국당까지 행진하였고, 다시 이들은 최규하씨의 집으로 가 최씨의 증언을 촉구했다.

◆ 인권간행물 ◆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던 더 혼란스럽다/안기부의 언론플레이 뒤에 가려진 간첩사건의 진실/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등. 53쪽.
- 「함께걸음」 12월호(☎521-5364)
· 주요내용:기रो에 선 비인가 시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교육-절대 특수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꼬리 무는 남비 현상/지상중계-연계고용제, 그 의미와 장애우고용정책의 발전방향 등. 85쪽. 값3천원.
-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박은정·한인섭 엮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펴냄
· 주요내용:법·형·처방: 5.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박은정)/5.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허영)/정치군부의 내란 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한인섭)/나치의 유대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김인석)/부록 등. 3백50쪽, 값 1만원.

-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인권교육 자료-
- Secondary School kit on the UN
· 주요내용:Mankind is once more on the move/Looking to the future/A just war?/how would you fund the UN/Humanity's cultural heritage 등. 83쪽.
- Primary School Kit on the UN
· 주요내용:Our Class Charter/Emblems of the UN/The Rainbow People/Jitka's Greeting Card/Where in the World 등.
- Intermediate School Kit on the UN
· 주요내용:The UN/To be born a girl/Trees for life/Who pays for the UN/The Members of the UN 등. 77쪽.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 수강료: 강좌당 5천원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고 조수원씨 사망 이후 해고자 문제 전면부상

조수원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등 해고자 문제가 노동계에서 강력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성현·윤재건) 등 민주노동계 진영은 조씨 사건이 발생한 15일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전국노동자장 장례위원회」(장래대책위)를 구성했다. 장래대책위는 회의에서 △11명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군문제 완전해결 △전체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투쟁목표로 내걸었다. 아울러 대우그룹측에 해고노동자 탄압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고 조수원씨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은 16일부터 계속 병무청과 신한국당 등을 항의방문, 조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따졌다.

18일 오후에는 온몸을 쇠사슬로 묶은 해고노동자들을 비롯 1백20여명의 노동자들이 신한국당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와 신한국당에 대해 △병역특례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병역특례 관련 법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

△병역특례 노동자 11명을 전원 제대 처리할 것 △병무청장등을 파면조치할 것 △5.6공과 헌정권에서 해고된 5천여명의 복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후6시20분경 40분동안 전해투위원장 장영길(44),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의장 조광호(50)씨등 노동자 34명을 강제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고자들이 몸에 감고 있는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고, 폭력을 휘둘러 해고자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오후8시경 다시 이들을 영등포, 남부, 구로, 양천경찰서 등으로 분산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조의 간부 등 50여명은 18일 밤에 영등포경찰서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장래대책위는 매일 병무청과 신한국당, 대우그룹 본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오는 23일 전국적인 노동자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태년씨 석방 탄원운동

「성남미래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된 김태년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태년씨의 진술은 듣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연극인 페스티벌 6개국 참가 열흘간 열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을 맞이하여 아시아의 연극인들이 '제1회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을 부산과 서울에서 16-26일까지 열흘동안 개최한다. 이번 연극제에는 한국의 「극단새벽」등 베트남, 일본, 파키스탄 등 6개국이 참가, 각각 참가작을 내놓고 있다.

「아시아연극인연대회의」는 "국제주의와 인류평등에 바탕을 둔 민중연대를 위해 아시아권의 진보적 연극인들이 공통된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며 "인류평등의 대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시아지역의 연극인 및 단체들의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주요사업으로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워크숍 △아시아연극인센터와 연극인수련장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연극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과 해방 50주년, 그리고 지금 이곳'이란 시대정신에 맞게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아시아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베트남 「유스씨어터」의 참가작 "땀과 쓴 여름"은 베트남 전쟁으로 희생되고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극단 「하루구마좌」의 참가작 "그날은 언제인가"는 원폭에 대한 고발을 파헤치고 있으며 중국 「하일민화극원」의 "혼은 어디로"는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산공연은 경성대 씨트홀에서, 서울공연은 동승 스튜디오 씨어터에서 열린다.

연락처 051-806-0828

인권 10대 뉴스 선정 20일까지 답변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올해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매년 10대 뉴스 선정에는 독자 여러분과 인권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했고, 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해 왔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인권 10대 뉴스는 그해의 인권지표로 활용됩니다.

인권10대 뉴스 선정은 16일자 설문서(별지)를 참고하십시오.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을 이용하십시오.

◇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글 ◇ 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

<편집자주> 이 글은 고 조수원씨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군문제 해결을 바라며 지난 10월2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단광촌에서 광산 선탄부 일을 하시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좁은 어린 시절을 단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때 아버지께서 30여년 가까이 단광 생활속에 서 진폐증에 걸려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탄광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저는 중3때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인문계 고등학교 장학 받아왔던 아시아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베트남 「유스씨어터」의 참가작 "땀과 쓴 여름"은 베트남 전쟁으로 희생되고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 극단 「하루구마좌」의 참가작 "그날은 언제인가"는 원폭에 대한 고발을 파헤치고 있으며 중국 「하일민화극원」의 "혼은 어디로"는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담없이 풀려나고 싶어도 부당한 제도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던 해고자. 이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또 이들이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

학비와 생계비, 방세 등등 당장 저에게 처해진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회사내에 노동조합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뒤 임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부당한 처우나 강요가 없어지고 자율과 신명이 깃들었습니다. 회사도 예전과는 달리 사원들을 대했고 노조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초부터 회사의 태도는 달라져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상습적인 고소·고발과 압수수색, 연이은 구속 등으로 회사내 분위기는 위기감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거대한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고 우리의 정든 일터는 최루탄과 군화발로 짓밟혔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수십명의 동료들이 감옥에 갔고, 저와 1백50여명에 달하는 동료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략)

수배생활 5년동안 집안행편은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피폐해져, 아버지는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날마다 공사관 일을 하시며 저녁만 되면 온갖 신음과 기침소리로 고통속에 생계를 이어나가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조그만 공장에 다니시지만 생활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음을 뻔한 사실입니다.

저의 이러한 불행도 이전 담당하게 발령받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4개월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달동안 잔업, 특근, 철야등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월급은 20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약도 사드려야 하고 동생들

주간/인/권/하/루/소/식

(95년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월)>
월간 <말>지 보도지침 폭로 사건, 9년만에 무죄 확정/5.18 주남양민학살 사건 2차재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 나와/호주 노조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권영길민주노동위원회 등 석방 촉구 시위/고 이덕인씨 진상규명위원회, 타살 의혹 제기. 인천시의회에 진상 조사단 구성 요구/유니세프, 전쟁과 내란으로 10년간 어린이 약 2백만명 사망 발표,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이 졸속 작성 비난/민단과 총련, 재일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추진/유엔 전범재판소, 르완다 집단 학살 자행 8명 기소

<13일(수)>
태광산업, 일방적 인사단행 노조 반발하자 무더기 중징계/화순광업소 노조, 회계 감사와 지부장 면직에 항의 대규모 삭발농성/경원대 제적생 장현구씨, 학내문제 구속·제적 괴로워 하다 분신/광주지법, 범민련 사건 고에순씨 구속부심 기각/여연, 영장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에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자 불복, 항고/중국,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이 징역 14년형 언도

<14일(목)>
교육부, 학생 폭력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기로/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대검청청, 강기훈 공대위 김형영씨 고발 사건 재항고 기각 밝혀/경원대생 장현구씨 사망/보스니아내전 당사국 지도자들 파리에 모여 보스니아 평화협정에 공식 서명

<15일(금)>
현재, 5.18 협법소원 종결/서울지법, 범민련 전장일씨 유치장소 임의 변경 안기부 수사관행 위법 결정/병역특례자 해고 노동자 조수원씨 자살/귀향모임,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동청구 신청서 제출/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앞서 의문사 진상규명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원, 외국인 지문채취 합헌 판결

<16일(토)>
5.18 비대위, 5.18 특검제촉구 국회앞 시위/노점상등, 고 이덕인씨 사인 진상 규명 촉구 종로3가 시위/프랑스 노조, 주요도시서 사회보장제 개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17일(일)>
한전의 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에 환경부 부동의 방침 확정/박성수 서울대 교수, 작은 학급이 학교폭력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해

<해설>
지난주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씨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병역특례 노동자 조수원씨가 스스로 목숨 매 세상을 하직했다. 지금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는 장에인 노점상 이덕인씨의 시신이 20일 가까이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장씨와 조씨의 자살에 대해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학내문제로 스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적생,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당한 제도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던 해고자. 이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또 이들이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시민단체들이 과거청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는 19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과거청산과 민족사 재정의 범주'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 점검했다.

학단협의 박진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 작업은 수십년간의 민주화노력의 결과지만,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과거청산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청산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청산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2.12와 5.18 책임자를 처벌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에서 재벌의 문제와 언론에 대한 청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 교수는 "현정부로 하여금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게 만든 것은 또 하나의 민중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전두환 일당의 반역행위를 엄정하게 심판해 낸다면 이는 광주항쟁에 버금가는 성과와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 작업의 의미를 평가했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교수는 "김영삼정권은 과거청산이 정통성 확보의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거청산은 정권적 차원에서 풀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과거청산 작업에 "국민 모두가 과거청

산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악용으로 삼아 오욕시키려는 반역사적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핵심세력은 물론 관련자 및 민간인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법적 처리와 공적추방, 이름 밝히기 등으로 역사청산을 완결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가지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2)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 (3) 책임자의 처벌
 - (4)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 (5)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예도의 표시
 - (6)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의 92년 보고서에서-

○ 주요 공판 안내 ○

- 20일(수)
 - 이정관·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 319호
 -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1부, 418호
 - 김준수·박두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22부, 425호
 - 이광수의 2명, 2시, 국보법, 서울형사22부, 425호
- 21일(목)
 - 오용철(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10부, 318호
 - 콜리나 프랭크(충무로폭행미군, 선고), 11시, 폭력, 서울형사7단독, 421호
 - 심철식, 2시, 폭행, 서울형사2부, 422호
- 22일(금)
 - 신광수의 1명, 3시, 국보법, 서울형사1부, 418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에 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한국아동학대에 방협회」(회장 박명윤)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결산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혼가정의 아동문제에 대해 발표한 정진영(서울여대 사회사업)교수는 "연구결과 이혼가정과 보통가정의 아동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아동학대와 비행은 "부모의 이혼보다 빈곤이 더욱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히 조사된 바가 없어 그 범위나 정의가 모호하고, 실태 조사도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박총렬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김기환(연세대 사회복지)교수는 "대부분의 청소년학대는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인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가 아동을 구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마련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총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중구 사당의원 원장이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의 몸 여러군데 멍자욱이 보였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이것이 구타에 의한 멍인지 아닌지는 조직검사를 해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조직검사를 위해서 상처부위 조직 채취를 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안기부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11월30일부터 4일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학자들은 이 조항이 "아동학대에 대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등 특별법 성명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 창북,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에 특별검사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정치권의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5.18 특별법 제정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4천만 국민의 승리"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라면서 구성원,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 등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5대원칙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특히 "조사주체가 갖는 국민적 권위와 신뢰,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배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역사 거꾸로 세우기'로 둔갑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직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간첩사건공대위)는 19일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는 제하의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발간했다. 간첩사건 공대위는 소식지 1면에서 대선자금 무마용, 총선승리 위한 노림수 또 '간첩사건'인가...와 공안정국 진행 일지를 실었고, 2면에서는 천주교조직 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제작한 조작간첩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구속중인 김태년씨 부인의 글을 실고 있다. 또 3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조항 분석을 통해 밝히고, 선거 때면 터지는 간첩단 사건의 역사를 추적했다. 이 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 747-4364,5으로 연락하면 된다.

인권활동기를 위한 2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강사: 오재식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장)

- 일시: 12월23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 수강료: 강좌당 5천원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인권 10대 뉴스 선정 20일까지 답변을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로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죄로 여겨진다.
-Victor P. Karunan-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허인회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헌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강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고지죄는 실정법적으로 따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즉시 불고지죄가 완성되는 범죄로서 그 신고의 시간적 간격과 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이미 기수가 되어버린

범죄인 불고지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고지죄가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대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임영화 변호사는 "허씨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면서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 10대 뉴스 선정
23일(토)까지 답변!**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로
인권10대 뉴스 선정에 꼭 참여해주시요.
설문 응답이 매우 저조합니다.

민주노총, 정부 제소
ILO 87호 조약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실립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설립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불이익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이며 민주노총의 합법성에 대한 부정으로 ILO조약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접수되어 정부당면서 제출, 결사의 자유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5월중 1차 판정과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2년부터 제3차 개입금지 등과 관련, 세 차례 제소당한 바 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강사: 오재식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장)
· 일시: 12월23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 수강료: 강좌당 5천원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조수원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

민주노총,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29, 대우정밀)씨 사망에 려져 이번 주말까지 항의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조수원씨가 일하던 '대우정밀노동조합'(대우정밀노조)은 지난 18일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전원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총회를 마친 후 추모집회를 갖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병역특례해고자 문제해결과 해고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우정밀노조는 매일 40-50명의 상경단을 조직, 부산병무청 항의 방문과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매일 임시총회를 여는 '총회투쟁'과 작업거부 투쟁 등 대응을 통해 그룹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한명숙)은 20일 95년 여성 10대뉴스를 발표했다. 95년 여성계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 소개한다.

1.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개최 및 한국여성운동의 조직적 참여
2.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127명 진출, 여성의원정비 확대
3. 정치활동제한과 고용불안정 등 4. 남녀고용평등의 달
4. 남녀고용평등의 달
5. '근로자파견법' 입법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7.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8.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60억 책정
9.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선정
10. 일터에서의 안전

인권운동사랑방 95년 송년회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지문위원, 사무국,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어울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송년회에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7시 진미식당(전화: 713-2161)
숙대입구 전철역 4번 출구 서울역 방향 1백미터 지점

범민련사건 이천재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의 이천재씨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항의단식을 하고 20일 오후부터 복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범민련 간부들을 구속, 통일운동을 탄압한 것과 특히 나이 많은 범민련 간부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단식을 해왔다. 또, 범민련 남측위원회 위원장 강희남 목사도 지난 16일 17일간의 단식을 끝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등 12개 불교인권단체는 20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범민련 전창일(74),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선거철을 맞아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불교인권 위등은 "정권의 안보를 빙자, 통일운동에 전념하던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역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 △국가보안법

의 철폐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주장했다.

경원대생 경찰청 시위 고문 책임자 처벌 요구

경원대 학생 2백여명은 20일 오후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지난 4일 분신한 장현구(27)씨의 고문후유증 사망에 대해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장씨가 92년 성남경찰서에서 구속수사를 받을 때 3일간 잠을 못잔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고동스러워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성남경찰서 고문책임자의 처벌, 박일룡 경찰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들을 모두 연행하여 조사 중이다.

경원대 졸업생과 재학생, 성남지역의 민주인사들은 '사학비리, 경찰고문의 희생자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등)를 결성하고, 19일부터 매일 정부기관등을 방문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 접속에 대한 안내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12일자에 게재된 통신서비스 안내문이 자세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접속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접속방법
하이텔이나 천리안의 ID가 없어도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01410으로 전화를 걸고 oland [한 후], 13번(열린통신) [한 후], 3번을 선택하여 guest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신청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시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요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된 ID에 대한 회비를 부과하지 않고 분당 10원의 접속료가 전화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문의 02-715-9185(자료실 담당자: 강기훈, 최은아)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적으로 여겨진다.
-Victor P. Karunan-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임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만진씨등 14명이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만 따라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

혔다. 그러나 정귀호, 이돈희, 이용훈 대법관 등 3명은 소수의견으로 "임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신분을 감안해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눈 중전의 '임금이본질'을 유지, 쟁의기간 중이라도 후자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남씨들은 지난 89년 11-12월 사이에 파업을 한 뒤 피고 조합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원심법원인 춘천지법에서 5백1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하는 뜻을 명백히 했다.

인권 10대 뉴스 선정
내일 23일(토)까지 답변을!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로
인권10대 뉴스 선정에 꼭 참여해주시요.
설문 응답이 매우 저조합니다.

민주노총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어 왔다"면서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업기간중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논란 및 분쟁으로 노사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95년 파업을 벌인 사업장에서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58.7%,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22.2%, 임금 50%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2.7%, 50% 미만을 지급한 경우 6.3%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95년 파업중 임금을 전액지급한 회사는 한양공영, 현대정공(창원) 등 37개에 달했다. 또, 파업기간중 임금을 50% 이상 지급한 경우는 효성금속 등 8개 회사, 50% 미만을 지급한 경우는 한국중공업 등 4개 회사로 나타났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강사: 오재식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장)

- 일시: 12월23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 수강료: 강좌당 5천원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총무로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지난 5월 총무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김동환 판사)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플리나 프랭크씨에게 징역6월, 도르케리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에서 조정국(28)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만 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플리나 프랭크 등 미군병사 5명은 지난 5월19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한국어승객을 희롱하고 이를 항의하는 조정국씨를 폭행, 허리, 눈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

하려는 집단이 이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관련 단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정국씨는 "재판내내 미군들이 뻔뻔스럽게 폭행사실을 부인해 속이 상했다"며 "재판을 통해 미군들의 잘못이 밝혀져 기쁘다"며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조씨는 지난 10월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수여한 '애국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명동성당 농성 무기연기 농성자 12명 경찰 연행돼

지난 7월19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항의, 광주에서 상경 명동성당에서 1백56일째 농성중이던 광주 5.18 유족, 부상자등 농성자들이 다시 농성을 무기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여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광주에서 상경, 5달 넘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 접속에 대한 안내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12일자에 게재된 통신서비스 안내문이 자세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접속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1. 접속방법
하이텔이나 천리안의 ID가 없어도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01410으로 전화를 걸고 oland [한 후] 13번 (열린통신) [한 후] 3번을 선택하여 guest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신청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시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요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된 ID에 대한 회비를 부과하지 않고 분당 10원의 접속료가 전화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문의 02-715-9185(자료실 담당자: 강기훈, 최은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강연, 시위 등을 전개해 특별법 제정운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들은 21일 해단식을 갖고 광주로 내려가려 했으나, 이날 새벽 전두환씨가 안양교도소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병원으로 달려가 병원정문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5.18부상자 동지회 회장 박영순씨등 12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의 강남, 노원 등 4개 경찰서에 분산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총들에서 경찰 한명이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을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지난 10월26일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21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창복, 강신석 상임공동대표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 성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전국사제단 등 8개 지역·부분단체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들은 "5.18 특별법 제정에서 특별검사가 빠지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을 위한 조처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이제 시작된 과거청산이 미봉과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5.18내란학살등의 사법처리 과정에 정부가 임정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영령 및 민주열사들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민주화와 사회정의실현을 가로막는 각종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와 법제, 관행과 의식을 혁파하는데 계속 선봉에서 서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5.18명동성당 농성단에 감사패가 주어졌다.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지난 10월26일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21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창복, 강신석 상임공동대표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 성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전국사제단 등 8개 지역·부분단체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들은 "5.18 특별법 제정에서 특별검사가 빠지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을 위한 조처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이제 시작된 과거청산이 미봉과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5.18내란학살등의 사법처리 과정에 정부가 임정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영령 및 민주열사들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민주화와 사회정의실현을 가로막는 각종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와 법제, 관행과 의식을 혁파하는데 계속 선봉에서 서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5.18명동성당 농성단에 감사패가 주어졌다.

○ 행사와 동정 ○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 일시: 22일(금) 오후2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 내용: 선거법 위반 재판의 부공정 사례(이창식)/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김성수)
 - 주최: 참여연대(☎796-8364)
- 청소년 희망학교 졸업발표회
 - 일시: 22일(금) 오후3시
 - 장소: 상동구민회관
 - 주최: 청소년단체 희망(☎469-7578)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신년하례예배
 - 일시: 96년1월3일(수) 오전11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문의: 708-4181
- 시민사회단체 공동신년하례회
 - 일시: 96년1월4일(목) 오후2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한국시민단체협의회(☎741-7961)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법 위협에 빠뜨리는 적으로 여겨진다.
-Victor P. Karunan-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인권하루소식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노동법 개정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차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1일자 서한에서 OECD-TUAC는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은 ILO와 유엔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노동조합 기본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한이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 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그간의 ILO와 유엔 사

회권위원회의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지적과 권고를 일일이 상기시켰다. 또, OECD-TUAC는 OECD 각국 대표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원씨 추모대회 예정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부산 「대우정밀 노조」 조합원과 해고노동자 2백여명은 22일 서울 병무청 앞에서 "병역특례해고자 조수원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무청은 병역특례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조씨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송재환 병무청장과 「고 조수원씨 장례대책위원회」 사이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1시간 여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송 병무청장은 "앞으로 계속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는 법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 추모대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1천5백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하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및 고 조수원씨 추모대회를 갖는다. 집회는 조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이후상황 발표, 유미회(동양나이론 해고자)씨가 추모글을, 조기순 대우정밀노조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대우빌딩을 거쳐 후암동 병무청까지 거리행진과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무노동 무임금 철폐 촉구 전국연합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차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의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가 처해 있는 객관적 현실을 철저히 무시,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며, 특히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시대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지극히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주장, 이의 철폐를 요구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강사: 오재식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장)

- 일시: 12월23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 수강료: 강좌당 5천원
-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인권 10대 뉴스 설문응답

오늘 마감!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로
인권10대 뉴스 선정에 꼭 참여해주시요.
설문 응답이 매우 저조합니다.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안기부가 재일공작원이라고 한 범민련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비밀공작원이나 간첩행위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측본부가 선전홍보용으로 만든 자료집, 연하장, 달력, 뱃지 등을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그 대금을 치른 것"을 안기부가 공작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부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식을 했고, 김영제(39) 정책위원장은 일체 조사에 불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남, 북, 해외본부로 구성된 범민련의 집행기구로 일본 도쿄에 사무실이 있다.

지난달 29일 안기부와 경찰에 의해 구속된 범민련 관계자중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신창균(88), 김광열(76)씨를 제외하고 광주전남연합의 고예순(28)씨를 포함하여 모두 28명이 수감중이다. 이들중 강희남, 이천재씨는 20일이 넘도록 단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22일, "성탄절 특사에서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잘못되고 뒤튼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청산과 함께 군사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만든 악법과 안기부등 파쇼억압기구에 의해 갇힌 4백여명의 양심수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어둔 채 과거청산을 운위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성탄절 특사로 6백1명의 일반수들을 23일 석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잠깐! 통신 서비스 이런저런 문제

△ <인권하루소식> 메뉴 9번 단어검색을 이용하면 제목, 본문, 날짜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하이텔에 접속하여 <인권하루소식>을 검색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화면상에 글씨가 깨져나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독자 중에 통신 ID를 갖고 계신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쉽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715-9185 담당 최은아

추운 겨울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3,40년 넘는 세월을 창살 안에서 그리움마저 감혀 있는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가 쓰는 편지 한장은 세상과 창살안을 이어주는 가장 희망스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편지봉투에 수번과 보내는 사람을 정확히 적어야만 합니다. 단체에서 보낼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편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63호

이름(나이)	수번	복역년수
김동기(64)	5042	26년
이공순(62)	5041	29년
이경찬(61)	5047	31년
이재룡(52)	5059	26년
최수일(56)	5015	31년

대구교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화원우체국 사서함 1호

오형식(66)	3100	27년
홍명기(67)	3125	34년

대전교도소
(305-251) 대전광역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김은환(66)	3640	27년
김익진(66)	3574	27년
박왕규(66)	3624	29년
신인영(66)	3556	29년
안영기(66)	3530	34년
양정호(65)	3630	27년
우용각(67)	3514	38년
윤수갑(73)	3649	29년
윤용기(70)	3615	37년
장병락(62)	3645	34년
최선목(68)	3612	34년
최하중(69)	3561	34년
홍경선(71)	3501	29년

전주교도소
(560-280)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 사서함72호

김창원(63)	2063	27년
---------	------	-----

<이달의 주제-국가보안법>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적으로 여겨진다.
-Victor P. Karunan-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강경하게 해결불가를 내세워 온 병무청은 지난 23일 현재 병역특례해고자 11명에 대한 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래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정기, 장래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병역특례해고노동자 10명에 대해 복직하면 의무근무기간 5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수배를

준다"는데 합의하고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 병역법 내 관련조항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역문 제만 해결되면 복직하라"고 말한 대우그룹이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23일 병무청의 결정이 난 후 대책위와 가진 교섭에서 "조수원씨만 사망전 날인 14일자로 복직하고 나머지 7명은 다시 협의하자"

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나머지 해고자 4명이 소속되어 있는 풍산그룹은 "대우가 해결되는 것을 보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그룹은 지난 94년 해고자들과의 교섭에서 복직에 합의, 발령을 내고 급여까지 지급한 바 있어 사실상 해고자들은 복직이 되었다. 하지만 병무청이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수배해 출근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애초 대책위는 병무청과

의 문제가 해결되면 27, 28일쯤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대우그룹의 변화로 장례는 자동 연기되었다. 한편, 「전국구속·수배·해고자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소속 해고노동자와 대우정밀 노동자 12명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8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대우그룹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쇠사슬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해고자들과의 교섭에서 복직에 합의, 발령을 내고 급여까지 지급한 바 있어 사실상 해고자들은 복직이 되었다. 하지만 병무청이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수배해 출근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애초 대책위는 병무청과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규현신부는 92년 12월 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

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 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씨는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

특집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 10대 뉴스(3면-5면)

- <5.18특별법 제정> -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 - 다시 드러낸 개발독재의 귀결
- <세계 최장기수 김신명씨등 석방> - 12월 현재 장기수 포함 양심수 3백52명
-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 한국통신노조 준법투쟁에 비이성적 탄압
- <부여간첩과 공안한파> - 불고지등 혐의 제야·청년단체 간부 무리한 구속
- <충무로지하철역 미군폭행사건> - 한미행정협정 개정으로 이어져
- <민주노총 건설> - 권영길 위원장 등 노조운동 지도자 구속
-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 양봉수·박삼훈·조수원씨 등
- <외국인 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미봉책에 그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대책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스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귀중한 성과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의 시기를 잘못된 역사와 독재잔재를 청산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자"며 검찰의 광주 현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5.18공대위는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조사활동과 증언, 증거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당시 5.18연행자 등의 집단 제심청구, 재정신청, 5.18진압군에 대한 상훈 박탈 청원, 각종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활동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감시활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과 5.6공 당시의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인권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같이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살자 처벌감시단'을 5.18공대위 산하에 두고, 법률위원회에서 5.6공 청산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27일 18차 조찬회의를 열고, 스자체 진상조사 △학살자처벌 국민감시 △법률 대응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5.18공대위는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킨 귀중한 성과를 빼앗기지 말고, 지금의 시기를 잘못된 역사와 독재잔재를 청산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자"며 검찰의 광주 현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5.18공대위는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조사활동과 증언, 증거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당시 5.18연행자 등의 집단 제심청구, 재정신청, 5.18진압군에 대한 상훈 박탈 청원, 각종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활동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감시활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과 5.6공 당시의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인권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같이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살자 처벌감시단'을 5.18공대위 산하에 두고, 법률위원회에서 5.6공 청산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성호 선원 귀환 환영 제야, 남북대화 재개 기대

우성호 선원들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등 제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당국이 아무런 조건없이 송환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뿌리깊은 상호불신과 적대의 벽을 다소나마 허물고 민족화해와 협력의 96년을 기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 또 "남한당국이 우성호 송환조치에 대해 중단된 쌀지원 재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후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통한 실질적인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림-다음호 1월 5일>

올해 <인권하루소식>은 오늘자로 끝납니다. 지난 1년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선원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호는 96년 1월5일자 로 발행됩니다.

주/간/인/권/하/루/소/식

(95년12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

<12월18일>
노태우 전대통령 5천억 비자금사건 첫 공판 열려/김수환 추기경, "두 전직대통령 구속은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민주주의국가를 위한 새출발의 길목" 성탄메시지 발표/환경부 기존방침 바꾸어 영광 원자력 5.6호기 건설 동의, 환경단체·주민 거센 반발/국회, '거침양민학살'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국제적십자 조사단장, 북한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부족 13만명 기아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지원 호소/통일원, 북한 추가 쌀지원 없다고 밝혀
<12월19일>
국회, 5.18 특별법, 특검제없이 가결/검찰, 5.18공소시효 96년 1월24일이라고 밝혀/안기부·경찰, 범민련 30명 검찰 송치, 전창일씨등 2명은 간첩혐의/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칠레 군부대에서 학살추정 유골 3구 발견, 인권단체 '특별검사' 요구/중국, 리펑수상 비판 독일특파원 추방
<12월20일>
단식중 전두환씨 경찰병원으로 이송/5.18명동성당 농성단 회원 경찰병원 항의시위 12명 연행/서울지검 공안2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개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4.3항쟁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부산지법,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피의자 고문경관 3명 기소/환경부의 영광 5.6호기 건설 동의 항의, 5개 환경단체와 주민 상경시위/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작년보다 2.7배 늘었다고 밝혀
<12월22일>
북한, 우성호선원 5명 26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고 발표/민주노총등, 대법원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항의성명/일반 기결수 601명 성탄절 특별가석방/정부, 지존과 희생 최미자씨 유족에 범죄피해 구조금 1천만원 지급/미국, 이란전부 공작비 증액/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법 개정촉구
<12월23일>
이스라엘, 중동 평화엔 핵포기 발표/인도, 화제로 4백명 사망/프랑스, 태양사원 신도 16명 불탄 시체로 발견
<12월24일>
대우정밀 노동자등 12명, 명동성당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촉구 단식농성 돌입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7월 검찰의 5.18내란 책임자들에게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 이후 5개월동안 진행된 국민적 저항운동이 구체적인 법률로 탄생되었다. 문제는 철저한 과거청산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민감시운동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지난주에 4년6개월동안 수배생활을 했던 한명의 병역특례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역사 바로세우기도 중요하지만, 이땅의 민중들이 생존권마저 유린당할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끝나야 한다. 노동권과 생존권은 기본적인 인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들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건들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제기 마련

지난 7월18일 검찰은 1년6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18 책임자 전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여 이를 강변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11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완전히 뒤바뀌어 5.18특별법이 제정되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고 난 후 전국의 재야, 사회,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 발표와 농성, 집회 등으로 맞섰다.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국민적인 불복 운동에는 사상최대의 수가 집단적으로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종교인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국민들도 5.18특별법 제정운동에 1백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직적인 운동은 5.18국민위원회와 5.18광주 전남공대위를 결합하여 10월26일 전국의 2백98개 단체를 아우른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간의 타협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5.6공 군사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한 단죄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에서 수감자로

검찰은 전직 두 대통령을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혐의로 구속했다. 또, 노태우씨에 대해서는 뇌물 수령 혐의로 구속했고,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비자금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중이다. 이런 일련의 검찰의 태도는 국민들의 저항에 의한 측면과 김영삼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들과용이라는 두 측면이 작용하여 이뤄진 조치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일이다.

어쨌건 이번의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은 과거권력형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최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던(불처벌)의 관행을 깨고, 이로부터 앞으로는 반인륜 범죄 등에는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인권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다.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 다시 드러낸 개발독재의 귀결

94년 상수대교 붕괴의 참사와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대구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1백1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더니, 6월29일에는 대표적인 호화백화점 삼풍이 일순간에 땅 밑으로 꺼져버렸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죽은 이들만 공식적으로 5백1명에 달했다. 최근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못한 유골 1백44점이 벽계 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삼풍참사는 참혹한 죽음들은 막을 수 있는 인재로 지적되었다. 백화점의 붕괴 조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났고, 붕괴 직전 백화점 책임자들은 고가품을 대피시킨 후 미리 빠져 나갔음이 밝혀져 유족과 부상자,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또, 체계적인 재난구조에 대한 문제점, 공무원의 비리, 감독관청의 허술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근저에는 인명을 경시하는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많은 이들은 쉽게 알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등 석방 12월 현재 장기수 포함 양심수 3백52명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구속집행정지로 8월15일, 45년만에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김씨와 함께 안하심, 한장호씨 등이 풀려난 대전교도소에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들 세사람은 모두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한 이들이었다.

김선명씨의 석방은 국내외 인권단체의 집요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는 만델라와 종종 비교되어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그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7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수는 63명이나 아직 남아 있다. 또, 12월 현재 복역중인 양심수는 3백52명에 이르며, 이중 국가보안법 적용자는 75%인 2백66명에 달한다. 올해 11월까지의 총구속자 5백95명에 이르러 있어 공안탄압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이상의 통계는 민가협 자료에서 인용).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에서도 사상과 양심, 의사표현의 자유는 계속 억압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한국통신노조 준법투쟁에 비이성적 탄압

올해만큼 노동문제가 부각된 해도 없었다. 특히나 6월의

명동성당,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현정권에 대한 종교권의 이반을 가속화시켜 결국 하반기 5.18특별법 제정운동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김영삼대통령은 5월19일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의사를 밝힌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전복 저의'가 있다며 임중치벌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결국 6월6일, 한국통신 노사간의 협상이 종교 지도자들의 중재로 타협점을 찾아가던 순간,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이 농성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 이들을 연행해 갔다. 이에 대해 천주교, 불교계 등 종교권은 "교권유린, 성소난입"에 대해 삼풍참사 발생 때까지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부여간첩과 공안한파 불고지등 혐의 재야·청년단체 간부 무리한 구속

10월 두 차례의 간첩사건이 일어났다. 먼저는 임진강을 건너던 무장간첩을 사살했다는 것이었고, 며칠 후 다시 부여에 나타난 무장간첩을 잡기 위한 소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한명은 사살되고, 한명은 생포되었다. 생포된 그는 안기부에 잡히자마자 중요한 모든 내용을 불기 시작했다. 11월 초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허인회씨 등이 불고지 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생포간첩 김동식씨를 간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허씨는 알리바이마저 제시했다. 이씨와 우씨는 곧 석방되었다. 다시 간첩 사건은 재야단체의 중심단체인 전국연합사무차장 박충렬씨와 성남미래준비위원장 김태년씨로 이어졌다. 안기부는 처음 이들이 90년 이후 성명불상의 간첩에게 일자불상경에 포섭돼 회합통신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할 때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라는 안기부에서는 수사할 수 없는 혐의만 적용되었다. 여기에 무려 보름간의 잠안재우기 고문과, 야외로 끌고다니며 행한 고문이 폭로되어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사건이란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12월8일 안기부는 이례적으로 생포간첩 김동식씨를 언론에 공개하고, '간첩' 관련으로 재야인사 30여명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혀, 이 문제는 총선시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충무로지하철역 미군폭행사건 한미행협 개정으로 이어져

지난 5월19일 충무로지하철역에서 벌어진 미군들의 폭행사건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매일처럼 언론은 주한미군 범죄를 다루었다. 주한미군 범죄는 충무로지하철역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증대한 것이 아니었다(연평균 2천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특히나 형사관할권 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미군의 국민학생 성추행 사건에 비교해 볼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즉,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주한미대사는 한국 언론들이 반미감정을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을 공공연히 했다.

최근 충무로지하철역 폭행 미군들은 한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건설 권영길 위원장 등 노조운동지도자 구속

지난 11월11일,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을 사실상 귀결한 민주노총이 건설되었다. 민주노총은 40만이 넘는 조직을 갖게 되었고, 특히나 노조운동을 사실상 이끌다시피한 대형사업장 노조가 대거 포함돼 동원력이나 조직력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노총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위 사업장의 임금상투쟁을 넘어서 산별노조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직전 민주노총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문성현씨등을 구속했고, 기부금품 모집을 했다며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리고, 제3자개입지위 위반으로 수배중이던 권영길 위원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권인 파업권과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박삼훈·조수원씨등

올해 인권상황을 정리해보면, 한편에서는 과거청산의 도도한 흐름이 진행되었던 반면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인한 철저한 진압의 양상을 띄었다. 철거현장에서 벌어졌던 봉천동 성폭력 사건이나 아암도 이덕인씨의 죽음 등이 이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도 이런 양상은 관찰되었다.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씨는 5월12일 분신하여 6월13일 사망하였다. 그의 분신으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은 파업에 돌입하였고, 현총련의 집단적인 행동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입체적인 진압작전이었다. 경찰은 그의 유골마저 강제로 탈취해 비난을 받았다.

또, 6월에는 대우조선의 박삼훈씨가 회사의 신경영전략을 비판하며 분신했다. 12월에는 병역특례 노동자로 4년6

개월간 수배중이던 조수원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노동자들이 사람의 버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다.

지난 4월 노동부 앞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원초적인 폭력진압, 그리고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던 사당의원에 난입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태도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미봉책에 그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대책

지난해 뚜렷이 부각된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9일간의 농성을 벌여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이들이 한국에서 당한 인권침해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산재, 체불임금의 문제, 폭행, 성폭행, 감금의 문제 등등은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로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충분히 알렸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 노동운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이 결합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게 이른다.

한편,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산재를 당하고 임금을 체불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미 귀향한 이들의 산재보험금과 체불임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외국인노동자 단체에서 벌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인권공대위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1명
인권, 사회단체	53명
개인	31명
교수, 정치인	26명
변호사	21명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95년 인권상황을 10대 뉴스 선정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과거청산이라는 발전적인 흐름과 민주생존권에 대한 원시적인 탄압이라는 모순적인 흐름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었다. 위낙 5.18특별법이나 전·노씨의 구속,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굵직한 사건들로 점철된 터라 사실 인권 고유 영역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할까 궁금했다. 40개 문항(실제는 38개 문항) 중 10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의 설문 결과, 노동권에 대한 탄압을 중심으로 한 사안들이 독자들의 기억에 생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인권10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창립,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무죄선고, 조각간첩 신귀영씨 사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소수의 문제 또는 사회적 빈곤층과 약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즉, 여성문제, 장애인, 이린이, 철거민,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것이다. 또, 일련의 유엔의 권고와 결정,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문국진씨 사건 1심 승리, 부산 강주영양 사건 등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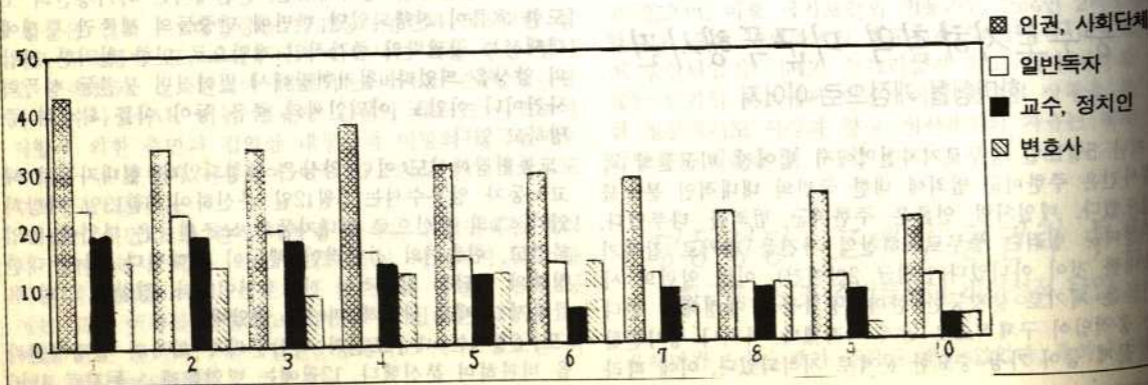
변호사들은 주로 법제적인 측면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항에 많은 응답을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인권하루소식>은 보다 사회권에 대한 인권소식을 개발,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제로 삼는다.

<순위별 인권 10대 뉴스>

- ① 5.18특별법 제정 ②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③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 ④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등 석방 ⑤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⑥ 부여간첩과 공안한파 ⑦ 충무로지하철역 미군폭행사건 ⑧ 민주노총 건설 ⑨ 노동탄압에 잇따른 죽음으로 항거 ⑩ 외국인 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도표로 본 설문대상별 10대 뉴스 반응도



인권하루소식

96년 1월

(제556호 - 제574호)

병역특례 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우정밀(사장 권오준)과 대우정밀 노동조합(위원장 조기수)은 3일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7명을 97년 1월 1일부로 전원 원직 복직시키고, 고 조수원씨도 95년 12월 14일(사망 1일 전)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대우정밀 노사는 이외에도 회사측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 및 장례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에 참석하는 조합원 전원을 장례 행사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5개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대우정밀 노사는 병역특례해고노동자 7명을 우선 대우중공업에 1년간 파견근무케 한 후 97년 1월 7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여

의도 민주당 서울시지부당사에서 병역특례 해고자로 4년 6개월간 수배를 당해온 고 조수원(당시 29세)씨가 목을 매 자살한 이후 19일 만에 병역특례 해고자 문제의 해결에 이른 것이다. 대우정밀이 이런 노사합의에 이름으로써 3명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를 두고 있는 풍산그룹도 곧 이와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중 씨의 집 앞 등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또한 경남 양산의 대우정밀에서는 노동조합이 매일 비상총회를 열었고, 특히 3일에는 전 조합원의 작업거부로 이어졌다. 이번 노사합의도 3일 노조가 작업거부에 들어간 직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해방열사 고 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기 등)는 5일과 6일 서울과 부산에서 고 조수원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5일 낮 12시에는 서울역에서 추모대회, 오후 3시에는 여의도 백화점 민주당사 앞에서 약식 추모집회를 갖는다. 6일 오전 9시에는 대우정밀 사내에서 영결식을 갖고 낮 12시에는 부산역에서 노제를 지낸다.

조씨의 장지는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등이 묻힌 경남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다.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미군에게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시민이 정당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일주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거주하는 이영직(25)씨는 지난 94년 10월 17일 새벽 2시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 하려던 미군들을 제지하다 미군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때 이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하체를 쓸 수 없는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

나 미군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 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2백만원을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그나마도 미군이 우편으로 보낸 문서는 한달이 넘어서야 도착해 이씨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이씨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미군의 행태를 참을 수 없다”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천막농성에는 동두천 민주시민회 회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조수원씨 전국노동자장 5,6일 서울과 부산에서

한편, 병무청의 병역면제 등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이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자 지난 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쇠사슬 농성을 벌여온 대우정밀과 해고노동자들은 연말연시 기간동안에도 농성을 계속했다. 매 일 1백명의 노동자들은 대우그룹 본사와 대우계열의 힐튼호텔, 대우그룹 회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인권하루소식> 애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게 뜻하는 일 모두 이루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분 총목차(538-55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538	12/1	1	전국연합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간첩'사건 조작의혹 나서/민주노총 강경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2·3	<인권하루소식> 95년 11월분 총목차(516-537호)
539	12/2	1	학교 인권교육 철저히 요구된다, 유엔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2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인/김철 5.18 재수사 인대 5.18비대위등 비난 성명/이덕인씨 사인규명 촉구, 노운협·KSCF성명/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안기부 박충렬씨 변호인 접견 불허
		3	<자료>11월25일 발표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인권간행물
540	12/5	1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씨도 접견 거부당해/법민련 강희남씨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2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주간인권호름
541	12/6	1	국회·5.18비대위·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부여, 5.18비대위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법민련 구속 전창일씨 준항고장 제출
		2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방문/안기부, 박충렬씨 의사검진 거부/이인영씨 구속정지 허인회씨 8일째 단식/수녀 1천6백여명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 평화행진, 일본 대사관에 편지 전달/이덕인씨 사인규명 촉구, 사건일지정리
		3	<자료>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자료>아동권연대회의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542	12/7	1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병역특례해고 해건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2	<인디뉴스>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씨를 만나-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의 인기 희망/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5.18비대위 특검제 도입,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
543	12/8	1	김관송씨 박충렬씨 변호사 접견 거부 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	국제인권소식-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3	<자료>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4 -아시아 인권상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544	12/9	1	안기부 '간첩'관련 제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5.18비대위 오늘 전국집회
		2	2차대진후 공포로부터 인간보호선언-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남향숙)
545	12/12	1	호주노조들 권영길위원장 구속 항의집회, 각 노조들 김영삼 대통령등에 계속 항의편지/반인권적 관행 철폐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전국연합, 최규하씨 증인 촉구 검찰 최선 다해야/참여연대 법률상담 시작
		2	노점상 이덕인씨 타살? 비상대책위 의문제기/<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양심수 없는 세상 함께 만들자 다짐/주간인권호름
		3	<인권하루소식> 통신 서비스 시작,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 자료목록까지
546	12/13	1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법원, 불법수사관행 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2	여연,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5.18비대위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5.18진상규명·5.6공 잔재청산·민주개혁 촉구/세정치국민회의 고이덕인씨 사인조사/청년단체, 전두환씨 단식 국민우롱 안양교도소 시위/장기수 북송회담 제안, 불교인권위 내년 1월

<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분 총목차(538-55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547	12/14	1	경원대 재지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씨 92년 하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임신8개월 고예순씨 구속적부심 기각
		2	<자료>노태훈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영장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5.18광주공대위, 최규하씨 5.18등 증인 촉구/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검찰 결정 불복 항고
548	12/15	1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각 정당에 제출/대검찰청, 유서사건 제하고 기각/이덕인 대책위, "민중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 제안/분신 경원대생 사망
		2	국제인권소식-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자행,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중지 촉구/민주노총 설명회 가져
		3	<자료>11월25일 발표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인권간행물
549	12/16	1	법원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2	귀향모임, 중국교포 산재보상·채불임금 신청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유가협,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최규하씨 집 앞서/인권간행물
550	12/19	1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고 조수원씨 사망 이후 해고자문제 전면부상/아시아연극인 페스티벌 6개국 참가 열흘간 열려/김태년씨 석방 탄원운동
		2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글-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주간인권호름
551	12/20	1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2	아동학대에방협회,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방지법 필요/박충렬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밝혀/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등 특별법 성명/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552	12/21	1	허인회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민주노총, 정부 제소 ILO 87호 조약 위반
		2	민주노총,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 조수원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10대 뉴스/법민련사건 이천계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경원대생 경찰청 시위 고문 책임자 처벌 요구
553	12/22	1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재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성명
		2	서울지법, 총무로지하철 폭행사건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농성자 12명 경찰 연행, 명동성당 농성 무기연기/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행사와 동정
554	12/23	1	노동법 개정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겸대통령에 서한/조수원씨 추모대회 예정 23일 서울역 광장에서/무노동 무임금 철폐촉구, 전국연합등 대법 판결 비난
		2	법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양심수 특사제의 비난, 천주교인권위 논평/추운 겨울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다
555	12/27	1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 대우그들 복지방침 철폐/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2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우성호 선원 귀환 환영, 제야 남북대화 재개 기대/주간인권호름
		3·4·5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병역특례 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조수원씨 장례행사 원천봉쇄

추모 노제없이 오늘 대우정밀에서 영결식

95년 12월 군문제 해결과 복직 무산에 항의하며 목매 자살한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자 조수원(29)씨의 추모제가 경찰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노동해방열사 고 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영길등 4명, 장례위)는 조씨가 숨진지 22일만인 5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에서 발인 후 서울역과 고인이 평소 생활해 온 이의도 민주당에서 추모제를, 6일에는 부산 대우정밀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영결식을 갖고 부산역 광장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대규모 인원이 모일 부산역 광장 노

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장례식은 가질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 영안실 주변을 둘러쌌다.
장례위는 5일 오후 1시 학생, 노동자등 1천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조기순 대우정밀노조 위원장은 "우리 모두 조수원이 되어 노동악법철폐를 위해 총단결하자"며 "수원이를 가슴에 묻고 투쟁하자"고 말했다.
장례위와 경찰측은 이날 오후 5시경 부산역 광장 노제를 취소하는 대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추모제 봉쇄해 조씨의 장례식은 추

모제 없이 부산 대우정밀 영결식만으로 열리게 되었다.
고인의 장지는 경남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이다.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서울지법 배상하라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사당의원 원장 김중구씨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나현규씨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들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해도 경찰이 긴급구속장제시등 적법한 절차없이 병력을 병원에 투입,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긴급구속요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등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찰이 범인의 검거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수색을 벌여왔던 관행에 제동을 가한 것이어서 이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나씨등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부 항의방문을 갔다가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당해 사당위원에 임원했다. 경찰은 나씨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당의원 원장 김씨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은 사당의원을 경찰병력으로 에워싸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또 경찰병력을 병원에 진입시켜 나씨를 연행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사당의원 원장 김씨 등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노점상 1백여명 연행

5일 오후 1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덕인씨 사인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려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4백여명 가운데 1백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로 가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 집결했다 연행되어 현재 서부, 은평, 중랑경찰서에 유치중이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인권하루소식> 애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게 뜻하는 일 모두 이루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고 조수원씨 죽음에서 장례까지>

- 95년12월15일 민주당 서울시지부 여의도백화점 6층 중앙계단에서 목을 맨 채 발견.
- 18일 해고자등 신한국당사 앞 쇠사슬 농성
- 20일 부산 대우정밀 조합원 2백여명 상경, 신한국당사 앞 규탄 집회
- 21일 해고자등, 병무청 앞 항의투쟁
- 23일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 수배해제/대우그룹- 조수원씨만 복직하고 다른 해고자들 복직 불가 주장
- 24일 병역특례해고자 12명 명동성당 계단에서 대우그룹에 항의하는 쇠사슬농성 시작
- 26일 부산 대우정밀 노조, 무기한 비상총회 돌입,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자택 항의방문, 힐튼호텔로 비 투쟁
- 96년 1월1일 대우그룹 원직복직 구두합의
- 3일 원직복직 합의서 완성
- 5일 발인

<자료> 박종철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원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점과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격적 법익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실는다.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이 박종철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박씨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조한경, 강진규 등 2인인 것처럼 축소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의 원심판사와 같은 진상은은폐행위로 인하여 박종철씨의 부모이거나 형과 누이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박정기(고 박종철씨의 부친)등이 87년 1월15일 오후3시경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 받은 것은 위 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원심의 실시이유(원집자주-93.7.2 서울고법 선고 내용중 '유가족의 신원권 인정' 부분)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진상을 은폐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이 범인들을 도피시켜 진상을 은폐한 경우, 위 피고

들이 부하인 피고 황정웅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 그밖에 원고들과 박종철과의 신분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각 위자료액은 적정하고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진보적 원간지 <말> 노조(위원장 신준영)가 지난 3일부터 노항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말지 노조는 "현재의 이사진과 노사장이 불법인사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지난 85년 이후 독자들로 부터 사랑받은 말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사협동경영체제였던 말지가 노항기 사장등 일부

해직연론인들의 분파행위로 민주연론운동협의회의 주주권 행사가 마비되었다"며 노씨를 비롯, 이사진 3명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말>지 노사는 지난해 12월26일 간담회를 갖고, 1년 6개월간 진행되어온 <말>지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사진의 무성의한 태도로 오히려 노조측이 강경한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
<말>지는 지난 85년 진두환 정권 하에서 해직 연론인들이 모여 부정기 간행물로 탄생하여 86년 보도지침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은 연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한 일로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말지의 승리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경영진은 지난해 신준영 노조위원장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행했다며 정식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5년

○ 행사와 동정 ○

- 박종철열사 기념 토론회-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 일시:1월12일(금) 오후3시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발제:박원순/토론-박계동, 박래군, 이한구, 황인성
· 주최: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766-8459)
- 법률시민대학 특강
· 일시:1월8일(월) 오후6시50분
· 장소:한국사법정의연구소 교육관(☎ 575-9101)
· 강좌:인권과 형사소송법(박희대)/ADR-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양병희)
· 주최:법률소비자연맹(☎ 523-8760)
-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식
· 일시:1월9일(화) 오전10시
· 장소:참여연대 사무실
· 문의:796-8364
-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해산식
· 일시:1월9일(화) 오후2시
· 장소:명동성당
· 문의:319-5147
- 배급자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말 대법원 판례집, 법원공보 등 5백여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간사가 1월1일 홍콩,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조사를 위해 출국했다. 김씨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5일경 귀국한다.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 서비스

- 이용하시는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1. 현재의 접속 방법이 복잡한 관계로 1월부터는 약부호 hnews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나, 하이텔이 1월 동안 메뉴를 정리하는 관계로 2월부터나 약부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2. 현재의 접속방법은 01410으로 하이텔을 접속한 후 oland를 입력하여 13-->8번 순으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3. 현재도 주제어에 의한 본문검색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재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검찰, 박총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8일 박총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담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국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내용을 주로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소지 담독한 것과 집회와 재야단체의 행사에서 발언등에 주로 의존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위의 혐의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의 집시법 혐의는 94년 3월19일 성남에서 열린 UR 반대 집회를 집회했다는 혐의를 것이다.

이런 검찰의 기소내용은 안기부가 지난해 11월15일 이들을 연행하면서 "성명불상의 북한 간첩에 인자불상 경에 포섭돼 회합통신을 해

왔다", "부여간첩 김동식이 이들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특히 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 태도를 비난했다.

다시 타살 의혹 제기 이덕인씨 사인진상조사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 진상조사위)는 최근 이덕인씨 사망원인 1차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씨가 실종될 당시 주변에 2백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발견시에도 손이 줄에 묶여 있었고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얼굴과 양쪽 어깨에 폭행을 당한 명이 있던 것등에 의문을 제기했

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이 시체부검 당시 더 이상 부검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상처부위를 모두 도려낸 점등 부검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 발표

95년 1월9일 내팔인 사업 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농성 1주년을 기념하여 '외국인노동자인권대책협의회'와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오늘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농성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연수생제도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난달 구독료 미납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밀린 구독료를 아래 지로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박총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실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총렬의 처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변호인이 된 자로서 위 박총렬 95년 12월6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 이기범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어 간 사실, 이에 위 박총렬을 접견하기 위하여 ① 청구인 윤기원은 같은 날 오후4시40분 이기범 검사에게 위 박총렬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 허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므로 ② 청구인 김진국, 이원재가 다음날인 같은 달 7일 오전 10시 ③ 청구인 임종인, 이덕우가 같은 달 7일 오전11시 ④ 청구인 김명환이 같은 날 7일 오후3시 각각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역시 위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허용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위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절차상 또는 시기상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법 제90조, 제91조의 규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즉시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신청인들의 위 접견신청 당시 검사가 위 박총렬을 수사하고 있었던 중이므로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수사중일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한된다는 법률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수사중일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검사는 위 접견신청 이후 위 박총렬에 대한 접견이 허용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후 접견은 서울구치소장의 허용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라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문기재 각 접견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위 각 접견불허가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95. 12. 16
판사 유원석

주/간/인/권/호/름

(95년12월25일부터 96년1월7일까지)

<12월25일>
재정경제원, 산업안전·환경·보건위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개 분야 27종에 이르는 의무고용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1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행 북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채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전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선거구제 위헌 결정/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철군

<12월28일>
대구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간치상범 빌리 이병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동대책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공정재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 서명운동/검찰,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혐의자 안무혁, 박준병씨등 39명 출국금지/유엔의 한 당국자, 한국과 중국이 북한 식량원조 통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

<12월2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노조 불법파업 회사측 자급 회사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종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 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원 정선군 고한읍 삼척탄과 중앙개발노조 광원 70여명 농성 돌입/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헌법소원 청구기간 지났다며 각하

<1월3일>
대우정밀 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96년 1월1일자 전원 복직 합의/대구대 직선 총장 당선자, 해임 물의

<1월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 박종철씨 고문 배상판결 확정 밝혀져/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5.18 당시 최예섭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핵심인사 오는 8일 추가 고소키로/독일정부, 1월27일을 나치희생자 추모 일로 선포

<1월5일>
서울지검 5.18특수부, 신군부 조직적 역사왜곡 보안사 '5공화국전사' 극비 편찬, 12.12, 5.18 관련 불리한 핵심사료 폐기처분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총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리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

<1월6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경지 부장판사), 연차휴가 회사 허락없이 노동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고조수원씨 대우정밀서 영결식

<1월7일>
6개 중단 대표 오는 15일 회동 대북 민간지원 본격화, 정부 지원 촉구키로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산업제해와 의료보협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대부분의 연수생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학대를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물씨에 성금 전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불교인권위)는 9일 오전 11시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지난해 11월 29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박석물(47)씨 가족에게 영치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진관 승려는 "박씨 부부가 불교인권위 임원이기도 하지만, 박씨가 심부전증과 협심증을 앓고 있는 딱한 사정이라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중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나 임산부마저 구속하는 것은 너무도 무자비한 행위"라고 수사당국의 무리한 인신구속을 비난했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협적용을 받고 있지는 질문에 응답자 중 17%만이 적용받고 있다고 답해 의료보협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연수생의 98%가 직접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다고, 31%가 작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답했고 33%가 강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 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준다"며 연수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97년 UN이 정한 '이주노동자의 해'를 계

또, 이 자리에서는 박씨와 같은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진창일(75)씨의 부인 임인영(62)씨가 나와 진씨등 범민련 관계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단원서를 발표했다. 또, 진씨등이 수감되어 있는 성동구치소의 행형실태에 대해서도 △중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추운방에 수감하는 것 △의료시설의 부족과 간호원 밖에 없는 의료실태 △형편없는 부식 △추위에 떨 수 밖에 없는 관복의 지급 등 10가지 사항을 폭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호에 임씨의 단원서와 성동구치소 행형실태에 대한 글을 게재한다.

중부지역당 재건 협의 강원도경 9명 긴급구속

9일 오전 5시-8시 춘천, 강릉에서 사회활동 중이던

김동규(29)씨등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경 보안수사대에 긴급구속됐다.

이날 오후 6시경 연행자들은 면회한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중부지역당' 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 김동규(29, 관동대 졸업), 김영옥(작가), 박장규(34, 강원도 농민회 회원), 방광덕(목사), 이용인(강원도 농민회 정책실장), 전순표(43, 동력 기획 대표), 황관중(33)

부패추방운동 본부 발족 참여연대, 2천년까지 전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 본부장 김창국(변호사) 발족식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각 분야 시민현장 제정운동 △'시민의 눈'을 조직하여 일상적인 부정부패 감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난달 구독료 미납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밀린 구독료를 아래 지로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해설>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안기부가 지난 4일 박충렬(36)·김태년(30)씨를 기소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제5항(이치표현물 소지) 등이었다.

박씨등이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0일만의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검찰에서 30

일간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등이 "90년 일차미상경 북한에서 납득된 성명불상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 재야운동권에서 활동하며 "미리 약정된 통신조직을 통해 분상내용의 지령을 수신하고 그 지령사항 실천결과 등을 북한 공작 조직에 보고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 연락

하는 등 암약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안기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고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 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철훈씨와 관악산에서 이적단체 가입을 결의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회합통신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 가입등의 혐의도 모두 빠졌다. 김씨의 경우도 처음 김씨의 사무실 천장에서 무전기를 발견했다, 공작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씌우려 했으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두 빠져 버렸다.

<현장스케치>

1백75일만에 끝낸 5.18 명동성당농성

오랫만에 명동성당이 깨끗해졌다. 아니 무언가 좀 허전해 보인다. 있어야 할 무언가가 빠진 듯하다. 성당입구 한쪽에 커다란 비닐로 덮여 있던 천막이 사라졌다.

바로 95년 7월 19일부터 명동성당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한 '5.18학살자 재판회복을 위한 농성단'이 1백75일만인 9일 오후 1시 해단식을 갖고 마무리한 것이다.

본래 해단식은 95년 12월 21일에 가질 계획이었으나 이날 진두환씨 경찰병원입원 항의방문을 나갔던 농성자들이 모두 연행되어 연기되었다.

이날 해단식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차분하고 어두웠다. 명동성당에서 무더운 여름과 산을 에는 겨울을 맞고 고생을 마쳤음에도 기뻐하거나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뒤에서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5.18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것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 질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박영순(5.18 부상자동지회장) 농성단장은 "우리가 바라던 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국민위원회 설치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정부의 5.18관련자 처벌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고 여러 번 힘주어 강조했다.

1백75일의 긴 농성기간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명동성당을 떠난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해단식 끝 부분에 갑자기 등장한 꽃다발 증정식에 일어 있던 행사장 분위기가 밝아졌다. 또 농성단이 지금까지 농성에 필요한 장비와 전기이용등을 도와준 박준씨와 매일 명동성당 집회에 참가한 박기호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농성을 통해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축스리위하며 농성장을 찾아오고,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와 하며 서명을 하던 시민들을 만나며 이들이 더욱 깊게 느낀 것은 5.18특별법이 누구 하나의 의지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국민들의 노력과 땀과 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할 수 없다.

이에 비춰 보면, 안기부는 불법수사를 한 셈이 된다. 물론 안기부는 재판과정에서 회합통신 혐의 나아가 간첩 혐의까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안기부법의 개정취지를 전적으로 위배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즉, 안기부의 무리한 인신구속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덕우 변호사는 "안기부가 실령 자신들이 회합통신 혐의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해도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인신구속을 하고, 그것을 무리한 수사방법을 동원해 입증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안기부의 고문수사에 대해서는 박씨등 구속자들의 발언에 증거가 없어 문제가 있지만, 박씨등의 재판과정은 다시 한번 안기부의 불법수사 여부가 심판대에 오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바로잡습니다 --

9일자 1면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중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8일... 기소했다"는 "4일... 기소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 서비스

이용하시는 독자들께 알립니다.

- 1. 현재의 접속 방법이 복잡한 관계로 1월부터는 약부호 hnews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나, 하이텔이 1월 동안 메뉴를 정리하는 관계로 2월부터나 약부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2. 현재의 접속방법은 01410으로 하이텔을 접속한 후 oland를 입력하여 13-->8번 순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3. 현재도 주제어에 의한 본문 검색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성동구치소 재소자 처우 개선키로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약속 받아내

성동구치소의 재소자 처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성동구치소의 이사에 수감중인 정치범 한미선(34) 씨 등 7명은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9일까지 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구치소측이 제공하는 음식이 상했거나 악취가 나 먹을 수 없고, 추운 겨울에도 담요조차 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방이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도 유담포(따스한 물을 넣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기구)에 따스한 물을 조금 밖에 주지 않아 더욱 힘들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구치소측이 충분히 관복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솜옷을 다 벗겨 갔고, 사이즈도 다양하지 않아 불편하고, 따뜻하지도 않다"며 동절기가 끝나는 오는 4월까지 솜옷을 그대로 입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동구치소측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농성자들과 만나 관복 이외의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중인 전창일(75)씨의 부인 임인영(62)씨도 9일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동구치소의 인권유린'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 성동구치소의 재소자 처우문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씨

는 "전씨가 2백20까지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신관보다 난방이 안되는 구관에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전씨가 의무과에서는 20일동안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피병이라며 치료도 안해 주었다. 어느 환자의 경우 계속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치료를 해주지 않다가 갇힌 결과 간암 판정이 나와서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성동구치소측의 무성의한 재소자 처우를 비난했다.

또한, 임씨는 전씨와 출소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책은 냄새가 나는 생선을 주고 △책은 감자를 빻기지도 않은 채 된장국에 넣어 끓여 주며 △날미역은 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찢어주고 △시금치도 씻거나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삶아 흠이 섞이고 △익지 않은 밥을 줄 때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8월 구속되었다가 11월29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영생(29, 전국노점상연합회 간사)씨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박씨는 "성동구치소는 유난히 재소자 처우가 열악한 것 같다"며 △교도관들이 일상적으로 반말을 쓰며 △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징벌을 가하고 △감방 면적에

비해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며 △시승과 시갑을 남용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런 항의가 계속되자 성동구치소측은 11일 임씨등을 만나 재소자 처우문제 등에 대한 지난 6일의 여자 수감자들과 한 처우개선 약속을 설명하고, 그외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 구속자들 혐의 부인

지난 9일 연행된 이용인(34,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실장)씨 등 7명은 현재 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재건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강원도 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측은 이들이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92년 당시 조선노동당 하부조직인 '11.11동맹(일명 농민동맹)'의 총책임자로 구속된 최종만(34, 강원대 졸업), 이강훈(35, 당시 강릉 영곡교회 전도사)씨와의 관계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하지만 연행자와 가족들은 조선노동당 입당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가족들은 "연행자 가운데 황관중(33)씨는 94년 이적표

현물 소지혐의로 실형을 살고 95년 8월 출소했는데, 경찰이 말한대로 이들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면 이미 그때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4원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10일 연행된 7명 외에도 중국에 유학중인 홍재경(43, 강릉민주청년회 1대 회장)씨를 구속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한교협 인권위)는 10일 이번 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협 인권위는 이번 연행이 "정부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이라며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70여명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간첩' 김동식 법정증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 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해왔었다. 다음 재판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실.

<독자투고>

전창일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임인영(범민련 사건 구속 전창일씨 아내)

간첩과의 접촉을 가장 무서워하던 제 남편에게 간첩죄를 씌워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이 일어나듯이 간첩 누명까지 씌워 이용하니, 선거에 이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전창일씨가 간첩에 저촉된다는 부분은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 차장인 박용씨의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평소에 도청이 가능한 범민련 사무실과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94년 조문사건으로 전창일씨가 구속되어 재판받을 때 판사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합법화된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은 것을 전부 도청하여 간첩죄에 적용하다니, 도청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첩질을 하는 간첩이 세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박용이라는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창일씨도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해명사가 오리라 믿습니다.

셋째, 95년 11월29일 새벽 전창일씨가 진 간첩죄라는데 것이 국내 동향을 보고했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동향을 파악 못해서 전창일씨를 통해서 그것

도 정부에서 도청하는 전화로 파악케 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안기부에서 도청한 자료를 보니까 범민련 동향과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고 편지 왕래, 전화 통화가 허락된다면 전창일씨가 지었다는 간첩죄가 통일운동에 크나 큰 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삼 정권은 남북대화를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북한정책에 실패한 점 때문에 국민의 표를 많이 얻지 못하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던 재야 청년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범민련 사무실과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둘째, 범민련 재정 수입 마련과 홍보 차원에서 범민련 뺑지와 달력을 만들어 일본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판매했는데 받은 돈 3백만 원을 은행에 넣자마자 전창일씨는 조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그후 제가 그 돈 3백만원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은행에서 찾아 써 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증거 제출용으로 증명을 때어 해명이 됐는데도 이것이 간첩죄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써 버린 돈은 남편이 백만원씩 세번으로 나누어 범민련에 갔었습니다.

셋째, 95년 11월29일 새벽 6시 전창일씨는 안기부원에 끌려가고 나머지 7명이 남아 가택수색을 세시간 반 동안이나 벌였습니다. 옥상에 있는 장독대까지 열어서

보았으나 단과 라디오도 안나오고, 간첩죄에 적용시킬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서울대 노동절 기념식장에 붙었던 플래카드 내용을 박용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국내 정세를 알려 주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범민련이 합법화되어 민간차원에서 남북 대화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측 범민련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남측에 대한 비방방송도 이젠 중지하고, 조문·조진을 안보낸 김영삼 대통령도 용서하고, 화해의 남북회담이 열려 서신왕래와 전화통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남편이 일본 공동 사무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았다는 간첩죄도 무죄가 될 것이니까요. 평화통일만이 염원이 되어 인생을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감옥을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병들어 버린 범민련 노인들도 하루 속히 석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1.9.
전창일 아내 임인영 올림

경원대 교수, 학생 폭행 장현구씨 사건 미공으로

경찰에서 당한 고문후유증으로 지난해 12월4일 분신 같은 달 14일 승진 경원대생 고 장현구씨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학교측 비방선진이 계속되고 있다. 경원대(총장 김원섭)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갖고 "원서교부기간동안 대책위가 배포한 유인물 때문에 6천명이 응시를 포기해

1억5천만원의 피해액을 냈다"며 대책위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낮 12시30분경 회의를 마친 교수들은 교내를 돌며 대책위가 붙인 플래카드 10여점과 대자보 3백여장, 걸개그림을 찢고 이를 항의하는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했다. 교수들은 "인륜도 모르는 학생들이 한 달이 넘도록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다"며 빨리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자가 죽었는데도 조문 한 번 오지 않은 채 아직도 여전히 학교의 금전적 이익만을 따지고 있다"며 교수들의 이런 행동이 바로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탄압 대책기구 구성키로

「범민련」, 「진보민청」,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철거민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10개 사회단체는 10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가칭)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날 단체들은 대책회의의 사업으로 제안된 △사건대응 △사안별 대책위의 연계 △구속된 양심수들에 대한 지원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책회의 공동의장과 집행위원장을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번주 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범민련, 구속자에 염서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는 지난해 11월29일 구속된 28명의 범민련 관계자들에게 염서보내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염서는 총 1만장을 제작했다. 염서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762-1238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최근 안기부등이 박충렬, 김대년씨등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전순표(43, 동녕기획대표)씨등 5명이 11일 새벽4시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회 정책실장), 김동규(29, 전 관동대총학생회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

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풀려난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없이 92년 구속된 이씨의 조서만을 가지고 재건기도를 추궁했다.

박정규(34, 강원도농민회)씨는 경찰의 조사가 "이강훈이 이렇게 말했다. 이강훈이 그렇다는데 사실이 아니냐"는 식의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씨의 진술서에 어떤식으로든 이름이 나온 사람을 연행한것 같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조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행된 이들은 대부분 이강훈씨와 좁은 강원도 사회운동 과정에서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

구속된 이용인씨는 92년 당시 이강훈씨의 포섭대상으로 발표되었을 뿐 조사를 받지 않았고, 김동규씨는 이강훈씨와 함께 강릉지역 신문 동년신문사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 강원도

연맹」(전농 강원도연맹)과 박씨등 풀려난 이들은 11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부당한 긴급구속 수사에 항의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우익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조직극"이라며 "밀정한 사람을 마구 잡기로 잡아들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불법수사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확인도 없이 경찰의 발표대로 보도한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결 재소자 출결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미결수들이 영하의 날씨에 여름 출결 옷을 입고 추위에 떨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구치소·교도소 미결수들의 복장을 일제히 바꾸고, 미결수들이 입던 관복과 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결수복은 법무부측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전국 미결수 중 50% 전후가 구입할 수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 출결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받을 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체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 때 평상복을 입게 하면 되는 것을 본말을 전도해 평상복을 입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은 대신에 미결수들의 복장을 평상복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률적으로 바꾸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 손민아(32)간사는 "졸속적인 교도행정의 표본"이라며 "공공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치지 않는데 맞게 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방침을 적용, 물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도행정이 재소자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다.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 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 제라는 것인지 △제3자개입

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등 13개항에 대해 검찰이 석명할 것을 요구,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1일 창립된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94년 6월 철도,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1년6개월간 수배되었다가 지난해 11월 23일 구속되었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린다.

<박충렬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이번에 나는 전에 없이 겁을 먹고, 당황스럽고 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95년 11월15일 새벽 2시경 연행되었을 때 왜 연행되는지 이디로 연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쿵쿵 잠을 자다 연행되었고 가서 보니 안기부였고 안기부가 내국동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2일 후에 있는 구속적부실에서 나에게 씌워진 혐의내용을 듣게 되고, 이후 안기부에서 제가 무전기 3대를 움직이는 말하자면 3개의 간첩망을 움직이는 두목같은 사람으로 몰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는 나는 더욱더 놀라버렸습니다. 혐의 내용대로 하자면 나는 89년부터 포섭되어 교묘한 활동을 하고 정관취이고, 그것도 3개의 망을 움직이는 대규모 간첩단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무전기 3대와 간첩단 두목 안기부 수사관들의 말이 황인오라는 사람이 무전기 1대를 움직였고, 이선실이 라는 사람이 무전기 2대를 움직였는데 너는 3대이니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야 무기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혐의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간의 수사, 재판관 행, 안기부의 악명, 끊임없이 상상되는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는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공포감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보니 내가 왜 무죄인가를 증명해야겠다는 압박감이 들게 되고, 안기부

를 이렇게 하면 이해시킬까 그것만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형실 수설하였습니다. 합리적 사고도, 판단력도, 의연함이나 당당함도 다 잃어버리고 고양이를 만난 생쥐, 호랑이를 만난 사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기부의 고도의 수사기법과 수완에 내 무지와 공포감이 가미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지만 나는 안기부원들이 내가 오랜 기간 무전기를 사용해 왔고 이번엔 김동식이 헌 무전기를 새 무전기를 바꿔주려 했다는 말을 듣고 무전기에 내 이름이 써 있거나 아니면, 무전을 주고 받을 때 내 이름으로 주고 받은 게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안기부를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동반자, 나를 거대한 간첩 혐의에서 구원해줄 사람들로 인식하였습니다. 2-30명의 수사관들이 번갈아가면서 1초도 쉬지 않고 퍼붓는 말들, 추궁들, 안기부의 입장을 수십 수백번 듣는 과정들이다 안기부에서부터 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지 않으면 내 삶은 무죄나 무기나 극에서 극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선에서 확률로 되어 버린다는 압박감이 같이 가세해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무섭다 무전기, 간첩, 북한, 안기부, 공작원, 김동식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들이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옵니다.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제 50일간의 조사가 다 끝나고 기소되었습니다. 잠도 자고, 신문도 보고,

<말>지도 보니 일상적 사고와 판단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두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20년 전, 아니 10년전에 연행되었더라면 아마도 완전히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내몰려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정도라도 된 것은 세상이 좋아진 덕분이므로 다행이라고 안도해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문민정부라는 시대에 간첩말만 듣고 무고한 사람을 파탄내고 그 고생을 시키더니 한 번 잡은 사람, 어떤 힘이라도 씌워서 이렇게 기소를 하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해 야 할지 혼돈스럽습니다. 더불어 나는 간첩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기 생활, 내 건강등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자 마음 먹고 있으니까요.

96년 1월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충렬

행사와 동정

- 문익환 목사 2주기 추모행사 -
- 문의: 통일맞이철천만겨레모임(☎ 313-8201)
- ☐ 통일외 집 현판식
 - 14일(일) 오후2시 · 장소: 수유리 고 문익환 목사 자택,
- ☐ 늦봄 문익환 목사 추모 강연회
 - 일시:15일(월) 오후7시 · 장소:홍사단 강당
 - 내용:금세기 내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한반도 주변 정세분석/96년 통일전국 진단
- ☐ 늦봄 문익환목사 추모 예배
 - 일시:18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기독교회관 강당
- ☐ 묘소 참배
 - 일시:18일(목) 오후1시
 - 출발장소:오전11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앞
 - 장소:마석 모란공원 고 문익환목사 묘소
- ☐ 제1회 늦봄통일상 시상식
 - 일시:18일(목) 오후6시 · 장소: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 1996년 한국언론 진단 세미나
 - 17일(수) 오후2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발제:15대 총선과 언론의 지역감정 유발(백선기)
 - 토론자:김성수(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이효성(성관대 교수)/이경일(문화일보 논설위원) 등.
 - 주최: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734-4100)
- ☐ 고 황인철 변호사 3주기 추모식
 - 일시:20일(토) 오후1시 · 장소:안성 천주교공원 묘원
 - 출발:오전10시 명동성당 앞
 - 주최:문학과학지성사/천주교 인권위원회/민변(☎ 777-0643)
- ☐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민생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12일(금) 오전11시 · 장소:조계종 총무원
 - 문의: 725-5025
- ☐ 미국 유학중이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오는 16일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다.
-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씨가 제13회 '96 여성동아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3시 충정로 동아일보 사옥 17층이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에 의한 타살가능성 주장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

「장애인 노집상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 진상조사위)는 12일 오전 11시 조계동 총무원 강당에서 이덕인씨 사인 1차 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위는 이씨의 사인이 검찰이 발표한 "수영 중 타살"이 아닌 "경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주장했

다. 이들은 근거로 당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이 익사했다고 보기엔 너무 깨끗한 점, 입고 있던 옷등 유류품이 없는 점, 손에 묵인 포승줄 등을 들었다. 또 그때 상황을 보아 굳이 수영을 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하대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바닷

물이 빠지고 있어 수위가 55-80cm로 있고, 물살도 세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수영이나 그로 인한 타살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경찰의 시신탈취와 강제부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관(불교인권위) 위원장은 "이 씨가 정말 물에 빠져 죽은 것이라면, 왜 경찰이 새벽에 병원에 쳐들어와 시신을 가져가고, 가족의 동의없이 부검을 했겠느냐"며 경찰의 개입문제를 지적했다.

진상조사위가 추측하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농성중 망루에서 내려온 이씨가 주위에 경찰에게 발각, 체포되었다. 추운 날씨에 하룻밤을 세워 신장이 날카로워진 경찰은 이씨의 기신을 제압하지 위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검찰이 이

러한 여러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익사에 초점을 둬서 수사할 방침이다"며 제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제수사를 요구했고 「새정치국민회의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변정수)도 지난 5일 인진지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씨의 어머니 김정자(52)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어머니 김씨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착하고 성실하다고 칭찬받던 아들이었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김씨는 "가난한 집안 사정을 돕기위해 노점에 나섰는데 먹고 사는것도 죄라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며 말을 잊지 못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덕인씨 사인규명
비상대책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집

14일 서울시립대
종강당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난달 구독료 미납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밀린 구독료를 아래 지로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주연사 박종철기념사업회」(회장 김승훈신부)는 '6월 항쟁 정신에 비추어 본 과거 청산,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토론회를 1월12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이 토론회에서는 김장권교수(숭실대)의 사회와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기본발제로 진행되었다.

박원순변호사는 "한국의 현대사는 백범 김구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등 미 해결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규명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말하는 과거청산은 프랑스가 나치에 부여했던 각개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직종에서 추방되었던것에 비해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했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부역자들의 처리가 실행된다면 현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권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박대군실장은 "5,6공 청산이 이루어 지기 위해선 양심세력에게 가했던 고문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청산을 외치는 문민정부조차도 간첩 조작과 고문을 행하고 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박계동의원은 김영삼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김정권의 과거청산과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모든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청산할 과거가 있는 한 과거청산은 계속된다"며 현재 과거청산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몇몇의 구속으로 그치는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기 위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노력을 기울였듯이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

해서는 양심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구치소장 10개
요구사항 개선 약속

변동윤 성동구치소장은 11일 오전 11시경 임인영(62, 범민련 사건 전창일씨 부인)씨등 양심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씨가 제기한 재소자처우문제 전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변소장은 임씨가 지적한 문제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시 재소자가 가족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임씨가 전해왔다.

임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동구치소내의 부식문제, 침구, 재소자에 대한 호칭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1월10일자 참조.

또, 변소장은 녹내장으로 고생하고 있는 광명군(71)씨를 조만간 서울대병원 외래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문 가혹행위 진상규명
장현구 군 장례대책위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학 목사 등 5명, 장례대책위)와 경원대 학생등 30여명은 12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상조사위 조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당징계등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명동, 가락시장 등에서 장씨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가졌다.

◆ 인권간행물 ◆

- 「참여사회」 96년 1/2호 - 참여연대
- 『여성의 눈으로』 96년 1/2월호 - 여성의 전화
- 주요내용: 1996년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해로/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2/배이정 '중국여성의 전화'-에심, 열심, 관심, 성심의 4심 실현을 목표로 등. 60쪽. 값 2천원.
- 5.18 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운동 보고자료집
- 주요내용: 투쟁일지/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한 항고장/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서 등. 78쪽.
- 『자주의 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21세기를 향한 든든한 이정표를 세우며/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과 향후 과제/한국청년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민주노총건설과 정치세력화의 과제 등. 208쪽. 값 5천원.
- 주요내용: 대특검-시민사회운동 96년 전망/비자금 근절의 제도적 해법(강경선)/한국에이즈보고서(에이즈퇴치 시민모임)/무역과 인권:블루라운드가 밀려온다/주검에도 인권은 있다(장해륜)/미국시민운동-시민운동단체, 제2의 정부(이승희) 등. 112쪽. 값 3천원.
- 『전국연합통신』 84호 -전국연합
- 주요내용: 2000년을 준비하는 첫째, 우리의 할일(이창복)/95년 '못된'보도 10가지 모음/96년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사회 전망(김성희) 등. 43쪽.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 서비스

이용하시는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1. 현재의 접속 방법이 복잡한 관계로 1월부터는 약부호 hnews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나, 하이텔이 1월 동안 메뉴를 정리하는 관계로 2월부터나 약부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2. 현재의 접속방법은 01410으로 하이텔을 접속한 후 oland를 입력하여 13-->8번 순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3. 현재도 주제어에 의한 본문검색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분신·사망

김시자씨, "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 등 주장

지난 12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지부 노조위원장 김시자(36, 여)씨가 13일 사망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2시경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태일, 한전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도중 "어용노조 즉각 퇴진" "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 수 축소 지시 철회"를 외치며 분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광발전소 위원장 오경호씨와 김씨를 규약 위반, 조직 분열 책동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결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김씨는 이 회의에 참석 오씨와 자신등 민주적 성향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분신했다. 현재 김씨는 한일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김씨는 84년 경기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일병원에 입사, 89년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90년, 93년 노조위원장에 두 차례나 당선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서왔다.

한일병원 노조는 '전력노조' 김시자씨 분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로, 대책위)를 구성, △최태일 위원장등 노조 집행부 사퇴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김씨의 분신원인인 책임은 본질적으로 한전, 한국통신등 정부투자기관 공공노조에 대한 정부의 노동통제정책과 어용노조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태일(60) 한전노조위원장 임기 도중 정년퇴임

을 맞이했으나 회사와 합의하여 정년을 3년 연장하고, 자신과 뜻이 다른 지부노조위원장을 전임해제시키거나 인사발령을 시키는 등 회사측과 합심해 탄압을 일삼아왔다"며 최씨의 퇴진을 주장했다. 최태일 본부위원장이 김씨를 징계하려한 이유도 2월1일부터 있을 지부위원장 임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5일 '가구 규모별 월 표준생계비'를 조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신 남자는 87만3천9백80원 단신 여자는 87만8천4백42원, 2인 가구 1백34만8천1백32원, 4인 가구 2백35만9천9백3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1천1백3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와 전국 17개 지역의 시장물가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표준생계비는 민주노총 소속 9백여개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요구의 산출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표준생계비와 조합원의 현행 임금평균과의 격차가 37.8%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5% 내외에서 96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생계비는 '한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비용'을 말한다.

4인 가구 표준생계비 2백35만9천9백30원 민주노총 조사,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5일 '가구 규모별 월 표준생계비'를 조사,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신 남자는 87만3천9백80원 단신 여자는 87만8천4백42원, 2인 가구 1백34만8천1백32원, 4인 가구 2백35만9천9백3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1천1백3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와 전국 17개 지역의 시장물가 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표준생계비는 민주노총 소속 9백여개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요구의 산출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표준생계비와 조합원의 현행 임금평균과의 격차가 37.8%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5% 내외에서 96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생계비는 '한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비용'을 말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80년 제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르게 하라

<편집자주>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 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제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여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받는 오늘, 그들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불법적인 제임포고령으로 십수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은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한다. 우리는 80년 당시 국회가 해산되고 언론마저 이른바 신군부의 서술에 눌러 침묵할 때 수천의 광주시민을 살상한 군사반란과 내란 세력에 온몸으로 저항했다는 자긍심과 인젠가는 역사의 범죄자들이 단죄받고 우리의 민주화 투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지난 5·6공하의 암울한 시절을 살아왔다. 다행히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의 열망이 '5.18특별법' 제정이라는 국민적 승리를 이끌어 내어 이제 우리의 처절했던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미야로 떠돌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좀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

과 내란 세력 그리고 독재에 대해 항거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와 법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고 귀감으로 인정받을 때 바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신군부에 대항하였던 많은 사람들, 12.12에 맞선 참군인들, 해직언론인들, 해직교수들, 학생운동관련 제적자, 강제징집자, 그리고 수배자들까지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국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과 내란의 수괴가 정권을 잡았던 5·6공하에서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과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투쟁을 전개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정신에 입각하여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진행중인 현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며 다시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에 항거하다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해직, 제적되고 수배받고 구속당 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정부는 5·6공 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유신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그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주/간/인/권/호/름

(96년1월8일부터 14일까지)

<8일>(월)

검찰. 5.18특별수사본부 5.18 당시 성폭행과 화염방사기 공격 확인/검찰, 박충열·김태년씨 회합통신 혐의 제외하고 단순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

<9일>(화)

강원도경 보안과, 강원지역 재야단체 7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송기숙씨등 5.18 해직교수 19명 80년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고소/민주노총, 생활실태조사에서 노동자 1명당 부채 1천여만원이라고 밝히/채권반군,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자치공화국 키즐야르시의 한 병원 점거 3천여명 인질극

<10일>(수)

80년 민주화운동 관련 제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이우재씨등 20명 80년 제임포위반 사건 서울고법에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등 파열케/법무부, 수행자분류처유규칙 개정 을 2월부터 편지발송 자유화 등 취하기로/성폭력상담소, 95년 성폭력 상담 1천21건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법원, 클린턴 대통령 성희롱 재판 임기중에도 가능하다고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언론인 강제체적 조사

<11일>(목)

강원지검,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 5명 무혐의 석방/부산지법 형사1단독, 북한대학생과 펑시밀리 서신교환 무죄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80년 비상제임 확대신군부측 독단 결정, 확인/채권반군 러시아 국경주민 2백명 억류 대치, 인질 처형 시작/멕시코 특별검사, 94년 동민대학살 연루 혐의 정부관리-경찰관 21명 체포

<12일>(금)

광주지검 공안부, 광주 화정동에서 5.18 압매장 의혹 현장조사/아시아경제협력체(아펙) 18개국 회원국 노동장관들, 역내회원국간 '유자격 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교류 촉진 등에 합의/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지도자들 아시아 인권 문제등 거론할 것으로 예상

<13일>(토)

검찰, 전두환씨 80년 광주 강경진압·인론통폐합 지시 확인/서울지법형사9단독, 불고지 혐의 구속 허인회씨에 보석 허가/한일병원 노조 위원장 김시자씨, 분신 노조위원장 직선제 주장 정계에 항의 분신, 사망/크로아티아 인권단체, 세르비아계 이민족 집단암살 후 은폐 위해 폐광에 가매장 주장

<14일>(일)

대검찰청, 불구속 수사확대 지침 확정, 간통등 사건 불구속 수사키로/검찰, 80년 보안사 시국수습안 전두환씨 검정 시나리오 결론

<해설>

검찰의 5.18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 피해자들과 재야단체들이 주장한 것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많은 사람들은 불안스런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검찰이 또 한 번 명확한 결론을 회피할 겁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다시 한명의 노동자가 분신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권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고 장현구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

고문경관 처벌, 제적생 복직 등 문제 안 풀려

고문후유증 피해자 고 장현구(27)씨의 유가족과 경원대생들의 경찰병원 영안실 농성이 오늘로 35일째 맞고 있다. 장씨의 유가족

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 은 지난해 12월14일 고 장씨가 분신, 10일만에 사망하자 「사하비리, 경찰고문 회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

- 장남수(54, 장현구씨 아버지)씨 인터뷰 -

고문피해자 자살하지 않게 대책을

90년 8월 최동(성균관대 졸업 노동운동가), 95년 2월 김복영(연세대 중퇴)씨의 죽음에 이어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자살의 길을 택한 장현구씨의 이비지 장남수(54)씨. 그는 대책위 관계자, 학생들과 영안실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35일째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 생업인 꽃가게 문도 닫고, "고문피해자들이 더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대책을 정부당국이 세워주길" 고대하고 있다.

-장씨의 병세가 고문후유증인 것을 안 때는?

"92년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이상했는데, 그때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알았다. 출소 후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구가 93년 5월 경에 자신의 혀를 깨물고, 허가 낫기도 전에 음독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부터 자신을 누가 감시한다, 기침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압호로 신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언행을 보였다. 짐차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 서울 필동의 중앙대병원에서 현구를 치료한 담당의사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군대도 면제받았다.

-현구가 피로와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적 당한 상황에서 학생운동도 계속 할 수 없고, 자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제적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피로와했다. 현구는 평상시에는 성격이 쾌활하고 농담도 잘 하는 편이었다.

-사건 해결의 전망은 있는가?

"사실상 사건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장례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유가족으로 처음부터 바라는 게 없었다. 현구가 되도록 빨리 안장되어야 할텐데,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아 난감하다. 학생들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고맙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느냐"며 경기도경의 조사 결과에 따른 뜻을 비쳤다. 장현구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해성(35)목사는 "장씨의 문제는 반인륜적인 고문, 구금시간을 초과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불법구금 등의 문제와 학내 문제로 제자를 고발한 학교측의 반교육적 처사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건"이라며 "학교측이 교육적 견지에서 최소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장례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덕인씨 사망 49일 대책위, 부평역 추모집회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 사인규명을 위한 인천투쟁본부」(본부장 박홍수, 이덕인대책위)는 이덕인씨 사신이 발견된 지 49일을 맞아 15일 부평역에서 추모대회를 갖고 최기선 인천시장의 퇴진등을 촉구했다. 노점상, 철거민, 학생 등 1천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1시경 부평역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 2시간여 장 로타리 등지를 행진한 후 오후 6시경 자진해산했다.

이들은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남부경찰서장 등에게 청장, 남부경찰서장 등에게 보내는 경고문에서 △살인 행위 은폐 책임자 최기선 인천시장등은 공개사과하고 퇴진할 것 △영안실 난입, 시신탈취, 폭행 책임을 지고 남부경찰서장은 사퇴할 것 △민민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씨 농성 풀여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미군당국이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 재심을 결정했다.

미군당국은 12일 미군의 폭행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5년 12월 29일부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이영직(25)씨에게 1차 판결 피해보상 2백만원을 철회하고 재심하겠다고 통보했다(<인권하루소식> 96년 1월 5일자 참고).

13일간의 농성을 마친 이씨는 "농성을 도와준 동두천 시민들에게 고맙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미군측이 필요도 없는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담당자가 휴가라는 등의 이유로 재심을 미루고 있다"며 미군측이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4년 10월

17일 새벽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 하려던 미군 스미드 날드 K.(26)씨등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아 하체불구자가 되었다. 이씨에게 폭행을 가한 미군 6명중 스미드 날드 K.씨와 와일드만 키드 A.(23)는 1심재판에서 실행 8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동두천민주시민회」와 함께 농성을 해왔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7명,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외무부를 방문,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15,16일에 진행된 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이번 개정이 일부 조항에 제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최대 관심어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우 한국 여전히 한국 검찰의 상소권 제한, 판결집행의 제약등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정부가 "SOFA의 개정안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밀실협상을 하고 있다"며 협상과정 공개를 주장했다.

한편, 15, 16일 진행된 SOFA개정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검찰당국의 기소단계에서 미군신병인도를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한국 수사관행과 교도시설을 문제삼아 미군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한국 검찰이 상소할 없다는 1심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

졌다. 이날 양국은 4차협상이 열리는 30일전까지 비공식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해설>

현행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으로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SOFA에는 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상금 지급여부 및 배상액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때문이다. 피해보상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무의미해진다.

한전본부 노사 방해 분신 김시자씨 장례 어려움

지난 12일 분신, 사망한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시자(35)씨의 장례 및 대책문제 가 「한국전력노동조합 본부」(위원장 최태일, 한전노조본부)와 사측의 방해로 어렵게 되고 있다.

김씨의 사망 후 영안실로 찾아와 사퇴각서를 쓴 최태일과 노조간부들은 15일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 현 분신대책위가 시신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신전했다. 또 한전노조본부는 이 유인물에서 "당시 운동권 등 재야세력이 총동원된 상상을 초월한 집단폭력 과 감금으로 강압에 의해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측도 지부의 분향소 설치와 근조리본 폐용 등을 막는등 조합원들의 조문을 방해하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전력노조고 김시자씨 분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로, 분신대책위)는 "김위원장이 왜 분실했는지를 안다면 그런 상식밖의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천화력발전소 김동성(33)씨는 "회사가 사원들의 조문을 막기위해 이번주부터 휴가금지령을 내리고 특별감사를 투입, 조합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엠네스티 영국지부, 홍성담씨 판화 담긴 고문 책자 발간 예정

「엠네스티 영국지부」(AI 영국지부)는 고문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홍성담씨의 판화를 사용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AI 영국지부가 출판을 준비중인 고문관련 책자 표지와 속지에 홍씨의 판화 "개밥"(Dog Food)을 사용키로 하고, 홍씨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홍씨의 이 판화가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택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95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펼쳐진 '양심수를 위한 연하장 보내기 캠페인'에도 홍씨의 작품 "우리들의 땅"(Our Land)이 염서로 제작되어 전세계 양심수에게 전달되었다.

홍씨는 대표적인 민중미술화가로 지난 89년 평양축전에 걸개그림 "민중해방사"를 보낸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되었고, 당시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요원을 캐리커처로 그려 폭로한 바 있다. 홍씨의 작품 "개밥"은 양심수가 정벌방에서 포승줄에 묶여 밤을 활아먹는 모습을 흑백판화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여학생이 일반 인문고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15세의 어린 여학생들에게 가혹한 성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고등학교 입시에서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여학생이 불합격되는 것은 고등학교 남녀학생 정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정철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5일 발표된 서울지역의 96년도 일반고 고입선발고사 합격선은 남자 1백17점, 여자 138점으로 남녀의 합격선 차이는 무려 21점이었다. 또, 부산은 남자 124점·여자 148점(24점차), 광주주는 남자 114점·여자 140점(26점 차) 등으로 나타났다.

95학년도 남녀 학생의 합격선 차이는 서울 18, 부산 26, 인천 19점, 대구 10점이었다.

이같은 성별간 합격선 격차는 올 중학졸업 남녀의 비율이 51.5대 48.5인데 비해 일반고 남녀간 정원은 55.2대 44.8로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올 일반고 입학정원이 남자 6만4천5

명, 여자 4만8천6백3명으로 남자가 1만5천4백2명 더 많다. 이 때문에 남학생의 64.2%가 일반고에 진학하지만 여학생은 53.5%만 진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지역 중학 졸업 여학생의 약 7천5백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여협)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보다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불합격 처리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협은 "남녀공학 고교의 여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런 제도가 철폐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교(35,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씨도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예측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 교육정책 당국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15세 어린 여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성차별의 첫 상처를 주는 불평등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고 여고를 증설할 것 △남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남자와의 남녀공학 전환은 공립학교가 먼저 시행하고 사립학교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는 분명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일로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성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자 김정숙 정무제2장관은 안병영 교육부장관에게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6일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문고 진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불합리한 사실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교육부에 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오늘 열릴 행정쇄신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받게 되었다.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원전레이온 실적 노동자 공사장서 화상입고 사망

지난 93년 7월 폐업으로 문을 닫은 원전레이온 실적 노동자 김상근(44)씨가 지난 95년 12월 6일 인천시 연수구 선착동의 인천시 도시지하철공사 1-13공구 'LG건설(주)'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전신 40%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3일 오후4시경 숨졌다.

김씨의 죽음은 실적 이후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원전레이온 노동자들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93년 원전레이온 폐업과 관련 노·사·정 3자 합의를 규정에 따라 노동부, 서울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원전레이온 노동자를 채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원전 노동자는 섬유업계에 종사했던 노동자들로 전문기술이 없고, 자동화 설비가 이뤄지는 도시철도공사에 투입할 경우 업무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인력충원 때 공개채용을 하겠다"며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원전레이온 실적자 6백여명중 나이 40세 미만 약 50명에 한하여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도시지하철공사 채용의 길이 가로막혀 아파트, 빌딩, 지하철공사 현장을 전전하다 화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각국의 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 부분 각국 지역시민조직 지도자와 민간단체 활동가들로 한국에서는 「세계주거권 회의의 민간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을 단순한 주거, 주택의 문제가 아닌 "삶의 공간(Housing Rights)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토지의 공공성등을 주장했다. 특히

"모든 개발과 계획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각국의 토지, 기후, 환경 등의 상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Basic guide line)을 정해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무주택자와 철거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외에도 도시환경에 대한 폭넓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민간단체간의 공동실천 지침을 마련했다(아래 참조).

아시아 민간단체회의는 이번 모임의 성과를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주거회의에 낼 계획이다.

<실천지침>

1.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 한 인간중심의 계획과 개발

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발전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 교통 등 각종의 사회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가격의 집값, 강제철거로부터 자유, 전월세 값의 안정, 사회정의, 성평등 등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지위 때문에 사회적·성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동체문화는 민주적이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는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

에 주민이 참이한 권리를 갖는다.

5. 공동체는 인간과 환경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기본시설인 식수, 하수도, 공원, 교통등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경원대, 천막 철거 학생들 농성 계속 결의

경원대학교는 17일 오전 9시경 교직원 1백여명을 동원해 고 장현구씨의 문제로 학생들이 농성중인 대형천막 1동을 철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세워 놓은 5층 철막은 학생들이 쇠사슬을 묶은 채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철거하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는 2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경원대 학생들 2백여명은 오후1시경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측은 장씨 문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학원 이사장의 사과 △재적생 전원 복직 △폭행 교수 보직 해임등을 촉구했다.

이덕인씨 비디오 제작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 진상조사위원)는 이덕인씨 죽음의 의혹을 알리는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맛빛 아암도」라는 제목의 이 비디오는 이씨가 참가했던 아암도 노점상 철거반대 농성에 대한 전후사정과 사인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장애인노점상 이덕인씨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통해 판매되는 이 테이프 상영시간은 20분이며 가격은 1만원이다.(문의전화:725-5025)

<자료> 민주노총 발표 표준생계비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표준생계비를 발표했다(<인권하루소식> 1월16일자 참조). 인권문제는 삶의 질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 관련 자료를 발췌해, 게재한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층은 노동자이므로 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토대로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생계비, 이를테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91년부터 94년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주노총준비위)가 95년에 산정한 생계비는 모두 최저생계비이다. 이들 생계비는 모두 전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산정된 생계비이다.

민주노총 95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는 3.2인이고 조합원 임금(통상임금+상여금월할금) 평균은 1백37만3천5백71원이다. 3.2인의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면 1백89만2천1백69원이다. 따라서, 표준생계비와 조합원 임금 평균과의 차액은 51만8천5백98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모자란 액수를 임금인상을 통해서 확보하려면 37.8%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기존 최저생계비와 비교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95년 최저생계비	647,522	610,967	1,044,044	1,205,697	1,598,185
96년 표준생계비	89,3980	878,442	1,348,132	1,775,229	2,359,930
증가율	38.1	43.8	29.1	47.2	47.7

주: 95년 최저생계비는 민주노총 준비위의 95년도 산정치임.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올 3월 열린 유엔 인권위
위원회 제52차 회의에 보고할
한국관련 의사표현의 자유
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제출되었음이 확인되
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
수, 17인 「인권운동사랑방」
에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
씨의 보고서에는 의사표현
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
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
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
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
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
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
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
진지위 금품수수), 제8조(회
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
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
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수 있
는데, 특히 안기부가 이런
단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인 황석영씨가 집필을 포
기할 정도로 수감자의 집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
다면서 “감옥의 상태는 나
아가지만, 수감자들의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
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
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
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
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
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
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
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
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
반·영화·비디오 등에 대
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소신껏 기
사를 쓸 수 없다며 이로 인
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
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
다고 말했다.

아비드 후세인씨는 이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
약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수감중인 정치
범들에 대한 사상전향 공작
을 중지할 것 △이들에 대
한 제재를 중지할 것 △의
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이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 지
난 정권에서 정치범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보장할
것 △노동쟁의조정법과 노
동법을 개정할 것 △사법부
는 재판과정에서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 의사표현의 자
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
할 것 △표현의 권리를 억
압하는 행정간섭을 공개적
인 적법절차로 바꿀 것 등
을 제시했다.

후세인씨는 지난해 6월25
일부터 30일까지 방한, 인
권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
한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
다. 그의 방한 조사는 90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내
문제에 대한 첫 조사였다.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 심
의 결과 한국정부가 의사표
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고 인정되면, 보고서에 기
초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결
의안이 채택되게 되어 관심
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재판 연기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의 1심 2차 공판이 19일에
서 26일로 연기되었다. 권
위원장의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2시 서초동 서울지법
318호실에서 열린다. 권씨
는 지난해 11월23일 제3차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수배
중에 구속되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들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과는 별도로
외국인 직업훈련생이 특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중간브로커의 개입없이 국가 공공직업
훈련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직업훈련생을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해당국가 훈련기관에서
선발, 현지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 및 한국사회적응훈련
을 실시하고 입국 후 각 직업훈련원에서 1-2주간 단기
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사업체에 배정, 현장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외국인 직업훈련생을 도입하고자 하는데는
이들의 작업장 이탈 방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
지만 구타와 낮은 임금, 심한 노동 등 연수생들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생 도입은 또 다
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장애우 연구소 전국 18개 대학 조사에서 밝혀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높아가고
있어 장애인의 대학문은 넓
어졌으나, 대학교에 장애인
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들의 원만
한 대학생활이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
재, 연구소)가 장애인 특례
입학제도 실시예정인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밝혀졌다.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
를 시행하는 학교는 강남
대, 단국대, 대구대, 명지대,
부산대, 서강대, 연세대, 이
화여대, 진주우석대, 한양대
등 10개 일반대학과 나사렛
등 10개 신학대학, 전문대 등을
포함한 18개 대학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학 중에서 시각장애인에
게 반드시 필요한 점형유도
블럭(발의 감각으로 알수
있도록 울록블록하게 만든
보도블럭)과 점자안내지도
가 설치된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 또 교내 차도와 보
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없
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교통
사고의 위험율이 높은 것은
물론 마유농고 이동할 수도
없다.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
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물의
통과 유효폭이 90cm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
과 장로회 신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출입문과
강의실문의 폭이 90cm이하
로 나타났고, 도서관 개찰
구나 시가 사이가 규정에
맞는 학교는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에게는 강의를 받
는 것조차 커다란 모험이
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화

장실이 있는 학교는 4곳,
장애인 전용공중전화기 설
치된 학교도 2곳에 불과해
장애인의 고충이 지성의 산
실인 대학내에서도 별로 다
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자원활
동자를 연결해주는 제도가
없이 혼자 움직이기 힘든 장
애인은 개인이 모든 것을 알
아서 해결해야만 한다.

연구소는 문제해결을 위
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제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항을 삽입시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
시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수 자녀에 장학금 전달 고난 모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
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
난모임)은 18일 오후6시 충
정로 고난모임 사무실에서
장기수자녀 장학금 전달식
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 행사는
감옥에 있는 장기수와 양심
수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지
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관
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김
현식(고2, 김태룡씨 자녀),
박호성(고3, 박동운씨 자
녀), 최민혁(국5, 최호경씨
자녀), 정명지(유치원, 정창
호씨 자녀), 이연아(고3, 이
상철씨 자녀), 이하나(국3,
이화춘씨 자녀) 등 6명이
다.

○ 행사와 동정 ○

- 고 김시자씨 추모 및 한국전력 민주노조 쟁취 결의대회
 - 일시: 19일(금) 낮 12시
 - 장소: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
 - 주최: 고 김시자씨 분신대책위원회(☎ 901-3208)
- 고입 선발고사 피해학생 학부모 모임
 - 일시: 19일(금) 오후3시
 - 장소: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
 - 문의: 794-4560
- (가칭) 「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를 위
한 범국민대책회의」 보고대회
 - 일시: 19일(금) 오후6시
 - 장소: 명동 향원교회
 - 문의: 766-5564
- 광주 세계인권사진전
 - 일시: 24일(수)
 - 장소: 전남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 정대협 200회 수요집회
 - 일시: 24일(수) 12시
 - 장소: 계동 일본대사관 앞
 - 주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 부정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 일시: 24일(수) 오후1시-5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발매: 국내 부정방지 법제 상의 문제점(윤태범)/부정
방지 기본법 시안(박원순)
 - 주최: 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796-8364)
- 한국여성민우회 총회
 - 일시: 27일(토) 오후2시
 - 장소: 장충동 경동교회
 - 문의: 269-5763
- 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 총회
 - 일시: 27일(토) 오후6시
 - 장소: 명동 전진상교육관
 - 문의: 719-217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 일시: 27일(토)-28일(일)
 - 장소: 대전 샛도호텔
- 「한국기독교사회연구원」은 박상중 전원장의 정년퇴임
과 안해용 신임원장의 취임을 기념해 이·취임 예배를
갖는다.
 - 일시: 19일(금) 오후3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문의: 313-3317/9
- 대구여성의 전화와 대구성폭력상담소는 19일(금) 오전
12시 새사무실에서 이직식을 갖는다. 주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02-37(2층), 전화번호는 475-8082/4이다.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10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

분신대책위원장·고 김시자씨 유가족등 연행

지난 12일 분신·사망한 '전력노조 고 김시자 동지 분신대책위원회'(분신대책위) 김재호(고리원자력발전소)위원장등 간부 6명은 19일 새벽 6시10분 한국전력 본부노조 위원장 최태일씨 감금·폭력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영안실에는 전경 3백명이 들어와 구속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씨등을 연행했다. 또 영안실에 조문을 온 조문객과 한전노조 조합원, 유가족등 79명을 연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재호씨등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 13일 김시자씨의 영안실을 찾은 최씨에게 전치4주의 폭행을 입히고 감금시킨 뒤 강제로 사퇴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당시 최씨를 보고 격분한 조합원들이 최씨를 때린 일은 있으나 김재호위원장등은 이들은 말리거나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대책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일병원 배경민(간호사)씨는 "다친 최씨를 곧바로 한일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는데 상처가 크지 않아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며 "최씨의 상처가 전치 4주가 나올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최씨는 행방을 감춘 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분신대책위는 19일 낮 11시30분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한전노조 조합원과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시자 열사 추모 및 한국전력 민주노조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시자씨 분신 1주일을 맞아 열린 이날 집회에 시 이들은 △최태일 본부노조위원장의 즉각 사퇴 △부당징계 철회 △노조 전임자 축소철회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말룡 민주당 국회의원과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대주 공노대 공동대표, 김영배 민주노총 부위원장등 분신대책위 대표와 한국전력 이종훈 사장등과 사태 해결에 대한 협상을 가졌다. 협상에서 양측은 한일병원장과 본부장, 분신대책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20일 오전 10시 한일병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최태일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범중앙수습위와의 대화를 주장하며 분신대책위를 "과격해 세력"으로 몰아오던 한국전력측이 분신대책위를 공식적으로 인정, 사실상 최태일 위원장의 사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분신대책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일병원 영안실에서 전국 한전 노조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경찰의 고 김시자씨 영안실 난입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륜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분신사건의 발단이 최태일 집행부의 어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경찰이 한전과 최태일의 편에 서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며 "구속자를 석방하고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등)도 이날 성명을 발표 "한전 사장은 김시자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이번 경찰의 영안실 난입 만행은 5.6공을 능가하는 행위로 역사를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한 김

영삼 정권의 허구성을 전연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입 선발 피해 여학생 학부모, 강력 대응키로

지난 고입 선발고사에서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도 불합격한 여학생 학부모 1백여명은 19일 오후 3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여협) 회의실에서 모여 대책을 협의했다.

이들은 "정부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금년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할 대책은 미루고 있다"며 "불합리한 성차별로 인해 15세 어린 여학생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좌절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남녀차별 고입선발 피해 여학생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성차별 교육정책에 항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스고입선발 고시 남녀차별 합격선 폐지 △피해 여학생의 즉각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사장 김관석, 녹색교통)은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해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 수준에 대해 전체 32명의 전문가 중 25명(78.1%)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6명(18.7%)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해 전문가 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교통시설, 편의시설 수준이 매우 형편없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교통시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식부족과 정책 부재'(50%),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및 투자 부족'(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13%)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통의 각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 중 보행에 대해서는 '높은 보도블럭과 노면 불량'(38%), '장애인 장애인 보행편의 및 안전시설 부족'(22%) 순으로 지적했다. 또, 공공시설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47%), '법·제도 및 정책상의 문제점'(9%) 등을 꼽았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승하차시의 불편'(50%),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 필요'(13%) 등을 들었다. 지하철 이용시에는 '계단 이용의 불편과 위험'(50%)을 가장 먼저 들었고, 택시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25%)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설의 불편함이나 위험성과 아울러 버스나 택시기사의 배려 등 장애인들이 이를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삼진 녹색교통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장애인 정책은 펴야 하고, 장애인도 함께 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리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장애인 교통권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장애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 조사에는 금기정(명지대 교통공학) 교수등 교통전문학자 7명, 김정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장) 등 장애인 단체 전문 활동가 7명, 정부 관련자, 장애인 담당 기자등이 참가했다.

<주요 설문결과>

□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장애인 교통에 대한 철학과 인식 부재(34%), 장애인 교통대책과 실천의지 부족(25%),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16%)

□ 장애인 복지법등 장애인 법·제도에 나타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56.2%)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평가-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여건 마련의 의미는 있으나 규정된 의무

사항 및 치번규정이 애매하다(65.6%)

□ 향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에 대한 정부투자 방향-장애인 교통시설이 적정수준으로 마련될 때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68.7%)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각종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장애인 교통권 확립의 토대 마련(34.3%),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25%), 대중교통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21.8%)

5.18 특별법 위원회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전국연합, 광주전남공동위

5.18특별법 제2항을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칫 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바라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반성없는 5.6공 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연합은 "법원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국민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에 진행한 다단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고 장현구, 김시자, 이덕인 추모 및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청산촉구대회'를 열어 "최근 청산과 개혁이 미봉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극한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려는 투쟁과 이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지속되는 현실을 폭로하고, 5,6공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한다.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신석 등)도 오늘 오후 2시 광주 YMCA에서 집회를 갖고 "학살자의 전원처벌과 5,6공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할 예정이다.

◆ 인권간행물 ◆

□ 자료집: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6월 항쟁 정신에 비취 본 과거 청산-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 주요내용: 과거청산, 이대로 좋은가(박원순)/부정부패의 원천을 민주대연합의 관점에서 청산하자(박계동)/5.6공 청산의 역사적 의의와 극복해야 할 과제(황인성)/청산되어야 할 5.6공 하의 주요 인권문제(박래군). 41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 85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주요내용:칼럼-넓고 깊은 운동을 펼칠 시기가 되었습니다(이효환)/김영삼 대통령 국정연설 분석(김성희)/96년 남북관계 전망(조성범) 등. 47쪽.

□ 「진보정치」 창간호-진보정치연합 · 주요내용:비자금, 특별법 그리고 진보진영의 향후 과제(홍승기)/특집-민주노총, 한 시대의 완성과 새로운 출발(최영민)/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더이상 변혁운동사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민은홍)/핵문제와 우리 시대의 진보(최경승) 등. 202쪽.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유엔 무대에서 심사대상에 올랐다.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 등 위원 7명, 허승 주재네바 대사동 정부 대표단 10명이 참석했고, 옵저버로 민간단체를 대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연대회의)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 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양이 관재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관련 민법과 형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위원들로부터 회의 초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들은 △국내법과 조약의 조화방안 △아동권 관련 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아동권리에 권리 관련 국가위원회가 있다며, "이 위원회는 아동권 조약의 홍보, 전문집단의 훈련, 아동권리의 증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국내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연대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회의 둘째날, 위원들은 아동에 대한 성차별 중 태아감별 문제, 가정내 성폭력 대처방안,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방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아동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광범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차별, 성감별, 학대 등을 기존 법들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시위의 99%는 폭력

시위"라는 등의 본질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해 위원들의 비웃음을 샀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담당 보고 위원인 Marta Santos Pais씨(여)는 "한국 아동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한국정부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위원들이 중 "우리는 인간적인 발전(human development)을 원한다", "아동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라고 지적한 것은 정부의 아동권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아동권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채택되며, 5년 뒤 다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의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는 이후 아동권 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진상조사위원회」는 22일 오전 인천시 답동성당에서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진상조사위원회」는 22일 오전 인천시 답동성당에서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씨의 동생 이정운(23)씨, 아암도 노점상 김민태씨,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등 5명은 "고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56일이 되었다"며 대책없는 철거를 저지한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인천 남부경찰서장은 즉각 사퇴할 것 △장애인과 노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죽음을 불사한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덕인씨의 유가족과 노점상들은 이씨의 주검이 발견된 뒤 오늘까지 57일째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 농성을 벌이며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핏빛 아암도」 비디오 판매

문의: 02)725-5025,4558
가격: 1만원

주요 공판 안내

- 1월23일(화) 박창희, 2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 5부, 404호
- 1월24일(수) 김태년, 2시, 국보법 위반등, 서울지법 형사 1단독, 424호 정민주의 1, 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김미정(선고), 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 1월26일(금) 이찬행(선고), 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23부, 311호 허인희, 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9단독, 317호 천영길, 2시, 제3가계입금지 위반등, 서울지법 3단독, 320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씨, 유가족이 화상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 결성

한국전력 노조 산하 한일병원 지부장 고 김시자씨의 장례가 21일 새벽 가족장으로 전격 치러졌다. 이날 새벽 5시40분경 사복경찰 4백명이 한일병원 주차장에 집결한 후 새벽 6시20분경 고 김씨의 유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루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들이 밝힌 합의 사항은 △김시자 위원장의 장례를 21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를 것 △회사는 최대 일 한전노조 본부 위원장의 사퇴를 권유할 것 △회사는 유가족에게 순직 직원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력하며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이다. 이날 김씨의 유해는 한일병원 조합원들의 오열 속에 유가족과 용역근로자들에게 의해 운구되어 오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되었으며, 그의 유골은 남달당에 안치되었다. 한편, 분신대책위는 "김시자 열사의 시신을 민주노조 쟁취의 그날까지 지키지 못한 것을 사죄드린다"며 "분신대책위는 한전노조가 민주화되는 그날까지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노조 지도위원, 최경진 전지협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한전 노조 조합원 3백여명은 「김시자 열사 정신계승 및 전력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노민추) 결성식을 가졌다. 이들은 노민추의 투쟁과제로 △구속자 석방 △징계철회 △전임자 축소 철회 △직선제 쟁취를 설정하였고, 구속중인 김재로 분신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노민추는 오는 28일 오후2시 서울중요공원에서 '고 김시자 열사 추모 및 전력노조 민주화 쟁취를 위한 제2차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민련 구속 목사 돕기 불교인권위, 모금운동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동, 불교인권위)는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부터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진관 위원장은 "권력의 억압과 탄압을 받은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자비를 베풀기로 했다"며 "범민련 구속자들은 통일인사들로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석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인권위는 지난 9일 범민련 구속자 박석률(47)씨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할 때 이어 두번째로 강희남, 광병준, 김병균씨등 개신교 목사 3인에게 이번 성금을 모아 전달할 계획이다. 불교단체가 다른 종교인의 석방을 위해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모금은 제일은행: 128-20-303720 예금주: 박용모(진관)으로 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 02)734-6401번

주/간/인/권/호/름

(96년1월15일부터 21일까지)

- <15일(월)> 범종단 북한수재인 돕기 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이윤구), 6개 종단 수해 실태 조사 위한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핵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 <16일(화)>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성 6명, 80년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장 최예섭 준장등 관련자 10명 고소/대전지법 형사1단독(김명재판사), 윤금이씨 살해 마를 케네스 이병동 2명에게 고소도 행패 정역 8월 실행 선고
 - <17일(수)> 12.12사건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유학성·황영시·장세동·이학봉·최세창씨 등 5.18 신군부 핵심에 군사반란 혐의 영장청구/전두환씨등 80년 신군부 6명,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서울지법에 제출/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전·노씨등 신군부 5명 5.17내란 최초 모의 확인/경동년씨등 5.18 고문수사 학생 피해자 35명, 전두환씨등 35명을 내란등의 혐의로 고소
 - <18일(목)> 서울지법형사합의 21부 김문관 판사, 5.18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장세동·최세창씨 구속영장 보류/서울대 동아리 연합회, 80년 당시 국보위 참가 농대 교수 퇴진 요구/교육부, 3월부터 상습폭력 행위 징계 학생 사회봉사활동 시행/독일 난민 수용소에 화재 9명 사망, 극우 네오나치스트인 스킨헤드족의 방화 추정
 - <19일(금)> 김종배씨등 5.18 광주시민군 고문피해자 1백41명, 전·노씨등 합수부 수사관등 84명 고소/전주 북부경찰서, 전주생원서 술집 배정준(43)씨 타살 수사 착수/서울지역 학부모 1백여명, 남녀차별 고입선발고사 피해학생 학부모 모임 결성하고 서울시교육위 상대로 불합격 취소소송 내기로/서울 북부경찰서, 한일병원 지부장 고 김시자씨 영안실 경찰력 투입 84명 연행, 김재로씨등 5명 구속
 - <20일(토)> 전두환씨 등 12.12 및 5.18 피고소·고발인 27명, "검찰 재수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헌법소원/서울 서초경찰서, 동거녀 살해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씨 구속/서울지검 형사4부, 삼청교육대 재수사 착수/인천지방노동청, 95년 경인지역 외국인노동자 체임·가혹행위 1백19건 접수 밝혀/경찰 물고문 고소,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 나서
- <해설>-----
전두환 전대통령과 신군부측 핵심들이 5.18특별법과 검찰의 재수사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내며 현재의 과거청산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씨와 신군부측의 태도가 무엇을 가치조차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이라도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고교입시의 여학생 합격선 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5세 어린 여학생이 겪을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되어선 안된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법률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구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3, 만 37년 9개월 구금)씨 등 3명은 23일 서울민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8년 7월5일 당시 미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처음부터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일이 없으므로 그 효력 여부를 따질 여부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법률은 제정되어 공포되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방경비법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2면에 관련 자료).

이어서 이들은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15일까지의 수감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구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선명씨는 50년 한국전쟁에 인민군 병사로 참전하였다가 51년 포로로 체포, 안학섭씨는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하였다가 53년 체포, 한장호씨는 57년 11월20일 남파되어 구속되어 장기수로 수감중 지난해 석방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체포되어 국방경비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장기수중 이들이 처음으로 국방경비법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 반려 및 권영길 위원장 구속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19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를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4일 노동부가 한국노총과의 조직대상 중복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검찰 5.18 수사결과 비판 전국연합·민변 성명

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의원 피후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검찰의 결정은 5.18특별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5.17 내란의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청산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와 소추를 담당해야 한다”며 “또 한편 검찰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성명을 발표, “검찰이 5.18 광주학살사건을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근거로 △당시 광주지역 대대장급 이상 공수부대여단장 등 현직지휘관들 전원 무혐의 처리한 점 △주남마을 학살사건 책임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실탄지급과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민변은 검찰에 대해 △5.18 광주학살 발표 명령 책임자와 정확한 사상자 숫자, 암매장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수사 전모를 밝힐 것 △수사결과 밝혀진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기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이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 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알 길도 없거니와 그 중에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국방경비법’이라는 것이 법률도 아니었다고 하면 놀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었다.

45년 8월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48년 7월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으며 48년 8월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 48년 8월4일 효력 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48년 7월5일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46년 8월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47년 5월6일 법률 제1호에서 48년 5월19일 법률 제12호

‘법률’이라고 하려니가 그 법률호수는 ‘미상’이라 할 수 없다. 48년 5월19일 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해산) 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허구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21일 장래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전력 노동조합」은 조합원 2만6천명과 250개의 분회, 64개 지부, 그리고 본부로 구성되었다. 분회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지부는 약 20%만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전력 노조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본부장은 별도로 선출된 2백50명의 전국대의원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지금의 최태일 본부노조위원장은 90년 본부위원장에 당선, 94년 재선되었다. 최씨는 94년 1월 사측과의 단체협상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정년퇴임을 맞은 노조간부 13명의 정년 2년연장과 사측이 주장한 3%임금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분노한 23개 지부 위원장들은 94년 2월 한전 본사에서 ‘최태일 퇴진 촉구농성’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한전노조 내 노조민주화투쟁은 시작된 것이다. 농성은 회사와 노조의 회유·협박에 못이겨 한달 만에 끝났다.

그러나 농성에 대한 보복은 생각보다 늦게 왔다. 농성이 있는지 1년이 훨씬 넘은 95년 5월, 최태일 집행부는 고리원자력지부 김체로위원장등 8명이 ‘특정인 정년연장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전임해제를 당했다. 뒤이어 영광원자력지부 장기영 위원장 등 2명이 해임되었다. 또 한국전력은 양성호씨등 위원장 11명을 부당전출시켜 민주세력이 있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김시자 위원장의 정계사유도 ‘최태일 퇴진 촉구농성’이다. 대책위 양성호씨는 “최태일 집행부가 김위원장을 징계하려 한 것은 노조내 민주세력 죽이기에 하나”라고 말했다. 즉, 3월 지부·분회 위원장 선거에 김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시자 위원장이 죽음으로 막고자 했던 것 중 하나는 정부의 노조 전임자 축소 방침이다. 지금 한국전력과 같은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95년 12월 20일 정부가 ‘정부투자기관 노조 전임자 축소’를 발표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벌써 한국전력에도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가 전임자 축소에 합의했다. 정부투자기관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축소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준)을 조직,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 홍보실장 강순임씨는 노조 전임자 축소가 “노조상근자와 사무실을 없애 무력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노사간의 자율을 위장하고 있지만 노조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어 직권중재와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김시자 위원장의 분신은 이런 한국전력노조의 민주화와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 축소 반대투쟁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위원장의 가족장 직후 한국전력 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은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국전력 노조가 곧 한국동신 노조처럼 변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감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의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광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5.18 학살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는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광주 카톨릭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5.18공대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공대위 개편과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5.18특별법의 제정

과 5.18내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후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기초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학살자 전원 처벌 감시단 △5.18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5.6공 청산위원회 등을 5.18공대위 산하에 설치할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비록 5.18특별법이 전국민적 투쟁으로 제정되었다 해도 핵심사항인 국민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가 빠진 상황에서 검찰의 재수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검찰의 1차 기소에서 학살 현장 지휘 책임자들은 모두 제외된 것만 봐도 현정부나 검찰의 과거청산 의지는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초 발제를 맡은 황인성(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씨는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반성과 사죄없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검찰이 다시 학살자들을 수사하면서 수사범위를 한정짓는 현상황은 5.18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낸 전제 국민의 노력과 성과를 훼손하고 굴절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5.18공대위 공동위원장은)전남대교수는 "5.18공대위의 향후사업은 광주문제 해결의 5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5.18특별법 제정, 검찰의 재수사, 학살자 일부 사법 처리라는 일련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사업

역시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5.18공대위 지도위원)씨는 5.18공대위 조직개편에 대해 "5.18공대위는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역량과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학살자 전원처벌과 특별법의 완전실시까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시 등 5.18정신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동된 인식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후 5.18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방향으로 △학살 책임자 전원 처벌 촉구 운동 △진상조사 활동 △특별법 이행 및 후속사업 △5.6공 잔재청산 활동 등 4가지를 제시했다(아래 기사 참조).

5.18공대위는 이날의 토론회를 이어 이후 공대위 명칭의 변경을 포함한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의 이런 움직임은 5.18범국민대책위원회의 이 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불철저한 5.18 수사와 정부의 5.6공 청산 작업에 큰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5.18공대위 공동위원장 강신석은 "5.18공대위 개편과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5.18특별법의 제정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학살 책임자 전원 처벌 촉구 운동
 -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관련 피고소인 전원, 특히 광주 현장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활동
 - 검찰에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것 등
- 진상조사 활동
 - 시민신고센터를 운용, 자체 진상조사
 - 미국의 5.18 관련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 5.18진상 조사 백서 발간 등
- 특별법 이행 및 후속사업
 - 학살자에게 수여된 상훈을 치탈
 - 헌법전문과 교과서에 광주항쟁의 정신 수록
 - 정부차원의 범국민적인 기념사업 등
- 5.6공 잔재청산활동
 - 5.6공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과 5.18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활동
 - 전·노 일당의 권력찬탈에 동조, 찬양하고 5.18민주항쟁을 왜곡한 사례를 밝히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
 - 5.6공 당시 초헌법적으로 제정, 개악된 반민주 악법과 탄압기구 개정 및 폐지 활동 등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현장 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4년 시위 정신대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

"그 순결한 마음은, 그 순결한 몸은 일본제국주의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산산히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세가 지나도록 사죄하고 배상하려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항하여, 곳곳이 일어선 할머니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가 지난 24일 2백회를 맞았다.

이날 2백회 수요시위가 열린 종로구 계동 일본대사관 앞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신대 할머니와 여성단체 회원, 학생 등 2백여명과 국내외 취재진으로 가득찼다.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씨는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분노로 시작한 수요시위가 4년이 넘었다"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68, 가명) 할머니는 규탄사에서 "일본정부는 그동안 공식사죄도 없이 우리들이 죽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해결책이 없다고 내세우고 있는 민간기금은 우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한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무엇보다 참석자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강덕경(67) 할머니의 투병소식이였다. '배안긴 순정' 위안부 대안소 등에서 정신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 전시회를 갖기도 한 강 할머니는

현재 폐암말기를 선고받고 치료중에 있다. 김희애(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4년)씨는 "대사관 앞에서 4년동안 매 주 집회를 가져왔는데 창문 한 번 열어보지 않는 일본정부에 놀랐다"며 "2백회 집회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정신대 할머니들을 잊지 않도록 더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2백회 동안 10여명 사망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일본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에 성단체 회원, 학생 등 2백여명과 국내외 취재진으로 가득찼다.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씨는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분노로 시작한 수요시위가 4년이 넘었다"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68, 가명) 할머니는 규탄사에서 "일본정부는 그동안 공식사죄도 없이 우리들이 죽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해결책이 없다고 내세우고 있는 민간기금은 우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한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무엇보다 참석자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강덕경(67) 할머니의 투병소식이였다. '배안긴 순정' 위안부 대안소 등에서 정신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 전시회를 갖기도 한 강 할머니는

북한수재민 성금 모금 전국연합, 29일부터

대표적인 재야의 연합조직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종교계에 이어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북한은 3년여에 걸친 천재와 특히 작년의 수해로 인하여 식량, 의류, 약품 등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 동포들이 따뜻한 민족애로 북녘 동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모금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연합은 1억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북한 수해동포 돕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성금의 전달 방식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오는 29일 낮 12시 명동성당에서 홍보전과 시민모금운동을 시작으로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회 "참여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계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회의 부패는 공익에 무감한 사익지향적인 행동양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과 부패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정·경·관의 기존 부패 네트워크의 지속도 사회부패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복(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공직자 부패추방을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 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의 소독제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돈세탁 규제 항목을 넣어 자금세탁을 부추키는 사람과 이를 실행한 금융기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발제에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는 "공직자 부패추방을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 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의 소독제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돈세탁 규제 항목을 넣어 자금세탁을 부추키는 사람과 이를 실행한 금융기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동의장 권영길, 민주노동)은 23일 노동부의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에 대해 "이 연구회의 실제적인 구성목적이 근로기준의 '개선'이 아닌, '개악'을 위한 여론정치작업을 하려는 의도"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근로조건 개악 기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동총을 둘러싸고 세력 구색을 맞추어 조직해 보겠다는 알파한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노동부장관은 22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개회한 자리에서 "2월중에 재정경제원, 통산산업부 등 경제부처와 경총, 학계, 한국노동이 참여하는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태권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채포된 피의자가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

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해당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꼭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변호사가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하는 방안과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사가 직접 심문, 구속의 필요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해왔다.

-아암도 노점상 삭발, 단식농성 5일째- 25일 뇌성마비 장애인 병원 긴급후송

영하 8도를 오르내리는 겨울 날씨에 노천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25일로 두달째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씨의 사인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아암도 노점상들이다. 22일 삭발을 결의한 다진 채 인천 답동 성당에서 뼈를 에이는 추위를 뎀뎀으로 견뎌내는 그들은, 상당 신부들과 노점상 동료들이 천막만이라도 치고 하자는 권유마저 뿌리치고 있어 추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빛을 내거나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몽땅 털어 마련한 아암도 노점을 시에서 포크레인으로 쪼어 짓밟았어요. 우리는 최기선 인천시장에 의해 철저히 핏빛연임을 인천시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작정입니다."

고 이덕인씨의 막내동생 이정훈(24)씨의 말이다. 26일로 5일째를 맞는 이들 농성단에는 24일 저녁 아암도에서 이덕인씨와 함께 노점을 했던 박미라(40)씨도 유일한 여성으로 합류했다.

이 농성단 중에는 종종 뇌성마비 장애인인 김민태(22)씨도 끼어 있다. 동료 노점상들은 일반인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3.4배 더 많은 뇌성마비장애인인 김씨의 건강을 특히 염려하였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단식 3일이면 탈진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25일 오후부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더 이상 농성을 유지할 수 없어 오후 6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김씨는 장애인으로 노점마져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누구보다 분노할 터였다.

24일 저녁 한 TV 방송은 인천시 연수구 아암도, 바로 노점상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에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은 공개재판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두 번의 노태우씨 공판 진행과정에서 불행히도 대부분의 방청권이 이 재판과 관련된 제법과 권력자들과 관계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의해 독식되고 있다"며 △방청권을 추첨해서 배부할 것 △사회단체에 대한 방청 방침을 보장해 줄 것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을 허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지난 15년간의 국민생활의 변화와 현재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한국사회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95년 인구, 소득, 노사, 교육, 환경 등 9개 부문 2백90개 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0년부터 95년까지 한국사회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율은 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평균수명은 69세에서 71.6세로 증가했다.

원으로 4.2%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한다. 각국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을 GNP 대비로 보면 스웨덴 24.1%, 덴마크 18.7%, 미국 6.9%, 말레이시아 1.5%, 한국 1.7%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는 85년 2천2백73명에서 점차 감소해 94년 1천9백3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생활능력과 지별 곳이 없는 시설보호자는 80년 6만3천명에서 94년 8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원이 48개에서 1백41개로, 장애인 수용시설이 2백16개로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인구증가에 대한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정부예산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20.3%에서 95년 22.8%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원이 48개에서 1백41개로, 장애인 수용시설이 2백16개로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보장 및 복지부 부문 세출 규모

(단위: 십억원, %)

연도	중앙정부 사회복지 보장 및 복지부 부문 세출	중앙정부 세출 대비	GNP 대비
1980	437.9	5.7	1.2
1985	779.0	5.0	1.0
1990	2,691.2	8.1	1.5
1993	4,576.8	9.3	1.7
1994	5,931.7	9.9	2.0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재정경제원 「결산개요」
주: 사회복지 보장 및 복지부 부문 내역-사회보장행정, 병역자·일시불취업불능자, 노령·무능력자·유가족, 복지사업 등임

주요국의 사회복지 보장 및 복지부 부문 세출규모

(단위:%)

나라	연도	중앙정부 세출대비	GNP 대비
한국	1993	9.3	1.7
	1994	9.9	2.0
싱가포르	1991	2.1	0.5
말레이시아	1993	5.2	1.5
미국	1992	28.1	6.9
영국	1991	34.3	12.9
스웨덴	1992	51.3	24.1
덴마크	1990	38.4	18.7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러나 지난 15년동안 아동 복지시설은 2백90개에서 2백84개로 줄어들었고, 모자보호시설도 80년 33개, 93년 40개에서 94년 37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한편 유형별 범죄건수는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살인, 강간등은 늘어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폭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인구 10만명당 1천5백61건인 범죄

발생수는 94년 3천90건으로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의 복잡다단화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각종 특별법 위반이 80년 48.7%에서 90년 76.3%로 크게 확대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 통신 ID

천리안: rights
하이텔: rights
나우누리: 인권사랑
유니텔: rights
HNCNET: rights

행사와 동정

- 미군연쇄폭력규탄 57차 금요시위
 - 일시:26일(금) 낮 12시
 - 장소:용산 미군기지 제1정문 앞
 - 주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44-1211)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 일시:27(토)-28(일) · 장소:대전 샛토호텔
 - 문의: (053)426-2533
- 여성민우회 총회
 - 일시:27일(토) 오후2시 · 장소:장충동 경동교회
 - 문의:269-5763
- 고 김시자씨 추모 및 한전노조 민주화 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 일시:28일(일) 오후6시 · 장소:종로공원
 - 주최:민주노총, 한전노조 민주노총 등(☎ 765-2010)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총회
 - 일시:31일(수) 오후4시 · 장소: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 안경환, 박원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 일시:31일(수) 오후6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출간도서:안경환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판사가 나라를 살린다」,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서 나라가 산다」,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등 다섯권
 - 참가비:6만원(출간도서 3권 포함) · 문의:796-8364
-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
 - 2월3일(토) 오후2시 ·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1층
 - 주최: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888-3683)
-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96년 지원사업 발표 및 95년 지원사업 보고회
 - 일시:2월5일(월) 오후4시 · 장소:프레스센터 20층
 - 문의:790-5200
- 「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는 창립 10돌맞이 수익기금마련 사업으로 다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엔 판매하는 다기는 여주에서 민족도예의 맥을 잇고 있는 강암 최창석씨의 작품들로 가격은 5인용 1세트 15만원이다. 문의 764-1684.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4, 가명,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가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 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 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병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예, 그렇습니다”라는 식의 단순 대답으로 검찰심문을 끝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집요한 심문을 펼쳐 무려 7시간 이상이나 질문공세를 펼쳤다. 김씨는 변호인의 심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등 마치 5공 청문회 증언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임영화 변호사는 김씨의 신분, 행적, 가명, 허인회씨를 만난 경황 등에 대해서 사건기록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김씨의 기억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상당부분 자술어나 진술조서 등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작 부정확한 답변을 했고, 심지어 “총상을 입어

체포된 후 얼마동안 치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조차 “잘 모른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조소를 사기도 했다. 그는 “본명이 이승철임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 김동식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과거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때 썼던 김돈식과 착오를 일으켜 계속 김동식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기명동 기억 뒤틀려 특히 허씨를 비롯, 황광우, 정동년, 우상호, 이인영씨 등 포섭대상자들을 만날 때 쓴 가명에 대해서도 수사기록과는 다른 답변을 했다. 평소 같은 가명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동년씨와 허씨를 만났을 때 동일하게 ‘박광선’이라는 가명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4명 중 임성식, 박광선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억해 냈으나, 두 명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가장 위험한 때인 정각사에서 고 정간첩을 만날 때 갖고 있던 이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92년 사건 당시 수사발표에는 김돈식이 ‘키 173cm, 김일성대학 졸업’이라고 한 것과 달리 실제 김씨의 ‘키

는 168cm, 고등학교 졸업’인 것 등 다른 점을 추궁하자,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도 회화부 1과라고 했다가 6과로 바꾼 이유는 “처음 허위진술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시기, 당원증 번호 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답변으로 피해 갔다.

허씨를 비롯한 포섭대상자들을 만나 간첩이라는 신분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남과 직접 조대소 공작원 토론과정에서 하기로 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를 만난 사람들이 기관원으로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젊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 허인회씨에게 전화를 한 시각, 허씨를 만났다는 시각에 허씨 사무실에 들른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허씨 책상과 허씨 책상 위의

명패, 어직원, 가방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대로 답변했다. 변호인은 허씨를 만났다는 그 시기에 허씨의 책상이 세워졌던 점, 어직원 1명도 사적해 실제 어직원은 1명 밖에 없었던 점, 가방이 어직과는 바뀐 것 등에 대해 주장했다.

김씨 간첩인지 강한 의문 변호인측은 자술서 작성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비워둔 뒤 나중에 날짜를 기입한 것은 “그날 그날 날짜를 기입할 때도 있지만, 다음날에 수사관이 쓰라고 하여 기입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처음 밝히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나 자술서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구속적 부심과 허씨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것은 김동식이 안기부에 의해서 지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의 존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허씨는 재판 전 기자들을 만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 “김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간첩 불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지난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제3자가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동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동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동총 단합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허락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진술전에 모두진술을 해야겠다”는 권씨의 요구에 따라 약 30분간 이뤄졌다.

권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노동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송복할 수 없다”며 “재판을 받는 이유가 88년부터 7년간에 걸친 민주노동조합을 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노동 40만명 조합원과 민주노조를 원하는 노동자를 재판하고 나아가 민주노총을 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자가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청산의 대상인 56공세력이 만든 것인데 그들이 만든 악법을 없애자는 운동을 펼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정치의 코미디, 권위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권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조종거리가 되고 있는 제3자가입으로 모든 노동자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 이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단체들을 노동 단체로 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법치후진국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민주노동 위원장의 구속은 정치적 이유

에 따른 노동운동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심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전노대) 민주노동(준)의 결성경위와 목적,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권위원장은 “전노대나 민주노동(준)은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해왔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되었다”며 제3자가입은 법도 아닌 법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노동총과 민주노동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총은 현재의 한국노총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노동조합다운 활동을 하다가 보니 한국노총에 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동식 판사는 변호인 신문 도중 “권위원장”이라는 호칭을 ‘피고인’으로 고치라”고 요구,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자 매우 불쾌한 듯 심문을 중지시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과정에서 최재판장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정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해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호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는 무리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점퍼차림으로

로 법정에서 선 권위원장은 힘찬 목소리로 모두진술과 변호인 심문에 답했고, 재판관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방청객에게 손을 들어 보이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공소장 내용 중 전노대와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라고 규정 한 부분 등 13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석명(공소중해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관계상 다음재판에서 문서로 답변키로 했다. 다음 3차공판은 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한국사회의 이해」 제9차 공판이 지난 25일 창원대와 경상대 교수, 학생 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씨가 나오지 않아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 작성을 의뢰, 한국수의 감정서가 나오는 대로 유씨를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한국수술을 수석부장판사실로 불러 감정인 선서를 하게 하고 감정서의 의뢰를 부탁했다.

다음재판 기일은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2월3일 오후 2시 진주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법정투쟁 승리를 위한 한마당」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변호사의 초청강연, 노래패 희망새의 공연, 비디오 상영, 집필자와의 대화 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통신 ID
천리안 : rights
하이텔 : rights
나우누리 : 인권사랑
유니텔 : rights
HNCNET : rights

◆ 인권간행물 ◆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2차 자료집-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위원회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전국연합
·주요내용:“언론개혁 연대회의”를 제안한다(손석춘)/연이은 북·미 접촉이 던지는 의미(최홍재)/4·19와 5·18 그리고 미국(박정범)/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조직적 진로(최규업)/언론운동의 현대적 단계와 새로운 모색(김동규) 등. 50쪽.

□ 월간 「인권」 12월호
·주요내용:역사를 밀고 가는 힘(이해학)/여성화를 위한 아시아평화기금 반대 국제회의의 보고(윤미향)/제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기(원현은)/아시아 인권현황 초안/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 2 등. 74쪽. 값 1천8백원.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김시자씨 추모집회, 노조 민주화 다짐 노민주, 한전노조 집행부 퇴진·구속자 석방 요구

지난 28일 오후 2시 한국전력노조 조합원과 대학생 1천백여명은 서울 종로공원에서 '고 김시자씨 추모 및 정신계승을 위한 2차결의대회'를 갖고 한국전력노조집행부의 전면퇴진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고 김시자씨 정신계승 및 한국전력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채로, 노민주)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수배중인 노민주 집행위원장 박주석(한전 해고자)씨의 편지글 낭독과 추모사, 부활곡, 결의문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김영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민주노총 건설로 모아진 힘과 단결된 의지로 투쟁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과 경찰은 김시자 열사의 장례식으로 그의 투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한전노조가 민주화되지 않는 이상 싸움은 끝낼 수도 없고 끝내서도 안된다"며 노조위원장 선거 직선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다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명동성당까지 추모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김시자씨의 분신과 한국전력노조에 대한 홍보전을 펼쳤다. 김시자(35)씨는 한국전력노조 산하 한일병원 지부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2일 '어용노조 퇴진'을 외치며

분신, 다음날 사망했다. 이날 집회는 21일 회사와 가족들에 의해 가족장으로 치뤄진 김시자씨의 장례식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채로(고리원자력지부)위원장 등 노민주 관련자 7명이 구속되고 박주석(39)집행위원장은 수배 중이다.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지난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가 <한겨레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고, 1면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자 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7일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언론사의 국민 명예훼손을 좌시하던 재판부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처사"라며 "대한민국 재판부는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오명에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오명을 더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불교연대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김현철씨가 대통령의 차남으로 무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은환 부장판사의 퇴진을 주장했다.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 전국연합, 1억 목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회원 20여명은 29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북한수재민 돕기 시민모금 활동을 벌였다. 전국연합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며 수재를 당한 북한동포들을 돕는데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대거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2면에 성명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가두연설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부당국에서 해결 못하면 민간의 따뜻한 동포애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마스한 동포애를 발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전국연합은 1억원 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

기사 제보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이 주시는 제보는 충실히 취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컴퓨터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자료>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성명서 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

한겨레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3년간의 자연재해와 작년 1백만명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북한의 동포들은 식량, 의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한파의 절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래로 이웃의 어려움을 상부상조의 미풍으로 극복해온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동포들의 고난에 거국이 동참하고, 얼어붙은 민족의 마수에 화해와 사랑을 피우는 통일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연합은 1억모금운동을 북녘 동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는 것은 상부상조의 민족정신에 입각한 일이며 전국연합의 전신인 전민련 때부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연합은 1만 일꾼 1만원 내기 운동으로 1억을 모금하여 적십자 등을 통해 북녘 동포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민족의 사표이신 전교조 선생님들, 겨레의 미래인 한청협 청년들, 뜨거운 민족애를 지닌 한총련 청년학생들, 빈민들을 비롯한 전국연합 부문단체와 각 지역의 지역연합 일꾼들은 한 마음 한뜻으로 동포 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전국연합은 수해지원 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연합은 96년 민족공동행사를 함께 한 민족회의(여성단체, 종교, 민족단체 등)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이미 지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 사회단체와 연대할 의사를 밝힌 법

정당당국에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 백백년 이 되는 96년을 대결로 마감하는 셋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직된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간 15차례나 변화된 정부의 일관성없는 통일정책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 런저런 조건을 달며 사실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회되었습니다. 총선에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당국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집니다. 동포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공명의 대의에 반대하는 의식은 허구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실사현시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의식에 기반하여 정권을 유지해보려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84년 북한동포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이나, 주한미군의 철수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남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난 남북관계를 해빙해 가는데 있어 조건없이 동포애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민족의 박수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우리의 이러한 동포지원운동이 동포사랑이라는 민족의 대의에 입각한 것이며,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나가는 출발점이라 확신하고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겨레 앞에 약속하는 바입니다. 1996년 1월2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간/인/권/흐/름 (96년1월22일부터 28일까지)

<22일(월)>
불교인권위원회, 범민련 사건 구속된 목사들 석방 모금운동 돌입/엘지전자부품(주) 여성노동자, '솔벤트5200'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 또 받아/김시자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항의한 노동자 2명 추가 구속/교육부, 남학생 합격선 이상 고입 불합격 여학생 구제키로 <23(화)>
출소 장기수 3명, '국방경비법'에 의한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집합,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때 농약 등 지원용의 밝혀/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 서울지법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재정 신청 <24일(수)>
5.18공대위, 토론회 갖고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의견 모아/부산시, 중교 퇴학생에 복교 허용키로/정대협 수요시위 2백회/대법원, 비행가능성 높은 청소년 사전재판 거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로/한국노총-민주노총, 주 40시간 노동제 적극 요구키로 <25일(목)>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키로/참여연대, 전노씨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비판,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경찰, 강력법 검거시 정당방위 수단으로 총기사용 방침 천명/대법원, 법정내 '뽀뽀소음'에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일 이하의 감치처분에 처하기로 <26일(금)>
'부여간첩' 김동식(가명)씨, 허인희씨 2차 공판서 검사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2차공판서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경찰의 강력법에 실탄사용 방침 후 첫 총기사용으로 10대 강도 검거/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 한겨레신문 김현철씨에 배상 판결/보스니아 내전 당사자들, 억류한 포로 모두 석방할 방침 발표 <27일(토)>
복지부, 딸 둘이상 출산때 혜택을 받는 여아출산장려책 도입 방침/경찰, 음주추적에 불응한 트럭운전사에 공포탄 쏘 검거해/인도-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교전 벌어 <28일(일)>
정부, 김대통령 취임 3돌 맞아 정치인과 시국사범 등 포함된 특별사면 방침밝혀/법무부, 불법체류자 외국인들 보호 시설 부족으로 교도소에 가둬 죄인취급/서울지검, 서울시내 3백14개 학교로부터 문제학생명단 통보받아 특별관리 나서/미국, 한국의 반대 무릅쓰고 대북지원 강행 방침 밝혀/JN, 베트남 난민 본국송환 시한을 6월말로 연장하기로 <해설>-<23일 5.18문제 재수사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 8명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5.18 학살을 지휘한 현직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주 검찰은 강력법의 검거시 총기를 사용하기로 한 이후 벌써 총기남용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문제학생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심지어 서울지검은 문제학생 명단을 특별관리하기로 해 학생들의 인권이 다시 침해받을까 걱정된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감호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 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오후 9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들로서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는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 정권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거나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제적 노동기준에 합치되게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5.18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무런 권한과 선례도 없이 오로지 내란집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들을 강제적으로 합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다음호에 의견서 내용 게재).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개정 논의에 저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개정 논의에 저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비론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30일 '김현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이 없었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순수 자연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었다"며, "한겨레신문이 구체적인 물증과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기사를 실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보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컴퓨터통신 rights(친,하)로!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총열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지난해 11월15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 지난 4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총열(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1차 공판이 3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며 박씨는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에 이어 조성욱 검사는 2시간30분 동안 박씨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조검사는 "피고인의 현재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상형성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며 이미 박씨가 실형까지 산 적이 있는 85년 '반제동맹당 사건'이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박씨와 변호인측은 "이런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2월1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리며,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월분 총목차(556-574호)

Table with columns: 호, 월일, 면, 기사제목. Contains a list of articles from page 556 to 574, including topics like labor laws, human rights, and social issues.

<인권하루소식> 96년 1월분 총목차(556-57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566	1/19	1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재판 연기대
		2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장애우연구소 전국 18개 대학조사에서 밝혀/고난모임, 장기수 자녀에 장학금 전달/행사와 동정
567	1/20	1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 분신대책위원장·유가족등 연행/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고입 선발피해 여학생 학부모, 강력 대응키로
		2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전국연합 광주전남공대위 5.6공 청산 집회, 5.18 특별법 위헌 제정 비난/인권간행물
568	1/23	1	유엔 어린이권리조약 정부 최초보고서 심의,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폐 시사/이덕인책위 답동성당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씨 유가족이 회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 결성/불교인권위 범민련 구속 목사돕기 모금운동/주간인권호름(96년1월15일부터 1월21일까지)
569	1/24	1	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수사결과 비난
		2	<자료>유현석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위원장 분신 원인-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570	1/25	1	5.18 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모아,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제안/5.18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내용
		2	<현장스케치>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4년 시위 정신대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전국연합, 29일부터 북한수재민 성금 모금/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특별법제정 부패척결/민주노총,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571	1/26	1	대법원, 인신구속 신증 기하지 위해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아암도 노점상 삭발 단식농성 5일째, 25일 뇌성마비 장애인 병원 긴급후송/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의견서 제출
		2	<자료>통계청 발표 95년 한국의 사회지표-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행사와 동정
572	1/27	1	허인희씨 2차공판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2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 거부,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인권간행물
573	1/30	1	김시자씨 추모집회 노조 민주화 다짐, 노민주 한전노조 집행부 퇴진·구속자 석방 요구/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전국연합, 1억 목표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법학교수 72명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
		2	<자료> 북한수재동포돕기 성명서-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주간인권호름(96년1월22일부터 1월28일까지)
574	1/31	1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남용말라, 법학교수 72명 의견서 발표-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종렬씨 1차 공판서 조성욱 검사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2	3.96년 1월분 총목차(556-574호)

인권하루소식

96년 2월

(제575호 - 제592호)